

#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2022-11

정책연구

Analysis of Local-Level  
Cultural Policy Projects

노수경  
김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Analysis of Local-Level Cultural Policy Projects

노수경·김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

김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 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의 명칭의 기반이 된 문화 도시(文化都市)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에 ‘문화 도시’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대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해외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특정 분야의 문화 도시의 선정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추진 사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언하여 향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한다.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한 2004년(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점)부터 2022년 현재이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개이며 세부 공간적 범위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둘째, 정책사업 성과와 한계 검토, 셋째 정책 사업 추진 방향 제언 도출이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방법으로 활용한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정책 추진 흐름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 인식과 방향 도출을 위해 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1회 이상 지정된 적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정책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적인 현황과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추진 담당자와 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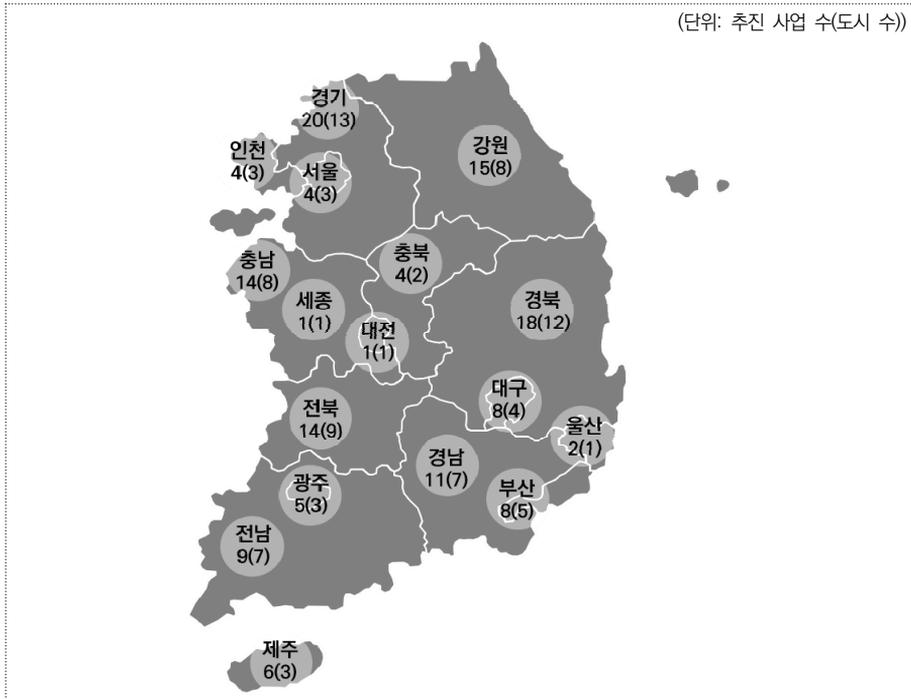
## 2.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가. 중앙정부 지정 사업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문화 도시 정책사업은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중 문화도시 유형과 문화마을 유형,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의 목적은 다르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있으며, 국제적 차원의 문화 도시 사업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있다. 지역에서 추진한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의 현황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그중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 사업(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유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마을 유형,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은 총 133개가 추진되었으며, 86개 지자체(광역+기초)가 지정되었다. 중복 사업의 경우에는 4개 광역지자체와 34개의 기초지자체가 2건 이상 중복 지정(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광역자치단체 기준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추진 현황



주: 중앙정부 지정 사업(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문화마을),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포함한 사업 수(도시 수)임

## 나. 지역단위 문화정책 유형

국내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시의 자원을 기반으로 교류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문화 도시 브랜드형’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추진하여 문화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적 도시개발형’이다.

<표 1> 국내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차원)문화를 통한 지역 특화 발전의 거점 조성, (지역차원)지역경제 발전, 관광진흥,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li> <li>사업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경관 정비, 도시 브랜딩, 문화산업 기반 확충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지원은 지역별로 상이함</li> <li>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조 3천억 원, 부산 영상문화도시: 1,699억 원, 경주 역사문화도시: 3조 3,533억 원, 전주 전통문화도시: 1조 7,109억 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1조 2,577억 원</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한중일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 간 교류와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li> <li>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연대감을 형성하여 문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폐막식 행사의 경우 문체부 확보 예산 및 지자체 확보 예산으로 진행</li> <li>한중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부담, 문체부 예산 일부 사업 지원</li> <li>문체부 지원예산은 지자체 경상보조 6억 원, 민간 경상보조 5억 원(당해연도 3억, 2년차 1억, 3년차 1억)</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li> <li>인프라 구축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지원</li> <li>사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형과 주민협업체를 통한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마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도시형: 5년 간 7.5억 원(국비 3억, 지방비 4.5억)</li> <li>문화마을형: 3년 간 2억 원(국비 0.8억, 지방비 1.2억)</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도시 개발의 한계에 따라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됨</li> <li>도시의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원도심 혹은 인접지의 공공공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2018년): 1개소 당 최대 1.6억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li> <li>2019년 사업: 신규사업은 6억 원 내외(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연속사업은 5억 원 내외(국비 2억 5천만 원, 지방비 2억 5천만 원)</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추구함</li> <li>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를 목표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간 최대 200억 원 지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 다. 국외 사업 유형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의 현황은 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몇 년을 주기로, 몇 개의 도시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인지가 드러난다. 대체로 문화 도시 브랜드형 사업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이틀의 무게를 강화하는데 이는 도시 간 경쟁에 의해 대표 도시를 뽑는다는 인식으로 관광효과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 부가적인 이익 창출을 유도하게 한다.

〈표 2〉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유럽문화수도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이 더 친밀감을 가지고 공통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추진</li> <li>도시재생,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증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 관광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위원회로부터 사업기간 중 도시 당 최고 150만 유로(약 20억)까지 재정 지원</li> <li>EU펀딩 프로그램 추가 보조금 가능</li> <li>사업추진 국가 및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및 민간기업 후원금 활용</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Creative Cities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 간 국제협력 강화</li> <li>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회원도시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 고무·향상</li> <li>문화 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의 창조, 생산, 분배 확산 강화</li> <li>창의도시 간 경험 지식, 모범사례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없음</li> <li>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성과 관리 및 사업 개발,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지자체)의 자체 사업예산 활용</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영국 문화도시 (UK City of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도시의) 문화 주도 재생에 대한 비전 제시</li> <li>문화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li> <li>4년에 한 번 지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4단계의 지정단계 중 2단계에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부터 '전체 지원서 강화'를 목적으로 4만 파운드(약 6천 3백만 원) 보조금 수령</li> <li>4단계까지 통과한 도시는 '문화도시'로의 타이틀 수여</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일부혼합)
이탈리아 문화수도 (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적 제안의 진보, 사회적 포용의 성장 및 문화격차의 극복</li> <li>사회적 포용 및 통합의 강화와 대중 참여의 발전</li> <li>관광객 유입 발전과 문화명소 강화</li> <li>젊은 세대의 참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li> <li>문화 및 창조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촉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도시는 6년 간 각 100만 유로(약 13억 원) 지원<sup>1)</sup></li> <li>매년 심사하지만 지정도시가 없을 수 있음</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1) 출처 : 이탈리아 하원 홈페이지 ([https://temi.camera.it/leg17/temi/le\\_capitali\\_della\\_cultura](https://temi.camera.it/leg17/temi/le_capitali_della_cult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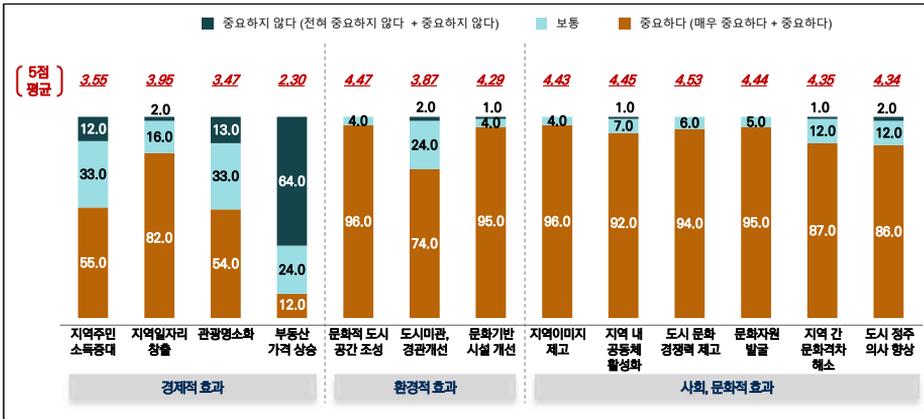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프랑스 문화수도 (Capitale Francaise de la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도시 혹은 소규모 도시인 인구 2만~10만 명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을 대상으로 실시, 2년에 한 번 지정</li> <li>창작지원, 문화유산 강화, 문화예술 전승, 지역주민 참여, 지역 예술가 및 문화인의 참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에 대한 문화의 기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원 보조금은 2년에 걸쳐 500,000유로(약 7억 원) 지원</li> <li>동시에 공공운용기금에서 500,000유로(약 7억 원)가 2년에 걸쳐 지원, 이는 국가지원 보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음</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 3. 정책 의견 조사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기 추진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도출하고 지역 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하여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설문 대상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구 수행, 사업평가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며 총 100명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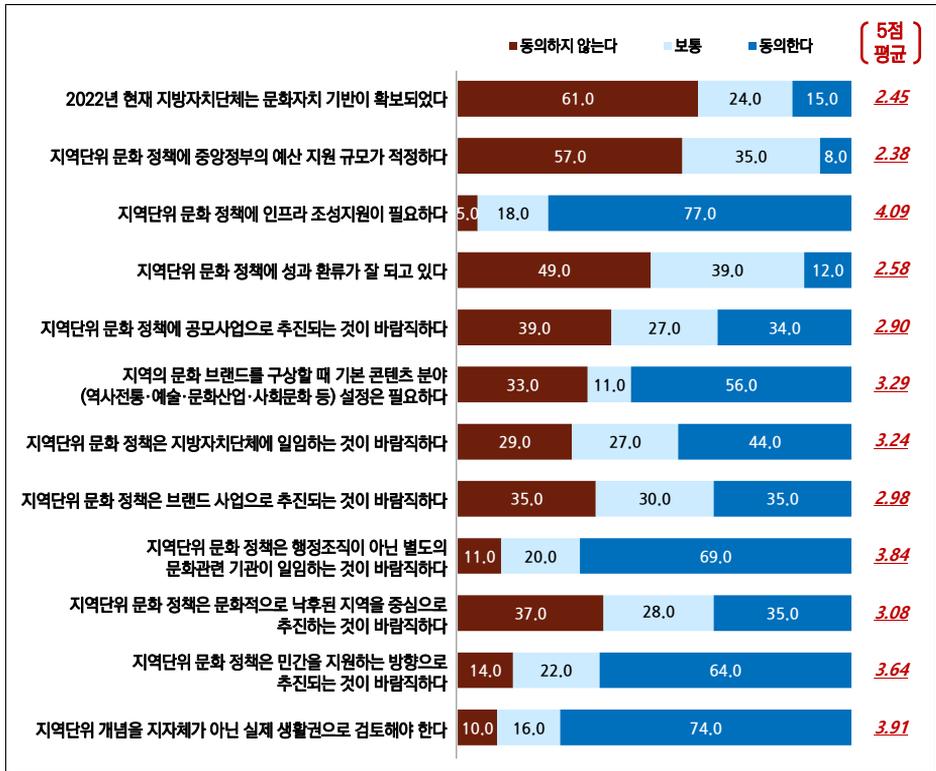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에서 상위권 응답의 대부분은 사회문화적 효과 영역에 해당되며, 경제적 효과 영역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효과 부문에서는 문화적 도시 공간 조성, 문화기반 시설 개선이 중요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지역단위 문화 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종합)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의견에서 가장 높은 의견을 차지한 것은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였으며 그 뒤를 이어 ‘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해야 한다’와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행정조직이 아닌 별도의 문화 관련 기관이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뒤를 이었다.

[그림 3]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 4.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재구성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문화 도시의 육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도시가 ‘문화 도시’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도시의 규모, 특징에 따라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될 것이다. 2022년 현재 전문가 및 관련 사업 실무자들은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새로운 키워드로 ‘균형발전’, ‘지역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자생기반 마련’, ‘구체적 목표’를 꼽는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지역이 문화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가 함께 이루는 문화 도시 육성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목표는 이에 근거하여 중앙의 목표, 광역 지자체의 목표, 기초 지자체의 목표 등이 하위로 생산되는 구조로 구상할 수 있다.

〈표 3〉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키워드 및 주요 내용

개념 키워드	주요 내용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간의 문화기반,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li> </ul>
지역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li> </ul>
중앙과 지방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간의 역할과 사업 책임의 분담</li> <li>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검토로 정책 효과 제고 방안 도출</li> </ul>
자생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담보</li> </ul>
구체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도출, 환류 체계의 명확성 확보</li> </ul>

## 5.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방향성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 요약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방향성 요약

방향성	주요 내용
브랜드화 및 개발형 등 정책 목표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다양화로 세부 목적 수립 추진을 위한 방안을 확보</li> <li>해당 장소가 갖는 특징을 파악하여 중앙정부는 지역 단위별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추진</li> </ul>
공간의 범위에 따른 정책 방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지원의 대상변화</li> <li>도시가 선택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자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li> </ul>
문화 클러스터와 문화 도시 간의 차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적 도시재생의 관점과 생활권 개념으로 접근</li> <li>유희공간 활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 ‘문화 클러스터’ 검토</li> </ul>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다양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목표를 브랜드 또는 환경의 개선인지에 대한 선택 혹은 동시 추진에 대한 검토</li> </ul>
지역단위 문화정책 세부 사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 20년 동안 논의되고 지속되어 온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연계성 강화</li> </ul>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b>제2장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b> .....	<b>9</b>
제1절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현황	11
1. 중앙정부 정책 추진 흐름	11
2. 중앙정부 지정 사업 추진 현황	35
3. 사업 추진 사례 분석	43
제2절 지역단위 정책 사업 특성 분석	49
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재정 분석	49
2. 지역 문화재정 정책 현황 및 전망	54
3. 정책사업 추진 유형 검토	62
제3절 지역단위 문화정책 종합분석	68
1. 정책 인식 및 목표	68
2. 정책사업 기반 및 핵심 자원	73

<b>제3장 국내외 유사 정책 및 사업 분석 .....</b>	<b>81</b>
제1절 국내 유관 정책 및 현황	83
1. 타 부처 사업	83
2. 지방정부 자체 사업 추진 현황	89
3. 기타 정책 연계 사례	98
제2절 국외 유사 정책 및 사업 현황	105
1. 국제사회 흐름	105
2. 국제기구 및 국가별 현황	107
3. 국외 사업 유형 검토	117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120
1. 분석결과	120
2. 시사점	121
<b>제4장 관계자 및 전문가 정책 의견 조사 .....</b>	<b>123</b>
제1절 조사개요	125
1. 조사 목적 및 방법	125
2. 응답자 특성	126
제2절 조사결과	128
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필요성	128
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식 및 성과	145
3. 정책사업의 지향 방향성	155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160
1. 조사 결과 요약	160
2. 개방형 의견 요약	163
3. 시사점	168
<b>제5장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선 방향 .....</b>	<b>173</b>
제1절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 재구조화	175
1.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재구성	175
2.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방향성	179

제2절 정책 추진의 효율화 제언	186
1. 정책 추진 고려사항	186
2. 중앙정부의 역할	190
3. 지방정부의 역할	192
4. 민간의 역할	194
<b>제6장 결론</b> .....	<b>199</b>
제1절 연구 결과	201
제2절 향후과제	202
1. 연구 한계	202
2. 향후 과제	203
<b>참고문헌 / 205</b>	
<b>ABSTRACT / 213</b>	
<b>부록1 전문가 의견조사지 양식 / 217</b>	
<b>부록2 설문조사 결과 / 222</b>	

---

# 표 목차

〈표 1-1〉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회의 추진 개요	7
〈표 2-1〉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별 비전 및 목표	12
〈표 2-2〉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단계	14
〈표 2-3〉 부산영상문화도시 6대 실행전략 및 주요 사업	15
〈표 2-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단계	17
〈표 2-5〉 전주전통문화도시의 주요 사업	18
〈표 2-6〉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현황	21
〈표 2-7〉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사업	21
〈표 2-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사업 유형 구분	23
〈표 2-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연도별 선정지역 및 지원규모(2014~2019년)	24
〈표 2-10〉 문화적 도시재생 선정지역(2018~2019년)	27
〈표 2-11〉 문화도시 지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	32
〈표 2-12〉 법정 문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명	33
〈표 2-13〉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명	33
〈표 2-14〉 법정 문화도시의 타 문화도시 사업 추진 여부	34
〈표 2-15〉 지역별 문화정책 사업 지정 사업 및 지자체 수	37
〈표 2-16〉 서울특별시 사업 추진 현황	38
〈표 2-17〉 부산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38
〈표 2-18〉 인천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39
〈표 2-19〉 대구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39
〈표 2-20〉 대전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39
〈표 2-21〉 광주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39
〈표 2-22〉 울산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39
〈표 2-23〉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추진 현황	39
〈표 2-24〉 경기도 사업 추진 현황	40
〈표 2-25〉 강원도 사업 추진 현황	40
〈표 2-26〉 충청북도 사업 추진 현황	40

〈표 2-27〉 충청남도 사업 추진 현황	41
〈표 2-28〉 전라북도 사업 추진 현황	41
〈표 2-29〉 전라남도 사업 추진 현황	41
〈표 2-30〉 경상북도 사업 추진 현황	42
〈표 2-31〉 경상남도 사업 추진 현황	42
〈표 2-3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추진 현황	42
〈표 2-33〉 사업 추진 사례 분석 도시 주요 정보	43
〈표 2-34〉 2016년~2022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자체별 본청 기준 편성 사업 현황	51
〈표 2-35〉 지자체별 본청 기준 문화도시 사업 예산 편성 현황	53
〈표 2-36〉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4
〈표 2-37〉 1단계 전환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56
〈표 2-38〉 행정단위별 사도 자율계정 이양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57
〈표 2-39〉 지역별 사도 자율계정 이양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57
〈표 2-40〉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58
〈표 2-41〉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2022년)	60
〈표 2-4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장·단점	61
〈표 2-43〉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기준	63
〈표 2-44〉 제4차 및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안)	64
〈표 2-45〉 국내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66
〈표 2-46〉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사업 목록	77
〈표 3-1〉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특징	84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 부처 중점 연계사업	85
〈표 3-3〉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선정지역	87
〈표 3-4〉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목표 및 추진과제	90
〈표 3-5〉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3대 전략 및 세부 과제	94
〈표 3-6〉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총괄표(안)	96
〈표 3-7〉 문화영향평가 지표체계	98
〈표 3-8〉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특징	99
〈표 3-9〉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사업(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100
〈표 3-10〉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102
〈표 3-11〉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지역	103
〈표 3-12〉 한국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현황	112
〈표 3-13〉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118

〈표 4-1〉 조사 응답자 현황	126
〈표 4-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	129
〈표 4-3〉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평균요약)(1)	130
〈표 4-4〉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평균요약)(2)	130
〈표 4-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132
〈표 4-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일자리 창출)	132
〈표 4-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133
〈표 4-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135
〈표 4-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136
〈표 4-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137
〈표 4-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138
〈표 4-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139
〈표 4-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140
〈표 4-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41
〈표 4-1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42
〈표 4-1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143
〈표 4-1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144
〈표 4-1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평균 요약)	146
〈표 4-19〉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평균 요약)	147
〈표 4-2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방향성(1순위)	156
〈표 4-2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관련 주요 의견 요약	163
〈표 4-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방향 의견	165
〈표 5-1〉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키워드 및 주요 내용	177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8
[그림 2-1]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12
[그림 2-2]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6
[그림 2-3]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7
[그림 2-4]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9
[그림 2-5]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7 개막식(제주)	20
[그림 2-6] 한중일 청년예술가 창작 협업 사업	20
[그림 2-7]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26
[그림 2-8] 문화적 도시재생 선정 현황	28
[그림 2-9] 법정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30
[그림 2-10]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자정분야 및 사업유형 구성	31
[그림 2-11] 광역자치단체 기준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추진 현황	35
[그림 2-12]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비전(2017년)	44
[그림 2-14] 문화도시 원주 사업 비전(2021년)	44
[그림 2-13] 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비전(2019년)	44
[그림 2-15] 문화도시 부천 운영 3대 원칙 및 시민권리	46
[그림 2-16] 문화도시 김해 비전 및 목표·과제	47
[그림 2-17] 문화도시 청주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48
[그림 2-18] 문화도시 가치 및 브랜드 효용 극대화방안 구조 제안도	71
[그림 2-19]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목적	74
[그림 2-20] 청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망 계획도	74
[그림 2-21] 청주 문화도시센터 위치도 및 인근 클러스터 현황	79
[그림 3-1]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목표	87
[그림 3-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89
[그림 3-3] 2022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비전 및 전략	93
[그림 3-4] 정신문화 중심도시의 조성 비전	95
[그림 3-5]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체계	104

[그림 3-6] 2016 유럽문화수도 산 세바스티안	109
[그림 3-7] 2016 유럽문화수도 발레타	109
[그림 3-8] 유네스코 네트워크 연례회의	111
[그림 3-9]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서브네트워크 회의	111
[그림 3-10] 2013 영국 문화도시 데리-런던데리	115
[그림 3-11] 2017 영국 문화도시 헐	115
[그림 3-12] 2022 프랑스 문화수도 빌리르반 개막식	117
[그림 3-13] 빌리르반 문화유산 산책로 목록	117
[그림 4-1]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순위	128
[그림 4-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131
[그림 4-3]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지역일자리 창출)	132
[그림 4-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133
[그림 4-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134
[그림 4-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136
[그림 4-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137
[그림 4-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138
[그림 4-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139
[그림 4-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140
[그림 4-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41
[그림 4-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자원 발굴)	142
[그림 4-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143
[그림 4-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144
[그림 4-15] 문화지구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48
[그림 4-16] 지역거점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49
[그림 4-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50
[그림 4-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51
[그림 4-19] 법정 문화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52
[그림 4-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53
[그림 4-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인지도 및 효과성	154
[그림 4-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방향성	155
[그림 4-23]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	157
[그림 4-24] 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	158
[그림 4-25]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조직,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으로 일임	158

[그림 4-26]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159
[그림 4-27]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 시 기본 콘텐츠 분야 설정	159
[그림 4-2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160
[그림 4-2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종합)	161
[그림 4-3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162
[그림 4-3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결과	168
[그림 4-32]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이 필요하다”의 응답 현황	169
[그림 5-1] 도시제반 환경 수준에 따른 정책목표 구분(안)	180
[그림 5-2]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응답 현황	187
[그림 5-3] “202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치 기반이 확보되었다”의 응답 현황	190
[그림 5-4]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대한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다”의 응답 현황	191
[그림 5-5] 오노미치U2	195
[그림 5-6] 민간운영주체 :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사무실	195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 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의 명칭의 기반이 된 문화 도시(文化都市)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의미하며, 영문으로는 ‘Cultural City’로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문화 도시’는 사전적인 의미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적 기반과 활동이 우수한 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부정책 상의 다양한 문화도시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으로 정의하고 정책 사업의 추진과 방향 등을 논한다.

지역단위의 문화 정책 사업의 지속적 목표였던 ‘문화 도시(Cultural City)’ 조성은 새로운 경제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도시 철학으로 부각되며 사회 전반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2)</sup>. 도시정책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창조성과 혁신, 사회통합의 방법과 신뢰의 구축, 효율성과 형평성의 고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있다<sup>3)</sup>. 세계의 도시들은 산업혁명 이후 문화, 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창조도시(Creative City), 문화적 도시재생(Cultural regeneration), 문화 도시(Cultural City)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학계를 시작으로 ‘문화 도시’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구(District) 개념의 문화 구역에 대한 정책이 나타났다.

국내에서 ‘문화지구’, ‘예술지구’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

---

2) 유승호(2020),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gasse·아카데미, 101쪽

3) 박은실(2018), 『문화예술과 도시 시대적 변화와 실천적 담론』, 정한책방, 34쪽

하였으나 당시 이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됐다<sup>4)</sup>.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문화예술자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지구의 개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이 집적된 일종의 문화 특화 지역으로 확장<sup>5)</sup>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에 반영되었다. 2004년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에 ‘문화 도시’라는 명칭이 나타난 것이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대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해외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특정 분야의 문화 도시의 선정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사업 수는 133개<sup>6)</sup>다. 이 중 중복 지정된 도시 47개를 제외하면 총 86개 도시가 소위 ‘문화 도시’로 지정됐다. 여기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11개)된 도시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문화 도시’라 불리는 곳은 97개에 이른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43개임을 감안하여 단순 계산으로 국토의 39.9%가 문화 도시로 불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가 가진 문화 자원과 창의성은 다르기에,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든 도시가 문화 도시로서 기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정부 정책으로 문화 도시 지정을 다양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특히 유사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우려와 명칭의 다양화가 사업 성격의 다양화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이 모호하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다<sup>7)</sup>는 지적이 있다. 또한 도시간의 지나친 경쟁을 일으키는 사업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다양성 역시 저하되며<sup>8)</sup> 용역 업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재원도 인건비에 과다 투입되어 당초 사업 목적이 변질<sup>9)</sup>된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도시의 문화적 자원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

4) 임학순(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4쪽  
 5) 김연진(2011),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쪽  
 6)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문화마을),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추진한 사업 수의 합임  
 7) 경주신문(2021.05.27.), “이름만 바꾼 문화도시 정책들, 효과 있을까?”  
 8) 국회사무처(2021.10.01.), ‘2021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9) 매일신문(2022.1.23.), “‘배보다 큰 배꼽’ 대구경북 문화도시 조성 잇단 고배”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일부 지방이양되기도 하였다.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된 정책은 사업의 목표와 투입 대비 성과 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 흐름에 맞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이 이뤄진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사업들이 어떻게 지속성을 담보할 것인지 혹은 중복성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으로 확보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충당되는 문제로 중복사업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검토의 필요성<sup>10)</sup>이 언급되고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앙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전반을 훑어본다.

세부 연구 목적은 첫째,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추진 사업의 흐름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언하여 향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한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 정부가 추진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모니터링이다. 지난 약 20년 간 추진해 온 문화 도시 정책 사업들의 목적과 내용, 지정 도시 현황 등을 검토하여 시기별 사업의 특징을 종합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참여 및 지정 현황을 정리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사업 중심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문화 도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각 사업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지녔는지 검토하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이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정부의 정책 사업 참여 현황과 목적,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책사업 참여 이유와 사업 효과성을 도출한다. 셋째,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제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지향 목적과 방향성 도출을 통해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단위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1.10.07.), “[분권레터]재정분권으로 확보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한 2004년(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점)부터 2022년 현재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다만,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과 관련 혹은 연계된 국내외 사례나 정책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04년 이전 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개이며 세부 공간적 범위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다.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의 사례와 해외 문화 도시 네트워크 등에 국내 지자체가 가입 된 경우 등이 있어 일부 국외 도시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는 국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국외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둘째, 정책사업 성과와 한계 검토, 셋째 정책 사업 추진 방향 제언 도출이다.

### 2. 연구 방법

#### 가. 문헌분석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정책 추진 흐름을 분석한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정책의 가이드라인, 계획 보고, 완료보고 자료 등을 검토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추진 현황검토를 위해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문화 도시 사업에 지정된 도시들의 재정 소요 현황을 분석한다.

## 나. 설문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1회 이상 지정된 적이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정책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 문화재단·문화도시추진센터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담당자, 지역단위 문화정책(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사업 등) 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지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간의 차별점, 도시가 ‘문화 도시’로서 가져야하는 주요 정체성,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지정제도의 효과성 및 기대 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역할 분담 방안 등이다.

## 다.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회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추진 담당자와 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인터뷰는 문헌분석으로 도출에 한계가 있는 세부 지자체 별 정책 사업 목표, 기대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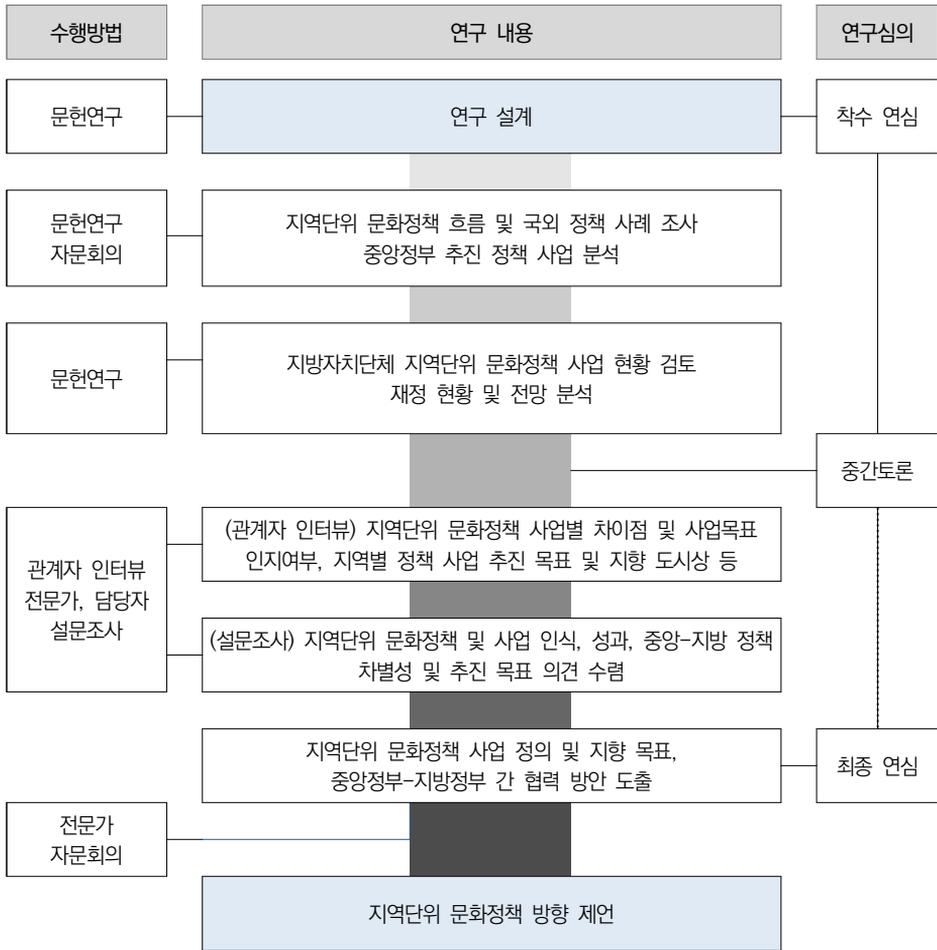
자문회의는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행정, 재정 등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표 1-1〉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회의 추진 개요

일자	인터뷰 대상자	자문 주제 요약
2022.2.18.	지역연구원 연구자 2인 문화콘텐츠학 교수	지방이양 도시문화 정책 이슈 자문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향후 새정부 아젠다 예측
2022.6.8.	지역문화재단 팀장	지역 문화 도시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2022.6.22.	지자체 공무원 문화콘텐츠학 교수	지역단위 문화정책으로의 성장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2022.6.22.	지역 문화도시센터 근무자 2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2022.7.8.	지자체 공무원	도시 내 통합 문화정책계획 수립 현황 및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 방향
2022.7.20.	국토분야 연구자 문화콘텐츠학 교수 미술사학 교수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방향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방향
2022.7.27.	행정분야 연구자	지역문화 재정 지원의 타당성 및 향후 예측
2022.8.2.	지자체 공무원 2인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행정-민간-매개인력 간 협력방안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

일자	인터뷰 대상자	자문 주제 요약
2022.8.2.	지역 문화도시센터 근무자 2인	지방이양정책사업과 법정 공모사업의 연계 추진 사업 현황
2022.8.9.	지역 문화재단 근무자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도시이미지 변화 영향
2022.9.28.	문화기획자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소관기관 담당자	지역단위 문화정책 방향성 검토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제2장

##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제1절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현황

---

## 1. 중앙정부 정책 추진 흐름

### 가.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 1) 추진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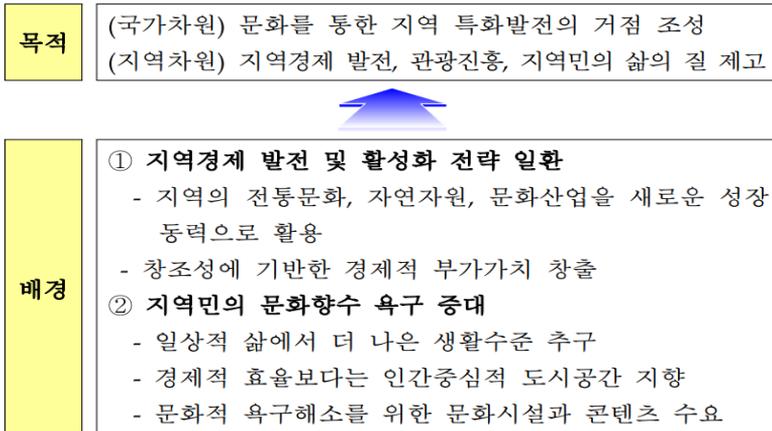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광주 문화수도 육성' 선거공약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함과 동시에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전략 일환'과 '지역민의 문화향수 욕구 증대'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 특화발전의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지역경제 발전, 관광진흥,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sup>11)</sup>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에 따라 광주에서는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과 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산 영상문화도시(2004~2011년), 경주 역사문화도시(2006~2035년), 전주 전통문화도시(2007~2026년),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2009~2030년) 사업이 차례로 추진되었다.

---

11)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지역발전위원회 보고자료(2009.10.29.), [http://17region.pa.go.kr/pds/info\\_read.php?mode=search&search\\_val=title\\_content&search\\_str=%B9%AE%C8%AD&x=16&y=15&page=4&b\\_id=2553&kind=1](http://17region.pa.go.kr/pds/info_read.php?mode=search&search_val=title_content&search_str=%B9%AE%C8%AD&x=16&y=15&page=4&b_id=2553&kind=1)

[그림 2-1]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지역발전위원회 보고자료(2009.10.29.)

## 2) 사업 내용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만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수립된 계획의 경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2007년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1차 수정계획(2013), 2차 수정계획(2018), 3차 수정계획(2022)이 수립되었으며, 부산 영상문화도시는 2005년 종합계획을 발표, 경주, 전주, 공주·부여는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표 2-1〉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별 비전 및 목표

구분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추진전략
광주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문화교류도시</li> <li>• 아시아 평화예술도시</li> <li>• 아시아 문화경제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li> <li>-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문화권 조성, 문화도시 기반 조성)</li> <li>-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예술의 진흥, 문화산업 5대 콘텐츠 집중 육성, 관광의 활성화)</li> <li>-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인력양성 및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조성, 문화교류의 다변화 및 활성화)</li> </ul>
부산	아시아 영상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지역의 혁신체계 구축</li> <li>•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li> <li>• 시민의 문화향유권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육성 및 유치전략</li> <li>- 기초 인프라 강화전략</li> <li>- 네트워크 강화전략</li> <li>- 국제화 전략</li> <li>- 인력양성 전략</li> </ul>

구분	비전	목표	추진 과제 / 추진전략
경주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	•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	- 문화유산 발굴·복원 - 문화유산 환경정비
		• 가보고 싶은 경주	- 문화산업 기반 확충 - 관광활성화 기반 확충
		• 살고 싶은 경주	- 도시기반 정비 - 문화기반 육성
전주	세계화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 전통문화 생활도시	-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 - 천년 문화유산의 계승 - 민관 지역문화 역량 강화
		• 전통문화 창조도시	- 한브랜드 허브도시 조성 - 아·태 무형문화 거점 도시 - 문화상품 개발 전진기지
		• 전통문화 체험도시	- 전주 한옥마을 브랜드화 - 전통문화 아카데미 - 맛과 멋의 체험 일체화
광주·부여	2030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광주	•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 유적의 체계적 조사·발굴·복원 - 유적지 주변환경 정비
		•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 관광거점 조성 및 인프라 확충 - 연구·산업·인적 기반 구축 - 협력적 지역역량 강화
		• 도시이미지 창출 및 쾌적성 제고	-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11쪽.  
 김준섭(2006), 「영상문화도시 부산 조성방안」, 『부산발전포럼』, 19쪽.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580-582쪽.

### 3) 지원 현황

#### 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광주 문화수도 육성이 발표된 이후 2004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추진 기획단이 발족되고,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의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로 나타난다.<sup>12)</sup> 조성사업의 경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주요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의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sup>13)</sup>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변화된 환경 반영 및 광주시 도시계획과의 연계’, ‘5대 문화권으로의 개편, 핵심사업 추진’, ‘도시 전체에 문화적 환경 조성’, ‘사업의 현실성과 실행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5대 문화권 사업 추진은 ① 문화전당·교류권, ② 융합문화과학권, ③ 아시아공동체문화권, ④ 미래교육문화권, ⑤ 시각미디어문화권으로 지역을 나누어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sup>14)</sup>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의 세부 사업으로는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사업과,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아시아 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등의 문화산업 분야,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 복합관 건립, 아시아 음식관광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의 관광 분야 사업이 있다.<sup>15)</sup>

사업 기간은 2004년에서 2023년까지로 총 20년을 계획했으나 2021년 「아시아중심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총25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경우 5조 3천억 원으로 국비 2조 8천억 원(53%), 지방비 8천억 원(15%), 민자 1조 7천억 원(32%)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다.<sup>16)</sup>

〈표 2-2〉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단계

1단계 (2004~2014년)	기반조성단계 '전당건립 및 사업추진'	- 문화전당 건립 완공 - 전당 콘텐츠 개발·제작 - 신규사업 발굴·추진
2단계 (2015~2021년)	사업추진단계 '본격 투자확대 및 내실화'	- 문화전당 운영활성화 및 내실화 - 5대문화권 조성사업 등 문화도시 기반조성 - 문화교류 활성화
3단계 (2022~2025년)	사업정착단계 '운영정착 및 사업고도화'	- 문화전당 운영 정착 및 고도화 - 5대문화권 특성화 및 연계강화 - 국제교류 다각화 및 교류 증진 - 문화도시브랜드 구축 정착
4단계 (2026~2028년)	사업확산단계 '국내·외 문화거점 확산'	- 문화전당 글로벌 문화기관으로 도약 - 5대문화권 조성사업 완성 및 지속·확산 - 국제적 문화도시 위상 정립 - 창의융합 문화거점도시 완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128쪽.

13)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31~50쪽.

14)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36쪽.

15)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43~45쪽.

16)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지역발전위원회 보고자료(2009.10.29.)

② 부산영상문화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부산 내 기존 영상문화 인프라와 부산영상센터, 영상후반작업기지 등의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하여 영상문화산업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전략은 3개 기본 전략과 6대 실행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기본전략은 ABC 전략으로 Asia(아시아 시장을 지향), Both(산업과 문화의 동시 육성), Cluster(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이며, 6대 실행전략은 기업유치 및 유치전략, 인프라, 네트워크, 국제화 강화, 인력양성, 관광산업으로 총 44개의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sup>17)</sup>

〈표 2-3〉 부산영상문화도시 6대 실행전략 및 주요 사업

실행전략	세부사업	
기업유치 및 육성 전략	영화영상진흥기금 확충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금 확충
	영상콘텐츠 투자조합 설립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구축
	스타프로젝트 실시	성공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집중 지원
	기업유치활동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업 유치 등
	영상업체 멘토링	역내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기초 인프라 강화 전략	부산영상센터 건립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
	영화후반작업시설 건립	영화산업 원스톱서비스 구축
	영상체험박물관 건립	부산의 영상도시 이미지 제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분산된 기업 및 지원기관의 집적
	부산영화종합촬영소 건립	영진위 이전사업으로 문화클러스터 조성
	C-스튜디오 건립	현행 A,B 스튜디오의 대형스튜디오 건립
	부산게임월드 건립	게임사업 창업공간, 쇼핑몰, 게임장 등
아시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아시아 영상투자·거래, 교류의 중심지	
네트워크 강화전략	영상산업포럼 구성	구성 주체간 협의체 구성
	부산영상넷 구축	관련 DB의 구축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국제화 전략	캐치업 프로젝트	산업 종사자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국제영상박람회 개최	아시아필름마켓과 방송마켓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
인력양성전략	부산게임아카데미 활성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지원
	부산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	핵심연구인력 양성
	영화아카데미 연계 교육	지역대학과 한국영화아카데미와의 연계
문화관광산업 육성 전략	영상빌리지 조성	영화인 숙소 등 주거지 개발
	한류타운 조성	한류를 테마로 공간을 구성하여, 상권 형성
	영화관광 육성	영화와 연계한 관광특화 상품 개발

자료: 김준섭(2006), 「영상문화도시 부산 조성방안」, 『부산발전포럼』, 19~21쪽.

17) 김준섭(2006), 「영상문화도시 부산 조성방안」, 『부산발전포럼』, 17쪽.

총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8년이며, 총사업비는 1,699억 원으로(국비 609억(36%) 지방비 674억(40%), 민자 416억(24%)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다.<sup>18)</sup>

### ③ 경주 역사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는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 ‘가보고 싶은 경주’, ‘살고 싶은 경주’를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다.<sup>19)</sup> 또한 문화도시 발굴·복원, 문화유산 환경정비, 문화산업 기반 확충, 관광활성화 기반 확충, 도시기반 정비, 문화기반 육성의 여섯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585쪽.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06~2035년으로 총 30년이 소요되며, 총사업비는 3조 3,533억 원(국비: 1조 7,662억(53%), 지방비: 1조 1,799억(35%), 민자: 4,072억(12%))이다.<sup>20)</sup>

18)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지역발전위원회 보고자료(2009.10.29.)

1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3.26.),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참고자료

20) 문화체육관광부(2017),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31쪽.

〈표 2-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단계

1단계 (2006~2010)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신라왕궁 복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종교 유적지 조성, 신라 탐방길 조성 등 선도사업 추진
2단계 (2011~2020)	- 1단계 선도사업 지속 추진 -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로 일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3단계 (2021~2030)	- 10년간 다양한 역사체험, 문화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각종 인프라와 연계 개발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
4단계 (2031~2035)	- 5년간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가 새롭게 완성되는 시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584쪽.

#### ④ 전주 전통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는 비전과 ‘전통문화 생활도시’, ‘전통문화 창조도시’, ‘전통문화 체험도시’를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sup>21)</sup> 핵심 선도사업으로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과 한옥마을 체험 콘텐츠 확충 그리고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을 국고 지원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의도시 및 슬로시티 기반 구축, 한국 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sup>22)</sup>

[그림 2-3]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586쪽.

2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3.26.),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다” 참고자료

22)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190쪽.

본 사업의 추진 기간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년이며, 한식, 한옥, 한지, 판소리와 같은 전통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65개 사업에 1조 7,109억 원(국비 4,112억(24%), 지방비 9,333억(55%), 민자 3,564억(21%))이 투입된다.<sup>23)</sup>

〈표 2-5〉 전주전통문화도시의 주요 사업

핵심선도사업군	세부사업
한스타일 진흥사업	한 스타일진흥원(현 한국전통문화전당) 건립사업
	한국 음식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한지 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건립사업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 유치사업
	(한옥마을~무형문화유산의전당 간) 전통가교 설치사업
전통문화 체험·교육사업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한옥마을 전통문화콘텐츠 확충사업 : 전통한옥, 부채, 소리, 완판본, 서화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전통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사업	한옥마을 전통문화 경관개선사업
	향교 문화광장 조성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191쪽.

#### 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는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업 목표로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도시이미지 창출 및 쾌적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sup>24)</sup>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총 22년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5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조 2,577억 원(국비 4,001억(32%), 지방비 5,019억(40%), 민자 3,557억(28%))이 투입된다.<sup>25)</sup>

23) 문화체육관광부(2017),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31쪽.

2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3.26.),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참고자료

25) 문화체육관광부(2017),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31쪽.

[그림 2-4]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587쪽.

선도사업으로 공주의 ‘무령왕릉 길 조성’ 사업과 부여의 ‘주작대로 정비’,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정비’, 부여 ‘성왕로 경관정비’가 추진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공주의 공산성 환경정비지구 및 고나마루 역사환경지구 정비, 백제역사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등과 부여의 사비고도 공간 회복사업 등이 있다.<sup>26)</sup>

## 나. 동아시아 문화도시

### 1) 추진 배경 및 목적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 간 교류와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럽문화수도과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 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연대감을 형성하여 문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활동할 도시를 각국에서 선정하여 총 3개 도시(2021년부터 4개 도시)가 한 해 동안 문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교류 활동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26)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191~192쪽.

[그림 2-5]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7 개막식(제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주 백서」

[그림 2-6] 한중일 청년예술가 창작 협업 사업



자료: 대구광역시(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대구 백서」

## 2) 사업 내용

국가 간 문화교류 실적과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및 지역문화발전계획, 관련프로그램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기준으로 도시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는 개·폐막식 문화행사와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체부가 후보도시를 선정하고 3국간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며, 선정도시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사무국을 설치하여 인력 및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sup>27)</sup>

사업예산은 개·폐막식 행사 예산의 경우 문체부 확보 예산과 지자체 확보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교류 사업예산은 지자체 자체 예산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일부 사업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된다. 당해 선정도시 간의 문화교류 사업예산은 선정도시의 사무국 상호 협의의 하에 결정된다. 평균적인 문체부의 지원예산은 지자체 경상보조 6억과 민간 경상보조 5억(당해연도 3억, 2년 차 1억, 3년 차 1억)이다.<sup>28)</sup>

## 3) 지원 현황

2014년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3개 도시 선정이 지속되다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고, 2021년부터는 한·일 각 1개 도시와 중국 2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한국의 선정도시를 살펴보면 광주(2014), 청주(2015), 제주(2016), 대구(2017), 부산(2018), 인천(2019), 순천(2021), 경주(2022), 전주(2023)가 선정되었다. 그중 제주와 인천에서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2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0.25.), “한국을 대표해 동아시아문화를 이어갈 도시를 찾습니다”

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0.25.), “한국을 대표해 동아시아문화를 이어갈 도시를 찾습니다”

〈표 2-6〉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현황

연도	한국	일본	중국
2014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2015	청주	니가타	칭다오
2016	제주	나라	닝보
2017	대구	교토	창사
2018	부산	가나자와	하얼빈
2019	인천	도쿄 도시마구	시안
2020	-	-	-
2021	순천	기타큐슈	사오싱·둔황
2022	경주	오이타현	원저우·지난

주: 진한 글씨체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장소임

각 도시에서 개막 행사와 폐막행사를 개최하고,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각 행사에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가하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타 국가의 도시와 문화적 교류 활동을 하는 행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

〈표 2-7〉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사업

구분	사업 내용
제주 주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도시)	개막 행사
	제2차 한중일 실무협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실무책임 담당관 회의
	컬쳐 리포터 & 다국어 채널 운영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1기 청소년 문화캠프
	2016 제주관악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공연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및 한중일 예술제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시도지사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달 선포식과 네트워크 만찬
	컬쳐디자이너 아시아페어
	탐라문화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공연
	월드뮤직 제주 오름 페스티벌
	제주아트페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전
	청주 첫가락페스티벌 교류 공연
	제주영화제 동아시아문화도시 스페셜 파노라마
	한중일 인문학콘서트
폐막 행사	
닝보 주최	개막 행사
	제1차 한중일 실무협의
	국제 아마추어테니스 초청대회
	한중일 서복문화 상산 세미나

구분	사업 내용
	한중일 청년 문화교류
	한중일 아마추어 바둑교류 대회
	'나는 어린 화가' 2016 한중일 어린이 미술창의 전시회
	한중일 예술제
	폐막 행사
나라 주최	개막 행사
	헤이조교 텐표사이
	대학생 서예 교류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나라시 기획발표회
	고등학생 사진 교류
	코어 기간 '고도 축 나라-시공을 초월한 예술축제' 개최식
	카노가노음악제
	폐막 행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주 백서」

## 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1) 추진 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108번에 해당하는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국정과제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포함하고 있다.<sup>29)</sup>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후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델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 문화도시와 공주 상신리 문화마을, 부여 규암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2014년 7월 시행될 「지역문화진흥법」과 함께 본격적인 문화도시 및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하였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건립, 경관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 최소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지원 강화'를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sup>30)</sup>

29) 관계부처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쪽.

3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현황」, 1쪽.

## 2)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지역의 특징에 따라 문화도시와 문화마을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이 대상이 되며, 문화마을은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이 대상이 된다.

〈표 2-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사업 유형 구분

구분	문화도시형	문화마을형
지원대상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지원예산	1개 도시당 7.5억 원 * 국비 3억, 지방비 4.5억	1개 마을당 2억 원 * 국비 0.8억, 지방비 1.2억
지원기간	5년	3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 사업 및 전문가 문화기획 프로그램</li> <li>• 도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휴먼웨어 네트워크, 문화기관 네트워크)</li> <li>• 도시 문화허브 활성화 사업(문화거점)</li> <li>•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사업</li> <li>• 도시재생 및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li> <li>• 도시 문화브랜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li> <li>• 마을 축제 운영 및 관리</li> <li>• 마을 가치자산 활성화 프로그램 (역사·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li> <li>•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li> <li>•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 사업</li> <li>• 지역단위 마을문화 교류활동</li> </ul>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현황」, 1쪽.

추진체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선정하고, 사업 기획과 컨설팅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지원과 주민협의체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기획가와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이 사업추진의 주체로 사업을 주도한다.

## 3) 지원 현황

남원 문화도시와 공주·부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총 36개소의 문화도시와 45개소의 문화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개소(문화도시 1개소와 문화마을 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5년 17개소(문화도시 6개소, 문화마을 11개소), 2016년 26개소(문화도시 10개소, 16개소), 2017년 8개소(문화도시 3개소, 문화마을 5개소), 2018년 15개소(문화도

시 7개소, 문화마을 8개소), 2019년 12개소(문화마을 9개소, 문화도시 3개소)로 나타난다.

사업 예산의 경우 문화도시 지역에는 5년 동안 국비 3억, 지방비 4.5억으로 총 7.5억 원이, 문화마을 지역에는 3년 동안 국비 0.8억, 지방비 1.2억으로 총 2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 지원규모는 2014년에는 460백만 원이었으며, 2015년 2,800백만 원, 2016년 7,500백만 원, 2017년 8,476백만 원, 2018년 8,988백만 원, 2019년 10,268백만 원으로 나타난다.

〈표 2-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연도별 선정지역 및 지원규모(2014~2019년)

연도	사업 선정지역		지원규모 (국비/백만 원)
	문화도시	문화마을	
2014	남원시	공주시, 부여군	460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2015	대구광역시, 천안시, 군산시, 여주시, 구미시, 서귀포	대구 중구, 부산 수영구, 성남시, 양평군,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여주시, 양산시, 제주시, 세종시	2,800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
2016	인천 부평구, 부천시, 가평군, 원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담양군, 포항시, 제주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수원시(2), 파주시, 강릉시, 평창군, 영동군, 진안군, 영천시, 문경시,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하동군, 제주시	7,500 (문화도시 17개소, 문화마을 29개소)
2017	울산 중구, 익산시, 광양시	시흥시, 포천시, 충주시, 해남군	8,476 (문화도시 20개소, 문화마을 32개소)
2018	수원시, 춘천시, 완주군, 정읍시, 순천시, 창원시, 김해시	대구 남구, 안산시, 속초시, 서천군, 장수군, 임실군, 영덕군, 서귀포시	8,988 (문화도시 26개소, 문화마을 25개소)
2019	서울 도봉구, 시흥시, 속초시, 홍성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철곡군, 밀양시	포천시, 인제군, 문경시	10,268 (문화도시 33개소, 문화마을 17개소)

자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현황」 참고

주: 연도별 사업비는 계속사업을 포함한 금액임

#### 4) 사업 특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법상의 문화도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sup>31)</sup> 법적 근거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말하는 문화도시는 이와는 다른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은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 내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법정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는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추진을 “기존 문화특화지역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과 문화도시센터 구성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경우 도시협의체를 전문조직으로 구성·운용 가능”, 문화도시 컨설팅단은 “문화특화지역사업을 포괄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2)</sup> 이에 따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법정 문화도시의 예비사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1)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도시 개발의 한계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공간의 문화적 장소가치 생성 및 정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sup>33)</sup>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을 지원한다. 즉 원도심 혹은 인접지에 있는 공공공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공간디자인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규건설 및 시설공사는 사업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와 국토부가 MOU를 체결하여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및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 예산의 경우 2018년 시범사업은 1개소 당 국비 최대 80백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31) 이순자 외(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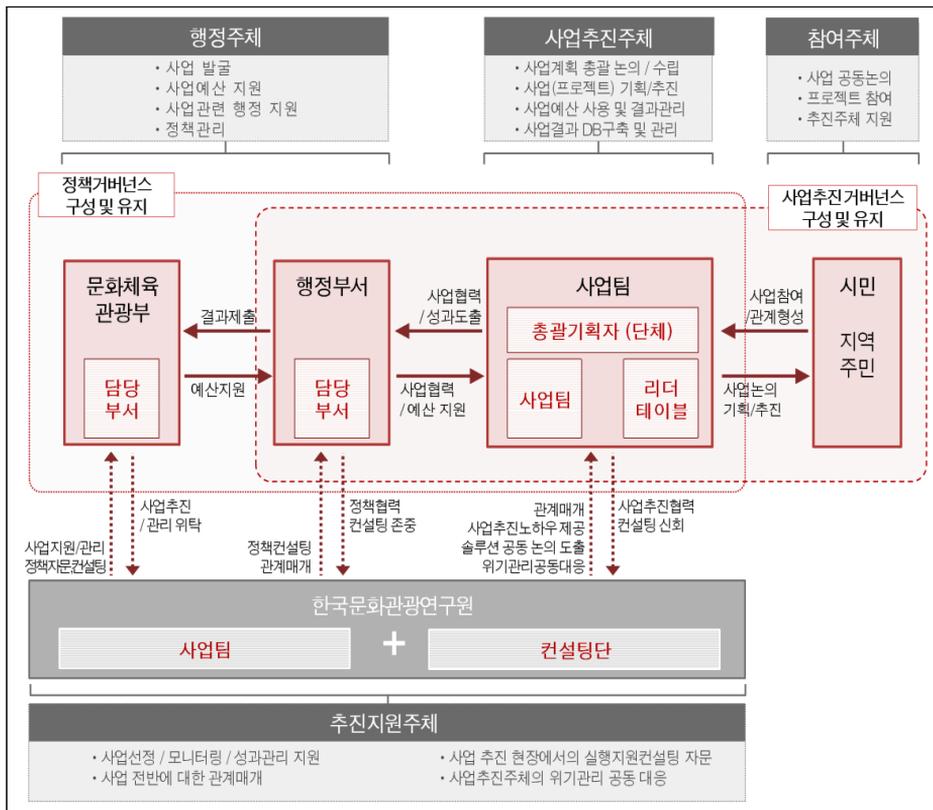
32)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13~34쪽.

33)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1쪽.

로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예산과 50%를 필수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즉 총 사업비의 기본규모는 1.6억 원(국비 80백만 원, 지방비 80백만 원)으로 책정된다. 2019년부터는 1개소 당 국비 250~300백만 원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은 600백만 원 내외(국비 300백만 원, 지방비 300백만 원 내외), 연속사업은 500백만 원 내외(국비 250백만 원, 지방비 250백만 원 내외)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sup>34)</sup>

사업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반적인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의 행정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지역의 사업팀,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된다.

[그림 2-7]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3쪽.

34)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1쪽.

## 2) 지원 현황

2018년에는 19개 지역이 응모하였고,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sup>35)</sup> 2019년 사업에는 총 61개 지역이 지원했으며, 19개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sup>36)</sup> 2019년 2월 문체부가 선정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신청 지역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표 2-10〉 문화적 도시재생 선정지역(2018-2019년)

연도	지역	사업 대상지	주요 사업명 및 사업계획
2018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일대 (꿈들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꿈들 문화경작소 '청포도 다방' 조성 및 '문화품앗이' 외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등</li> <li>재난 및 쇠퇴도시 한일교류포럼(후쿠시마)</li> </ul>
	부산 영도구	대평로 1,2가 일대 (구 대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방문객, 기술자, 예술가가 함께하는 마을동아리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li> <li>크, 예술가의 밥상, 메이커스 프로젝트 등</li> </ul>
	전북 군산시	신흥동 34-5번지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조사기록, 말랭이교실(공유회의, 투어, 강의 등), 마을이야기 제작(글, 그림, 사진, 영상, 디자인)</li> <li>말랭이공방 운영, 마을앵커장소만들기 시범사업</li> </ul>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일대 (남산 중앙시장 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시장 상인연계 프로그램(삼거리 식탁), 지역문화예술 협동 문화구축 프로그램(삼거리 스튜디오), 야외융합문화 프로그램(융합이벤트)</li> </ul>
2019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구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맷돌모루</li> </ul>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04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두천 문화터미널</li> </ul>
	경기 하남시	신장 1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시 찾은 문화록 신장 777</li> </ul>
	강원 강릉시	중앙동 서부시장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릉 문화적 도시재생</li> </ul>
	강원 춘천시	약사동 25-4번지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를 잇는 터무니</li> </ul>
	강원 태백시	철암동 366-46 철암역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백 역사·문화 장터 만들기</li> </ul>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및 사직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장르 간 문화 연결</li> </ul>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이 심고 꽃이 답하다</li> </ul>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오시장로, 문화로 리-디자인하다</li> </ul>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여천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 문화적 도시재생</li> </ul>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53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장(陣場)거리, 문화예술의 진(陳)을 치다</li> </ul>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33-4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원청춘 옥상실험실</li> </ul>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생산도시 리빙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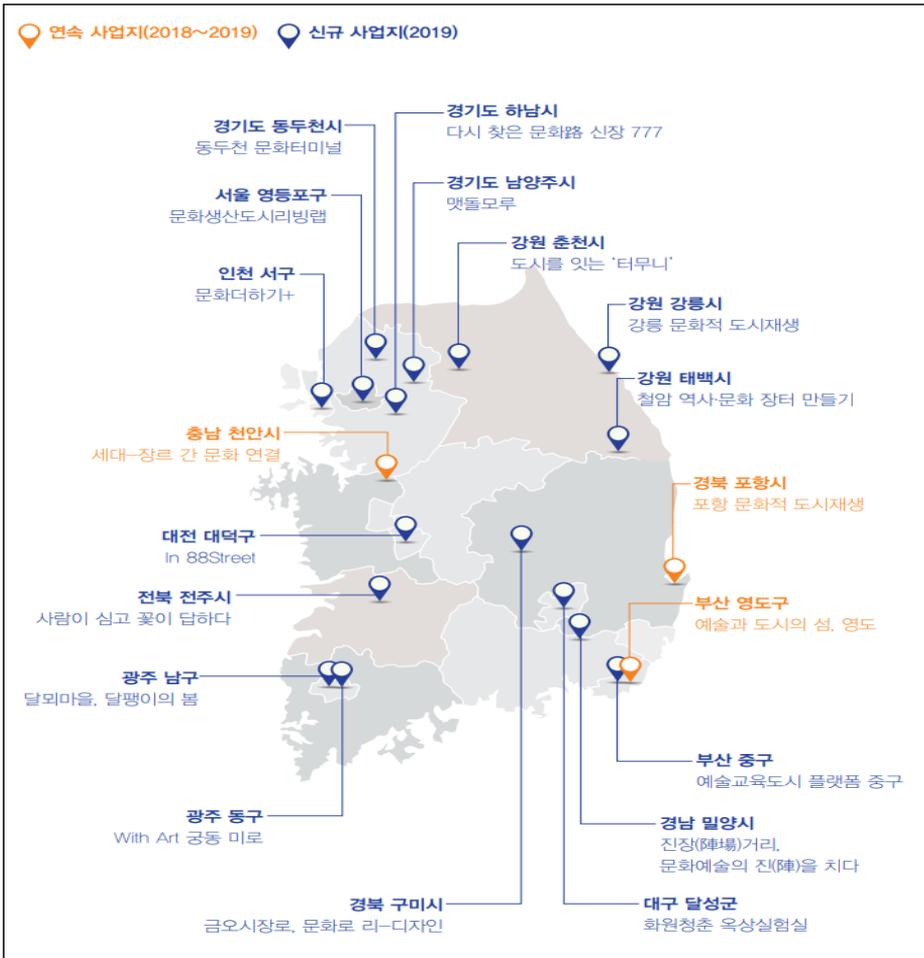
35) 정책브리핑(2018.03.20.), “문화적 도시재생 우수모델 만든다”

36) 정책브리핑(2019.04.04.), “문화적 도시재생, 전국 19곳으로 확대 지원”

연도	지역	사업 대상지	주요 사업명 및 사업계획
	부산 중구	40계단 주변 및 동광동 일대	• 시민주도형 예술교육도시 플랫폼
	부산 영도구*	영도구 전체	• 예술과 도시의 섬
	인천 서구	원적로 및 장고개로 일대	• 문화더하기+
	광주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대	• 달외 달팽이 문화마을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일대	• 공동예술마당
	대전 대덕구	한남로 88번길 일대	• In 88Street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20), 586쪽.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문화예술정책백서」, 590쪽.  
 \*연속사업(2018년 시범사업지)

[그림 2-8] 문화적 도시재생 선정 현황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도시재생 문화에 길을 묻다』, 6쪽

## 마. 법정 문화도시 사업

### 1) 추진 배경 및 목적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법상에 나타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하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문화도시 지정 및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sup>37)</sup>

관련 법 제정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에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서 문화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를 기반으로 한 문화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과제를 발주하고, 2016년 12월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5월에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 지원 도시를 모집하여 19곳이 지원하고, 같은 해 12월 10곳이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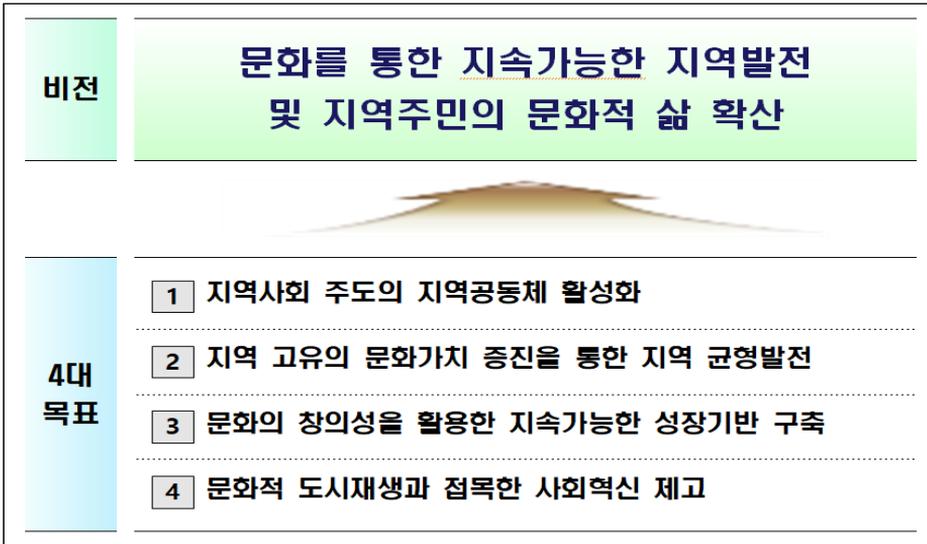
### 2) 사업 내용

법정 문화도시 정책의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혁신 제고”를 제시했다.<sup>38)</sup>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하며, 지역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평가, 환경진단 등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3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8) 문화체육관광부(2022),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3쪽.

[그림 2-9] 법정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3쪽.

본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였으나 5차 지원공고부터는 광역지자체가 제외되고, 기초지자체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예산은 각 문화도시에 5년간 총 사업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며,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된 사업 예산 총액이다. 문화도시 사업이 물리적 개발보다는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중심을 둔 사업인 만큼 하드웨어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기본분야는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형’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5개 분야는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지만, 타 근거 법 또한 분야별로 제시되어 있다. 역사전통 중심형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에 근거하며, 예술 중심형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한다. 문화산업 중심형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사회문화 중심형은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자율형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으로 근거하는 관련법이 존재한다.

[그림 2-10]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자정분야 및 사업유형 구성

문화도시 지정 분야 및 사업유형 구성		
<b>도시 『○○』</b> (도시명)  사업명(또는 목표)	+	<b>역사전통 중심형</b> 개념 도시가 사회장소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한 정체성으로서 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지향 분야근거/포괄범위 <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특별법> 역사/전통 등
		<b>예술 중심형</b> 개념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지향 분야근거/포괄범위 <문화예술진흥법>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	<b>문화산업 중심형</b> 개념 도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쓰임과 활용을 만드는 문화의 지속가능가치를 지향 분야근거/포괄범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애니메이션/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b>사회문화 중심형</b> 개념 도시에서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고 도시발전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문화가치 분야근거/포괄범위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시민문화/인문/생활문화/여가/문화교육/다문화 등
	+	<b>지역자율형</b> 개념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율제시 분야근거/포괄범위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분야를 인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1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12쪽.

사업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지자체에서 도시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을 접수하면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신청 도시 중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도시는 1년 동안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예비사업 기간 동안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예비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5년간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체계의 경우 중앙과 지역 그리고 부처협업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인 지역문화진흥원이 문화도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조성계획 검토 및 심의, 컨설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문화도

시추진위원회와 전문조직(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추진부서 등)이 도시 내 문화도시 제  
도적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3) 지원 현황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현재 1차 7곳, 2차 5곳, 3차 6곳이 지정되어 총 18곳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차는 16곳이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2022년 하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  
로 예비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차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가 되면 5차 문화도시까지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 도시 수를 살펴보면 1차가 19곳, 2차 25곳, 3차 41곳, 4차 49곳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차와 5차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2-11〉 문화도시 지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신청	2018년 8월 19곳	2019년 6월 25곳	2020년 7월 41곳	2021년 7월 49곳
예비도시 승인	2018년 12월 10곳	2019년 12월 12곳	2020년 12월 16곳	2021년 12월 16곳
문화도시 지정	2019년 12월 7곳	2021년 1월 5곳	2021년 12월 6곳	2022년 하반기 6곳 내외 지정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9쪽.

지정도시는 2018년 12월 예비도시 승인 이후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  
구가 지정되었다. 2021년 1월에는 예비도시 2차 문화도시로 12곳 중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가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에 3차  
문화도시로 서울 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시, 충남  
공주시가 지정되었다. 지정 도시들은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나가고자 2021년 6월 전국문화도시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다.<sup>39)</sup>

39) 경인매일(2021.07.06.),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출범…부천시 등 12개 도시 문화교류 강화”

〈표 2-12〉 법정 문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명

구분	문화도시	사업명
1차	경기 부천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2차	인천 부평구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강원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강원 춘천시	시민이 낭만이웃으로, 전환문화도시 춘천
	전북 완주군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문화도시 완주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3차	서울 영등포구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경기 수원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전북 익산시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전남 목포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경남 밀양시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충남 공주시	삶을 품은 유산, 미래기억도시 공주

2021년 12월 지정된 4차 예비도시는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로 총 11곳이 지정되었다. 예비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1년 동안 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3〉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명

구분	예비 문화도시	사업명
4차	울산광역시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
	서울 도봉구	씨알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
	서울 성북구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부산 북구	모든 것이 건강하게 이어지는 도시, 이음도시 북구
	경기 군포시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쉬는 군포
	경기 의정부시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강원 영월군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

구분	예비 문화도시	사업명
	경북 안동시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문화도시
	경남 창원시	안녕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
	전북 군산시	일상 모음과 가치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
	전남 담양군	너랑 나랑 엮어가는 연관(聯關)문화도시, 담양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이전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을 살펴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은 포항시, 천안시, 강릉시, 춘천시, 밀양시로 총 5곳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서귀포시, 인천 부평구, 완주군, 김해시, 수원시, 익산시, 공주시로 10곳이다. 이 중 공주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도시재생과 법정 문화도시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영도구와 서울 영등포구로 2곳이다. 지정도시 중 목포시만이 유일하게 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4〉 법정 문화도시의 타 문화도시 사업 추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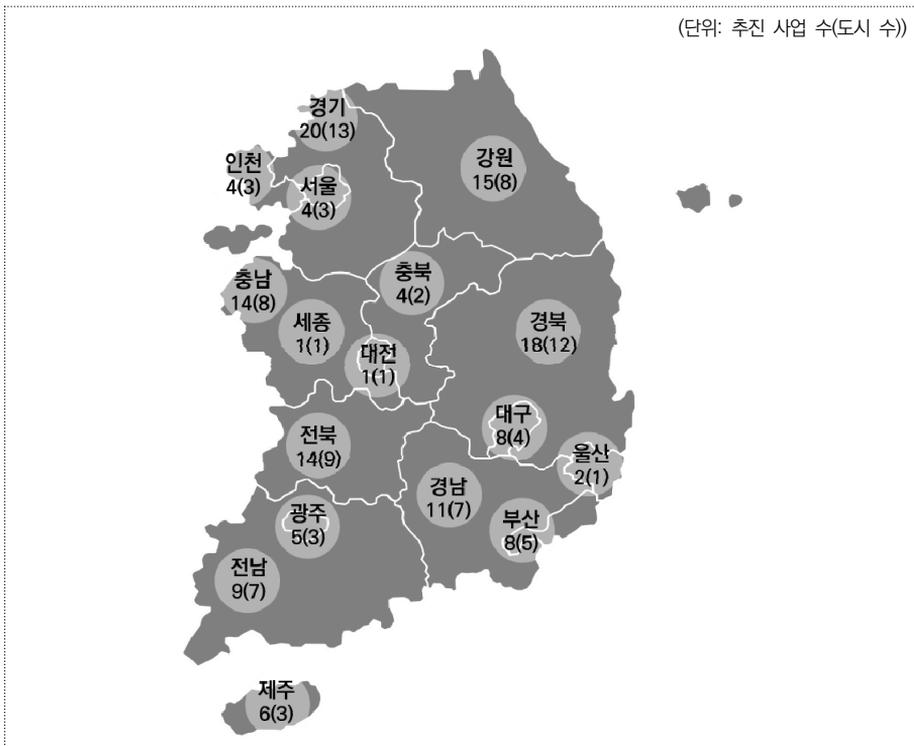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포항시, 천안시, 강릉시, 춘천시, 밀양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서귀포시, 인천 부평구, 완주군, 김해시, 수원시, 익산시, 공주시(+지역거점)	부산 영도구, 서울 영등포구	목포시

## 2. 중앙정부 지정 사업 추진 현황

### 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문화 도시 정책사업은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중 문화도시 유형과 문화마을 유형,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의 목적은 다르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있으며, 국제적 차원의 문화 도시 사업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있다. 지역에서 추진한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11] 광역자치단체 기준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추진 현황



주: 중앙정부 지정 사업(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문화마을),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포함한 사업 수(도시 수)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 도시 정책 사업에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6개 사업(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유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마을 유형,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을 통해 지역에서 총 133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86개 지자체(광역+기초)가 지정되었다. 그중 4개 광역지자체와 34개 기초 지자체가 2건 이상 중복 지정(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경우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지정 도시와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 결과 8개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 정부의 문화 도시 정책 사업에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도시는 없었다. 국제 사회의 문화 도시로 국제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경우에도 정부의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가입된 도시는 경기 이천시와 경남 통영시 단 두 곳이었다. 서울특별시도 광역 차원에서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으나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유형, 문화적 도시재생과 법정 문화도시 등에 지정된 기초지자체가 있어 광의적 의미로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구분 없이 지정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유형에 선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마을 유형에 선정된 사례들이다. 또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마을 유형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추진 구역이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아니라 도시 내의 일부 지역(읍·면·동 등)만이 사업 대상지가 된다. 즉 구역화 된 일부 지역이 사업지에 포함되는 형태가 되기에 모든 사업을 동일 선상에서 '문화 도시로 지정 되었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예비사업 단계에서 구상되었다. 따라서 1,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도시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부터는 대상 도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며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도시 중 법정 문화도시에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여 예비도시 사업까지 1~2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도시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사실상 사업의 연속성은 2년 이내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사업의 예산은 별도로 추진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파악하여 2개 사업 모두에 공모하여 추진했을 경우 중북 지정 도시로 분석하였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거쳐 법정 문화도시가 된 곳은 인천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전북 완주시, 익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밀양시, 제주 서귀포시 등 15개 도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80개(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합산, 중북지정 제외) 지자체에서 추진되었기에 약 18.8%가 법정 문화도시로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5〉 지역별 문화정책 사업 지정 사업 및 지자체 수

사업 지역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마을)	문화적 도시재생	법정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수	지자체 수 (중북제외)
서울	-	1	-	1	1	-	3	2
부산	1	-	2	2	1	1	7	5
인천	-	1	-	1	1	1	4	3
대구	-	1	4	1	-	1	7	4
대전	-	-	-	1	-	-	1	1
광주	1	-	-	2	-	1	4	3
울산	-	1	1	-	-	-	2	1
세종	-	-	1	-	-	-	1	1
경기	-	4	9	3	2	-	18	12
강원	-	3	5	3	3	-	14	8
충북	-	1	1	-	1	1	4	2
충남	2	3	6	1	2	-	14	8
전북	1	5	3	2	2	-	13	9
전남	-	5	2	-	1	1	9	7
경북	1	6	7	2	1	1	18	12
경남	-	3	2	1	2	-	8	5
제주	-	2	2	-	1	1	6	3
소계	6	36	45	20	18	8	133	86

## 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현황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성격 상 공모로 추진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지정으로 추진된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국내 사업 이외의 공모로 추진되는 지역단위 문화 사업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가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몇 개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을 참여 및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광역지자체별 문화정책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sup>40)</sup> 서울 4건(3), 부산 8건(5), 인천 4건(3), 대구 8건(4), 대전 1건(1), 광주 5건(3), 울산 2건(1), 세종 1건(1), 경기 20건(13), 강원 15건(8), 충북 4건(2), 충남 14건(8), 전북 14건(9), 전남 9건(7), 경북 18건(2), 경남 11건(7), 제주 6건(3)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그중 2건의 사업을 추진한 도시는 총 22개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부산 영도구, 인천 부평구, 대구 달성군, 대구 중구, 울산 중구, 시흥, 포천, 속초, 부여, 홍성, 군산, 완주, 익산, 순천, 여수, 경주, 구미, 문경, 영천, 서귀포, 제주시가 이에 해당한다. 3건 이상 추진 도시는 부천, 수원, 강릉, 원주, 춘천, 청주, 공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밀양 총 12개 기초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2건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가 3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서울특별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서울 4(3)	(광역)	UCCN	디자인	2010	계속	
	도봉구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영등포구	문화재생	-	2019	2020	
		문화도시	3차	2022	2026	본도시

〈표 2-17〉 부산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부산 8(5)	(광역)	지역거점	영상허브	2004	2011	
		UCCN	영화	2014	계속	
		동아시아	-	2018	-	
	수영구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영도구	문화재생	-	2018	2020	
		문화도시	1차	2020	2024	본도시
	중구	문화재생	-	2019	2020	
	해운대구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40) 광역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표의 괄호 안 숫자는 지정 지자체 수(광역+기초)

〈표 2-18〉 인천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인천 4(3)	(광역시)	동아시아	-	2019	-	-
	부평구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
		문화도시	2차	2021	2025	본도시
	서구	문화재생	-	2019	2020	-

〈표 2-19〉 대구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대구 8(4)	(광역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5	2019	-
		UCCN	음악	2017	계속	-
		동아시아	-	2017	-	-
	남구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
		달성군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문화재생		-	2019	2020	-
	중구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7	2019	-

〈표 2-20〉 대전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대전 1(1)	대덕구	문화재생	-	2019	2020	-

〈표 2-21〉 광주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광주 5(3)	(광역시)	지역거점	아시아문화	2004	2028	-
		UCCN	미디어아트	2014	계속	-
		동아시아	-	2014	-	-
	남구	문화재생	-	2019	2020	-
	동구	문화재생	-	2019	2020	-

〈표 2-22〉 울산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울산 2(1)	중구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7	2021	-

〈표 2-23〉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세종 1(1)	(광역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

〈표 2-24〉 경기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경기 20(13)	가평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남양주	문화재생	-	2019	2020		
	동두천	문화재생	-	2019	2020		
	부천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UCCN	문학	2017	계속	
	성남	문화도시	1차		2020	2024	본도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수원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3차		2022	2026	본도시
	시흥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7	2019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안산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양평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이천	UCCN	공예민속예술	2010	계속		
파주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포천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7	2019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9	2021		
하남	문화재생	-	2019	2020			

〈표 2-25〉 강원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강원 15(8)	강릉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문화재생	-	2019	2020		
		문화도시	2차	2021	2025	본도시	
	속초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영동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원주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UCCN	문학	2019	계속	
			1차		2020	2024	본도시
	인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9	2021		
	춘천	문화도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문화재생	-	2019	2020	
			2차		2021	2025	본도시
	태백	문화재생	-	2019	2020		
	평창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표 2-26〉 충청북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충북 4(2)	청주	동아시아	-	2015	-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문화도시	1차	2020	2024	본도시
	충주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7	2019	

〈표 2-27〉 충청남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충남 14(8)	공주	지역거점	역사문화	2009	2030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4	2016	
		문화도시	3차	2022	2026	본도시
	당진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부여	지역거점	역사문화	2009	2030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4	2016	
	서산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서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예산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천안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5	2019	
		문화재생	-	2018	2020	
		문화도시	1차	2020	2024	본도시
	홍성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표 2-28〉 전라북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전북 14(9)	군산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5	2019	
		문화재생	-	2018	2019	
	남원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4	2018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완주	문화도시	2차	2021	2025	본도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7	2021	
	익산	문화도시	3차	2022	2026	본도시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장수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전주	지역거점	전통문화	2007	2026	
		UCCN	미식	2012	계속	
		문화재생	-	2019	2020	
	정읍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진안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표 2-29〉 전라남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전남 9(7)	광양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7	2021	
	나주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담양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목포	문화도시	3차	2022	2026	본도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순천	동아시아	-	2021	-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5	2019	
	여수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7	2019	

〈표 2-30〉 경상북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경북 18(12)	경주	지역거점	역사문화	2006	2035	
		동아시아	-	2022	-	
	고령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5	2019	
	구미	문화재생	-	2019	2020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문경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9	2021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성주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안동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영덕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영양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영주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영천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칠곡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문화재생		-	2018	2020		
포항	문화도시	1차	2020	2024	본도시	

〈표 2-31〉 경상남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경남 11(7)	김해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UCCN	공예민속예술	2021	계속	
		문화도시	2차	2021	2025	본도시
	밀양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9	2023	
		문화재생	-	2019	2020	
		문화도시	3차	2022	2026	본도시
	양산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진주	UCCN	공예민속예술	2019	계속	
	창원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8	2022	
	통영	UCCN	음악	2015	계속	
	하동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6	2018	

〈표 2-3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추진 현황

광역시	기초	사업명	세부 분류	시작년도	종료연도	비고
제주 6(3)	(광역시)	동아시아	-	2016	-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8	2020	
	서귀포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5	2019	
		문화도시	1차	2020	2024	본도시
	제주	문특사업	문화마을	2015	2017	
		문특사업	문화도시	2016	2020	

### 3. 사업 추진 사례 분석

#### 가. 분석 개요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중 중앙정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도시브랜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문화정책 혹은 사업을 3개 이상 추진하는 도시들이 사업 내용에 유사성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혹은 각 사업별로 다른 목적 및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각 도시들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효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북도 청주시다.

각 도시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유사한 사업명 혹은 사업 콘텐츠로 추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연속 사업의 개념으로 추진된 경우 성과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2-33〉 사업 추진 사례 분석 도시 주요 정보

도시명	추진정책 또는 사업명	시작년도	종료년도	추진 사업명(비전)
(강원)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2016	2020	문화로 행복한 삶, 감성공유도시 원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9	계속	문학 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2020	2024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 원주: 36만 5천개의 원주로운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도시
(경기) 부천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2016	2020	열린 생활문화 놀이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7	계속	문학 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2020	2024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경남) 김해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2018	2022	세계와 만나는 이천년 가야문화의 고도, 김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22	계속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2022	2025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충북) 청주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5	계속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2016	2020	통하는 생명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2020	2024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씨앗, 청주의 가치로 꽃피다

## 나. 도시별 사례 분석

### 1) 원주시

원주시는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고 2020년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문화분야로 가입되어 총 세 개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되었다. 원주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문화도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2019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과부터는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업으로서 성과 발표를 하고 있어 정책 사업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년차인 2017년의 원주문화도시 비전은 ‘문화로 행복한 삶, 감성공유 도시 원주’로 감성, 공유, 도시 키워드를 통해 비전을 제안했다.

[그림 2-12]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비전(2017년)



[그림 2-14] 문화도시 원주 사업 비전(2021년)



[그림 2-13] 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비전(2019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시작 당시 기존의 3개 키워드 비전에서 법정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는 지역 정체성과 가치, 목표와 추진과제 등이 구체화 되었으며 특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예비도시’라 정의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후속 사업에 다수 반영하였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문학 부문에 가입한 계획안은 공개되진 않았으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나타난 해당 사업의 계획은 ‘토지문화관’과 ‘박경리문학상’, ‘원주 한도시한책읽기운동’ 등 문학정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가입 및 교류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41)</sup>.

원주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연대로 만들어가는 그림책 도시’ 등의 사업을 통해 책과의 연계성을 드러낸 바 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원주로운 일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문학 브랜드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통 공감의 도시’ 사업 목표의 실천과제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를 반영함으로써 지역 브랜드의 확충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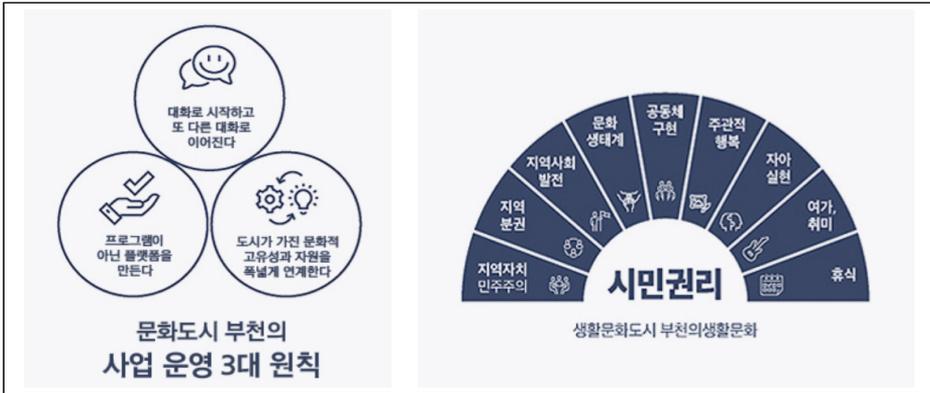
## 2) 부천시

부천시는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사업에 참여하며 2020년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 분야에 가입하여 도시 브랜드 확충을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특히 부천시는 2016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과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각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음을 짐작케 한다.

부천시는 두 가지 도시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생활문화도시’를 표방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와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였다. 다만 문학창의도시 사업과의 연계와 도시재생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타 부처 혹은 유관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도시 브랜드 전반에서 문학창의도시와 법정 문화도시 간의 연계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4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115쪽 참고

[그림 2-15] 문화도시 부천 운영 3대 원칙 및 시민권리



자료: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bcf.or.kr/main/main.act>)

한편 부천시는 만화 산업으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부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만화산업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가 가지는 경제적인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문화를 ‘산업’으로 인지, 새로운 도시 전략을 구축한 것이다<sup>42)</sup>. 부천시는 ‘부천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클러스팅과 산업 인프라 클러스팅, 장소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sup>43)</sup>.

즉, 부천시는 총 세 개의 도시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 도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문화도시’로, 그리고 자체 문화산업을 발굴하여 ‘만화영상산업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 3) 김해시

김해시는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에 참여한 이후 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 지역단위 문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역사문화와 공예(민속예술) 관련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42) 시사저널(2018.6.12.), “문화가 일상으로 스민 ‘창의도시’ 부천”

43) 부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bucheon.grandculture.net/bucheon/toc/GC01601083>)

[그림 2-16] 문화도시 김해 비전 및 목표·과제

3개 부문 9개 과제 29개 세부사업			
비전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핵심가치	역사 오래된 미래	시민 꿈꾸는 주체	미래 역사로 지속가능한 도시
추진목표	도시의 DNA 발견	시민의 문화력 증진	지속가능성 마련
추진과제	<b>도시역사문화 재발견</b> - 도시미래유산 만들기 지원사업 - 역사적인 손기술 "리빙테크" - 도시재집 "구·송"  <b>도시역사문화 공존&amp;교류</b> - 역사·가야 문화도시 교류사업 "출항" - 가치 확산 "공존 인센티브" - 문화적 실천 프로젝트 "가치가게" - 도시여행 프로젝트 "뚜르드가야"  <b>도시역사문화 핵심 거점 조성</b> - 김해역사문화거점 조성 "G벨트" - 문화공간 디자인사업 - 고대왕국의 정원사들 - 디지털 아카이빙 "도시가 박물관"	<b>문화를 통한 시민의 성장</b> - 도시미래학교 "Tiki-Taka" - 문화청년 정주프로젝트 "김해에 산다" - 청소년 도시 문화재 알람이  <b>자율성이 보장되는 도시문화 활성화</b> - 도시문화 프로젝트 "실내에도 관광지" - 문화인프라 시민 공유 공간 "와야G" - 문화 공간지원 "문화 100-Scene"  <b>상생·협력하는 시민문화생태계 조성</b> - 도시문화실험실 - 공공기획지원사업 "시민+" - 문화도시 "시민 R&D"	<b>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b> - 문화도시협의체 "Zero-그라운드" - 문화도시포럼 "김해 문화(問話)2000" - 문화도시 시민클럽 "구·송" - 문화도시 온라인 시민 플랫폼 "가야누리"  <b>시민 자산 개발 및 축적</b> - 오래된 미래 적립기금&펀드 운영 - 시민자산화 프로젝트 "벨리로 42번길" - 문화기반 스톱비즈니스 지원 및 활성화 사업  <b>문화도시 경영 환경 조성</b> - 문화도시 지속가능 경영 기반 조성 - 문화도시센터 운영

자료: 김해시(2021), 「(경남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 4) 청주시

청주시는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 당해연도에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교류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업 주체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2015년 당시 교류를 맺은 중국 칭다오, 일본 니카타와 함께 청소년 문화교류, 지역예술 문화교류, 문화교류 활성화 포럼을 2022년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sup>44)</sup>

청주시는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사업에 참여하고 2020년 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두 사업에서 청주는 '기록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사업을 구상 및 추진해왔는데, 3대 전략을 '시민중심 문화적 도시재생', '기록문화 브랜드 창출', '창의문화 생태계 구축'으로 나누어 브랜드 사업과 주민 대상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정책성과와 시민 체감 성과를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도시브랜드의 구축을 위한 전문적 활동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활동, 그리고 인적자원이 연계하는 생태계 구축 활동을 분리하여 다양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44)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 참고 (<https://culturecj.com/sub.php?code=30>)

[그림 2-17] 문화도시 청주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자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22), 「2021 문화도시 청주 성과기록집」, 10쪽.

한편 청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예와 민속예술’분야 예비 회원도시로 가입을 준비 중에 있다.<sup>45)</sup> 청주는 1999년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청주가 고대 철기문화의 발흥지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의 발흥지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즉, 청주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중 네트워크 사업(동아시아 문화도시)을 통해 국제교류의 기반을 만들었고, 지역단위 문화정책 공모 사업을 통해 ‘기록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90년대부터 준비한 공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며 또 다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89쪽 참고

## 다. 사례분석 시사점

사례로 지정된 4개 도시는 3개 이상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혹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법정 문화도시가 도시 브랜드로서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각 사례 도시들은 법정 문화도시의 사업 비전과 별도로 다른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도시의 문화환경 발전과 지역민의 참여, 문화예술계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정책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시의 목표를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분야는 지자체의 역사적 배경에서 콘텐츠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사업의 추진 방식보다 도시 이미지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또한 부문정책을 넘어선 지역의 종합정책으로, 시민을 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창의성은 네트워크로부터 추진되는 점을 강조<sup>46)</sup>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브랜드 구축에 가치를 둘 것인지, 혹은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시 이미지가 단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추진 사업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자원 활용, 특히 전문인력 및 조직의 활용에 있어 핵심사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활동의 범위(국내, 아시아, 세계 등)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던 것을 감안할 때 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점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가이드 혹은 컨설팅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151~162쪽 참고

## 제2절 지역단위 정책 사업 특성 분석

### 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재정 분석

#### 가. 개요

지역문화 정책 재정 분석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을 활용하였다. 지방재정365의 지방재정전문통계에서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통해 예산 현황과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365는 2014년 12월에 서비스 오픈을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이후 시점부터 재정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365를 통해 파악 가능한 재정 현황은 2016년~2022년 기준이다. 따라서 지방재정365로는 문화지구, 지역거점문화도시 정책의 재정 현황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2016~2022년 간의 문화정책 사업 재정 분석은 2022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사전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방이양 정책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17개 지자체의 '본청'을 중심으로 문화 도시 정책 사업의 재정 소요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하여 지역문화 정책 재정이 지방이양된 시점(2020년)을 전후로, 해당 사업의 지속성 및 예산 사용 현황 변화를 분석하였다.

#### 나. 사업별 재정 분석

##### 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재정 현황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는 지자체 경상보조로 예산(국비 40%, 지방비 60%)이 지원된

다.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 가능한 각 지자체별 본청 기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문화마을) 예산 편성 사업 수는 다음과 같다.

2016년~2022년(7년 간) 기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이 1회 이상 편성된 시도(본청 기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로 확인된다. 충남의 경우, 2016년, 2021년, 2022년에는 1개 사업, 2017년~2020년에는 각 2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는 7년 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으로 매년 1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남은 2017년, 경남은 2018년, 서울은 2019년 이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본청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총 11개 사업으로 편성 되었고, 2022년 현재는 아직 예산 편성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인천은 2017년~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후 2021년부터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울산은 2017년, 세종은 2017~2018년에 각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 편성을 확인 가능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예산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산, 광주, 대전에 편성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사업 및 예산 현황은 지방재정365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 지방비의 경우 시도비는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시군구비는 실제로 예산이 편성(소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는 지자체 경상보조로 지원된 예산 현황 비율을 국비(40%), 지방비(60%)가 아닌, 국비와 시도비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표 2-34〉 2016년~2022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자체별 본청 기준 편성 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서울	-	-	-	1	1	1	1	4
부산	-	-	-	-	-	-	-	-
대구	-	3	3	3	1	1	-	11
인천	-	1	1	1	1	-	-	4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1	-	-	-	-	-	1
세종	-	1	1	-	-	-	-	2
경기	1	1	1	1	1	1	1	7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강원	1	1	1	1	1	1	1	7
충북	1	1	1	1	1	1	1	7
충남	1	2	2	2	2	1	1	11
전북	1	1	1	1	1	1	1	7
전남	-	1	1	1	1	1	1	6
경북	1	1	1	1	1	1	1	7
경남	-	-	1	1	1	1	1	5
제주	1	1	1	1	1	1	1	7
계	7	15	15	15	13	11	10	86

## 2)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재정 현황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도시형, 마을형)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이 축적된 상태라는 점과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대두된 상태라는 점이 그 추진 배경이었다.<sup>47)</sup> 이에 문화도시 사업 예산으로 5년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 기준) 이내 범위로 각 문화도시에 지원하기로 계획되었다. 사업예산은 기본사업비(문화경영, 휴먼에어소프트웨어 중심)에 특성화사업비(효과 파급, 하드웨어특성화 지원) 조합으로 총사업비가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50%:50%)가 매칭된 예산이다.<sup>48)</sup>

문화도시 지정 도시의 예산 분석에 앞서, 지자체별 분청 중심의 문화도시 예산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방재정365를 통해 현재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2개이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시비 예산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가 포함된 문화도시 사업 예산 현황은 지방재정365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7개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도 확인할 수 없었다.

47) 문화체육관광부(2018.5.),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1

48) 문화체육관광부(2021.3.),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9~30

아울러,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365 세출 현황에서 예산 현황 통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부천(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선정), 수원(2021년 12월 3차 문화도시 선정), 전라남도 목포(2021년 12월 3차 문화도시 선정)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본청) 문화도시 예산 편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35〉 지자체별 본청 기준 문화도시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서울	-	-	-	-
부산	1	1	1	3
대구	(1)	-	-	(1)
인천	1	1	1	3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	-	-	0
세종	-	-	-	0
경기	-	-	-	0
강원	1	3	3	7
충북	1	1	1	3
충남	-	1	1	2
전북	-	1	1	2
전남	-	-	-	0
경북	1	1	1	3
경남	-	1	1	2
제주	1	1	1	3
계	6(1)	11	11	28(1)

## 2. 지역 문화재정 정책 현황 및 전망

### 가. 재정분권 추진 이후 정책 현황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7:3 → 6:4)을 목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2017.8.)로 설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의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한 후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역시 신공공관리론과 정부혁신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2-36〉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세 (%)	2,425,617 (76.3)	2,653,849 (76.7)	2,935,704 (77.7)	2,934,543 (76.4)	2,855,432 (73.6)	3,046,421 (74.9)	3,285,760 (75.2)
지방세 (%)	755,306 (23.7)	804,063 (23.3)	843,153 (22.3)	904,572 (23.6)	1,020,485 (26.4)	1,022,963 (25.1)	1,085,070 (24.8)

주 1)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최종예산, 2022년은 당초예산

2) 괄호()는 구성비

자료 : 행정안전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방향성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사업을 지정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현황 및 정책효과성을 분석하면 시도 자율계정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에 일부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112)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 확대\*  
 \*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2.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sup>49)</sup>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 확충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능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및 자원 배분의 균형과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양의 우선적인 대상사업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즉, 지역자율계정에 있는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이다.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은 명백하고 반복적인 지방사무이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가능한 공통사무를 말하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자율적인 권한과 재원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재정분권 이양사업 :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  
 (기본원칙 1: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으로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본원칙 2: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격차를 완화)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임  
 (기본원칙 3: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조속한 성과창출과 실효성 제고) 당장 추진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9년부터 시행하고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담은 2단계 추진방안을 21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10), 재정분권 추진방안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49) 이에 따라 약 3.57조원, 11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150개 내역사업(부기사업 포함)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였다(2018.10). 정부는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담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관리하는 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하기로 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약 3.57억 원, 즉 총 31개 세부사업, 135개 내역사업, 4,790개 세부 내역사업이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다(2018.10.). 그 중 31개가 시도 자율계정사업, 3개가 시군구 자율계정사업, 5개가 기타사업이었다. 특히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30개로 타부처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이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내역사업 사업수와 사업비를 기준으로 이양 현황을 살펴보면, 738개 4,957억 원 규모 시도 자율계정사업, 74개 기타(문예기금) 사업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문화재청 역시도 세부 내역사업 사업수와 사업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1개 246억 원 규모 시도 자율계정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표 2-37〉 1단계 전환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단위: 개, 억 원)

부처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 내역사업	
		사업명	수	사업명	수	수	사업비
문화 체육 관광부	시도 자율계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외 관광지개발조성 외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외 지역특화문화 행사 지원 외	12	157	1,968
		관광자원 개발	1		7	519	2,726
		지방문화사업 기반 조성	1		7	21	95
		지역문화행사 지원	1		4	41	168
	기타	예술의 관광자원	1	지역대표공원 예술제	1	74	-
문화 재청	시도 자율계정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1	지역문화유산 개발	1	31	246

자료 : 김성주·전성만(2021),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재정리

전환사업의 분포는 균특회계를 통해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정책이 제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행정단위별 시도 자율계정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광역시도에서 수행하는 비중은 20% 미만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비중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 자율계정사업에 일정부분 재정부담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전환사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특광역시도 대 기초자치단체 수행 비중이 30:70로 확인되었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6:94, '지방문화사업 기반 조성사업'은 43:57,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은 71:29,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사업'은 10:90으로 나타났다.

〈표 2-38〉 행정단위별 시도 자율계정 이양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단위: 개, %)

부처	구분	세부사업		특광역시 (비중)	도 (비중)	시 (비중)	군 (비중)	구 (비중)
		사업명	개수					
문화 체육 관광부	사도 자율계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57	24 (15.3)	23 (14.6)	68 (43.3)	30 (19.1)	12 (7.6)
		관광자원 개발	519	20 (3.9)	12 (2.3)	197 (38.0)	286 (55.1)	4 (0.8)
		지방문화사업 기반 조성	21	3 (14.3)	6 (28.6)	1 (4.8)	11 (52.4)	0 (0.0)
		지역문화행사 지원	41	25 (61.0)	4 (9.8)	7 (17.1)	5 (12.2)	0 (0.0)
문화 재정	사도 자율계정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	31	3 (9.7)	0 (0.0)	9 (29.0)	19 (61.3)	0 (0.0)

자료 : 김성주·전성민(2021),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재정리

지역별 시도 자율계정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수행하는 비중은 10% 미만 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비중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행 비중이 17:83로 확인되었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1:89, '지방문화사업 기반 조성사업'은 10:90,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은 5:95,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사업'은 13:87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전환사업이 확산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9〉 지역별 시도 자율계정 이양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단위: 개, %)

부처	구분	세부사업		수도권(비중)	비수도권(비중)
		사업명	개수		
문화 체육 관광부	사도 자율계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57	26(16.6)	131(83.4)
		관광자원 개발	519	58(11.2)	461(88.8)
		지방문화사업기반 조성	21	2(9.5)	19(90.5)
		지역문화행사 지원	41	2(4.9)	39(95.1)
문화 재정	사도 자율계정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31	4(12.9)	27(87.1)

자료 : 김성주·전성민(2021),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재정리

## 나. 포괄보조금 활용의 한계와 과제

###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국고보조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보조를 지급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세입 중 일부를 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입공유 원칙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재원이 넘겨진다는 뜻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일반재원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이준구조영환, 2018).

국고보조금<sup>50)</sup>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을 말한다(홍근석, 2020 재인용; 배준식 외, 2015). 법률적 개념과 실무적 개념을 접목하면, 국가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국가예산과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3330-01) 및 자본보조(330-03)”로 규정할 수 있다(홍근석, 2020 재인용; 심지현, 2014)

〈표 2-40〉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지방자치단체 자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재원	국내세의 19.24%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재원성격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특정목적 재원
배분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자료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2020),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1)

50) (광의의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국가 이외의 자가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협의),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국고보조금)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의거,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 방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부서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보조율을 근거로 관련 상위부서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중앙부서에서는 할당 재원 규모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에서 결정한 보조사업과 재원배분 규모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 비율을 결정통보한다(이재원, 2019).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재원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심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운영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정치적 타협이나 이권개입의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금 활용의 한계 및 과제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 변화는 중앙정부가 지역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하는 하향식 재정배분 방식에 한계를 가져왔다. 기존의 지역문화 정책은 높은 국고보조비율과 소액다건형 사업의 수행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최근에는 문화도시조성사업 등 재정의 포괄화와 계획의 상향식 접근방식에 대한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기능공유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정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책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재정운영 재량을 확대하는 포괄보조 방식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재량에 방점을 두는 포괄보조 방식은 정부 간 계약과 협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정보람·이재원, 2021).

포괄보조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즉 이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사용에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협약을 통해 정책성과 및 목표를 점검하고, 포괄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년간의 예산을 보장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중앙의 개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순응은 여전하고, 형식적인 재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량을 보장해도 여전히

포괄 '보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입이 계속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정보격차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무책임의 쟁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성과관리 체계 연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2022년도 기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특정 부처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즉 상위 6개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90.2%(71조 6561억 원)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비율이 높고 소액다건형이라는 점이다. 정보람·이재원(2021)은 2021년도 기준 내역사업 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지출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이 23%를 차지하였고, 내역사업수는 276건, 내역사업 1건당 국고보조금은 58억 원이었다. 특히 국고보조금 비중이 20% 이상인 부처 중에서 1건당 내역사업 국고보조금이 가장 작은 부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1〉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2022년)

(단위: 억 원)

부처별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회계별 구성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보건복지부	477,433	462,164	2,454	490	12,325
국토교통부	78,872	27,302	22,118	12,629	16,824
환경부	72,600	187	6,116	58,881	7,416
농림축산식품부	48,483	72	7,526	12,569	28,316
행정안전부	24,168	12,788	11,380	-	-
문화체육관광부	15,005	1,394	5,669	495	7,447
상위 6개 부처 소계	716,561	503,907	55,263	85,064	72,328
전체	794,669	538,707	66,290	98,784	90,889

자료 : 행정안전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또한 박병희 외(2020)에서 최근 5년간(2016-2020)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수와 사업비(규모)가 계속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 문화관광분야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46개였고,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사업당 예산규모가 2.1억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이 50%대에 있는 사업수는 46개 중 30개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소규모 예산사업들이 많았고,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은 사업이 많았다.

〈표 2-4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장단점

측면	장/단점	주요 내용
재원배분	장점	지역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지방자치단체들 간 국비사업 유지를 위한 악탈적 경쟁상황이 발생하면,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재정적 위험이 있음
사업관리	장점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선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관리와 성과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 수 있음
	단점	중앙정부 소관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이 느슨하면 기대만큼 효율성 혹은 효과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쟁점이 발생함 순환보직 이동의 인사관행이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임의적으로 선정·추진되는 공모형 사업의 경우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자료 :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 도입방안 연구 재정의

국고보조금 포괄보조 방식에서 정부 간 계약과 협상을 강조하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으로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및 집행의 재량을 확대하면서 결과지향적인 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재정 책임성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포괄화와 계획의 상향식 접근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향점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역할,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기본 거버넌스 개편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사항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협약’ 방식,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성과 목표에 대한 점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효과 관점 반영 등 행정관리와 평가기법에 대한 개발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성과협약(agreement)형 포괄보조방식 : 협약을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목표 공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계약을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과 지역 우선순위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또한 협약/계약을 보조금보다 폭넓은 범위의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선호와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다만 협약/계약 방식은 높은 거래비용, 상위 정부에 대한 권력 편향 또는 모든 당사자에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평가절차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계약을 위한 비용 급증과 거버넌스의 복잡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사례) 농촌협약(농림축산식품부),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 문화도시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  
 자료 :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 도입방안 연구 재정리

### 3. 정책사업 추진 유형 검토

#### 가. 정부 개발 브랜드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실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문화마을형)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문화적 도시발전 정책 브랜드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개별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사람·공간·프로그램을 이룬바 통합하여 포괄 보조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정책의 시초 격이다. 그만큼 정책 관계자와 현장 활동가 사이에서 관심이 뜨거웠고, 그만큼 많은 지자체(50개)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20년에 지방으로 이양(2019년 3월 13일, 지방이양 관계부처 기능조정 TF 회의 결과)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 도시가 2단계 차원에서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초기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도시가 문화도시에 지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관한 관심이 끊어졌다.

최초 설계였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2단계 전략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론 모든 사업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는 없으나, 정부 스스로 개발한 정책 브랜드를 지역화라는 이름으로 후속조치 없이 무조건 이양하였다는 것은 그 정책 브랜드를 열심히 실행한 지역 특히 그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활동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하나의 사례로, 남원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5년 동안 181개 단체와 주민 4,582명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207개의 프로그램(콘텐츠)이 개발·운영되었다.<sup>51)</sup> 성과가 적지 않았으나, 남원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최종 탈락하면서 이러한 성과가 더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참여한 시민, 그리고 사업을 함께 지켜본 많은 시민은 남원시를 여전히 문화도시로 알고 있지만, 정책만 보면 남원시는 더는 문화 도시가 아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면서 시민의 문화적 활동성과도 문화도시라는 시민의 자부심과 사회적 인식이 중단된 셈이다.

#### 나. 사업 평가방식과 정책 목표

2022년 현재 추진 중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지정 심의에서도 이러한 지표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조성계획 승인 기준 및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에서도 시민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력, 추진체계 등과 같은 거버넌스 측면의 계획에 총 30점의 배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정책사업의 추진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43〉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기준

항목(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25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도시 일반현황 조사·분석 도시 문화자원 및 유·무형자산 조사·분석(역사·문화자원, 인적자원, 문화인프라, 문화행사 등)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 및 진단결과를 반영,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제시	15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비전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지역의 고유·핵심가치 제시 및 반영 문화도시정책 가치 부합 여부	10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60점)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지정분야별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 확보 여부 지역특성에 적합한 추진과정 및 방법론 제시	20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문화 기반의 지역 문화·사회·경제 활성화 및 효과 도시의 브랜드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 기타 공동체 활성화 방안	15
	사회참여 및 소통 방안	도시민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여부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활동지원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확보	15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 가능성	지자체 간, 광역-기초 간 협력방안 제시 여부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방안(도시재생뉴딜(국토부) 등)	10

51) 전북연구원(201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현안과제 최종보고서 참조

항목(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15점)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 협업·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의 규모, 조직, 역할의 적절성 추진조직의 독립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시민·공공·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계획 및 적절성	5
	정책지원 및 재원계획의 합리성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계획에의 반영 여부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보계획 예산확보 및 재정투입계획의 적절성, 합리성	5
	문화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자체 모니터링·환류시스템 구축여부 및 적절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합리성 국비지원 이후, 기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재원확보 및 투입 계획, 인력·조직 등)	5
합 계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9쪽.

법정 문화도시에 있어 예비도시 사업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이자 사업으로 작용해 왔다. 예비사업 추진 이후 본도시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정합성, 도시역량에 20점을 배치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10점,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확대 보장에 20점 총 30점을 거버넌스 부문에 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도시 거버넌스 구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소외계층의 문화권, 전문인력과 인적자원의 확보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문화기반 강화를 점검함으로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개발에 초점이 있음을 평가 지표에서 유추할 수 있다.

〈표 2-44〉 제4차 및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지역적 특성과의 정합성 및 유기적 연계성</li> <li>-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비전 및 세부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됨</li> <li>- 도시진단 기반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비전, 전략, 세부사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됨</li> <li>-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됨</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업 설계·실행·추진역량 확인</li> <li>-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예비사업 추진계획이 적합하게 설계됨</li> <li>- 예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고, 예비사업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함</li> <li>- 예비사업 추진결과,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의 역량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됨</li> </ul>	10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의 확보</li> <li>- 도시 내에서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li> <li>-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이 충분함</li> <li>-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대해 기초-광역 간 업무협약 등을 체결 또는 준비함</li> </ul>	15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문화도시 사업예산을 의결함 (또는 예산 수립 후 의결예정임)</li> <li>■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체계적 구축 및 활성화</li> <li>-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식의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li> <li>-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기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성과를 보임</li> <li>- 예비사업 과정에서 도시의제 발굴 및 사업수행에 대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li> <li>-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적자원(기획자/실행인력 등)을 확보함</li> <li>- 문화에 기반한 도시정책(경영)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함</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협업·연계 추진</li> <li>-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사업 및 관광거점도시(문체부)사업과의 연계 추진 가능성</li> <li>-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li> <li>-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매우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5점</td> <td>4~3점</td> <td>2점~1점</td> <td>0</td> </tr> </tbody> </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4~3점	2점~1점	0	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4~3점	2점~1점	0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보장</li> <li>- 문화도시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문화향유가 확대됨</li> <li>-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거점을 조성 및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기여함</li> <li>-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장이 확대됨</li> <li>■ 지역 내 문화관련 활동 인력(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의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li> <li>-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인들의 문화일거리 생성 및 활동기회 부여가 가능함</li> <li>- 도시에서 활동·정주하는 문화인재 양성 및 육성으로 사회자본 구축이 가능함</li> <li>■ 문화도시를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성장동력 생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li> <li>- 문화도시 추진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사회(주민 등)가 인정하는 도시브랜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li> <li>- 문화가 지역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li> <li>-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의제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짐</li> </ul>	20 15 15								
합계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11쪽.

#### 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유형 제고

국내에서 추진해왔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하드웨어 측면의 사업에서부터 문화 프로그램, 교류 활동, 인적 자원 발굴 등의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측면의 사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업 목적의 경우 모든 사업이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통적 목표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브랜딩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관광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문화를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촉진을 추구하는 사업, 문화적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사업별로

목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시의 자원을 기반으로 교류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문화 도시 브랜드형’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추진하여 문화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적 도시개발형’이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도시 정비를 통해 문화 특화 브랜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 도시 브랜드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추진 예산의 많은 비중이 문화기반을 설립하고 경관을 정비하는 데에 쓰였으나, 해당 사업이 대상 도시의 문화 브랜드 구축에 중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브랜드 구축 사업에 더 가깝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또한 한중일 도시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도시 브랜드형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하드웨어 측면 보다는 도시 내 문화활동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도시개발형’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적 활동과 도시의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부터는 주민 참여, 주민 주도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주요 장치로 주민주도가 제시되고,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 주도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국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과거에는 문화도시 브랜드형 사업을 추구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측면의 발전전략이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문화적 도시 개발형으로 정책 사업이 추진됨을 알 수 있다.

〈표 2-45〉 국내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차원)문화를 통한 지역 특화 발전의 거점 조성, (지역차원)지역경제 발전, 관광진흥,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li> <li>사업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경관 정비, 도시 브랜딩, 문화산업 기반 확충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지원은 지역별로 상이함</li> <li>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조 3천억 원, 부산 영상문화도시: 1,699억 원, 경주 역사문화도시: 3조 3,533억 원, 전주 전통문화도시: 1조 7,109억 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1조 2,577억 원</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한·중·일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 간 교류와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li> <li>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연대감을 형성하여 문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폐막식 행사의 경우 문체부 확보 예산 및 지자체 확보 예산으로 진행</li> <li>한중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부담, 문체부 예산 일부 사업 지원</li> <li>문체부 지원예산은 지자체 경상보조 6억 원, 민간 경상보조 5억 원(당해연도 3억 원, 2년차 1억 원, 3년차 1억 원)</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li> <li>인프라 구축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지원</li> <li>시·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형과 주민협업체를 통한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마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도시형: 5년 간 7.5억 원(국비 3억 원, 지방비 4.5억 원)</li> <li>문화마을형: 3년 간 2억 원(국비 0.8억 원, 지방비 1.2억 원)</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도시 개발의 한계에 따라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됨</li> <li>도시의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원도심 혹은 인접지의 공공공간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2018년): 1개소 당 최대 1.6억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li> <li>2019년 사업: 신규사업은 6억 원 내외(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연속사업은 5억 원 내외(국비 2억 5천만 원, 지방비 2억 5천만 원)</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추구함</li> <li>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를 목표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간 최대 200억 원 지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 제3절 지역단위 문화정책 종합분석

### 1. 정책 인식 및 목표

#### 가. 국내 ‘문화 도시(Cultural City)’의 발굴과 인식 변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문화도시 성과』를 통해 문화도시 정책의 6대 성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성과는 “도시문화 브랜드 확립”으로 도시의 고유한 문화가치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성과는 “문화 거점 확대 조성”으로 주민이 누리는 문화공간이 확대 조성되었으며, 세 번째 성과는 “주민 만족도 제고”로 문화향유 확대를 통해 주민의 도시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네 번째 성과는 “문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도시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성과는 “문화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성과는 “문화의 가치 및 문화적 접근 확산”으로 타 부처 등 386개 협력사업을 이끄는 정책플랫폼이 되어 도시발전 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한다<sup>52)</sup>.

1차 문화도시의 본도시 지정과 실 사업 추진이 2020년부터였기에 사실상 법정 문화도시, 특히 1차 문화도시의 성과는 예비사업의 성격이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년과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기간인 1년을 포함한 약 6~7년 간의 사업 성과로 파악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도시 브랜드에 대해 대두되었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문화 도시’를 표방하며 추진한 정책은 2004년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부산 영상문화도시를 추진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으로 부산영상문화도시(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이상 2007년), 공주·부여백제역사문

52)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1 문화도시 성과』, 2022.5.11.

화도시(2009년) 등 2000년대 국내 문화도시 브랜드가 5개 사업 6개 도시였던 데에서 2022년 현재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본도시)된 곳만 18개 도시가 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추진된 지역거점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확충을 위해 다수의 문화기반시설이 건립되고 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에서는 기존 자원의 활용,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등에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단순 문화시설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원칙에 따라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 자율계정 중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방문화사업 기반 조성’,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이 지방이양되며 정책의 방향 또한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인 만큼, 지역 문화시설과 문화사업, 문화행사 등은 중앙의 지원에 따른 관리가 아닌, 지역이 주민과 함께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문화사업 지원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Cultural City)’가 갖춰야 할 기반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즉,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전통의 계승과 활용, 예술장르를 통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확충 등에서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등으로 지자체의 인식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방법과, 지자체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인지, 합리적인 정책 사업 개발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컨설팅 받고,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방분권의 원칙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때문에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표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일부 초점을 두고 그 근거 자료로 승인통계인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주요 근거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토대로 나타난 지역문화 종합지

수는 도시가 0.208점, 도농복합이 0.078점, 농촌이 -0.059로 나타났고 이 지수는 2014년과 2017년 조사 모두 농촌지역이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에서 ‘문화도시’ 형과 ‘문화마을’ 형으로 분리하여 참여지역의 단위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축소하여 도시의 범위와 현황에 맞게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였다.

즉,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성과는 지역이 ‘문화정책’에 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 고민을 하게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게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이에 대한 주민 참여가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에 큰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정책목표의 현행화 필요성 대두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당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거쳐 국내 대표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이후 국가적 단위의 대표 문화도시로의 육성을 계획하였다. 즉, 광역 내에 대표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문화도시 권역벨트를 구성, 국내의 ‘문화 도시’를 지정 및 육성하여 이 중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며, 더 나아가 세계 대표 문화도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의 육성을 계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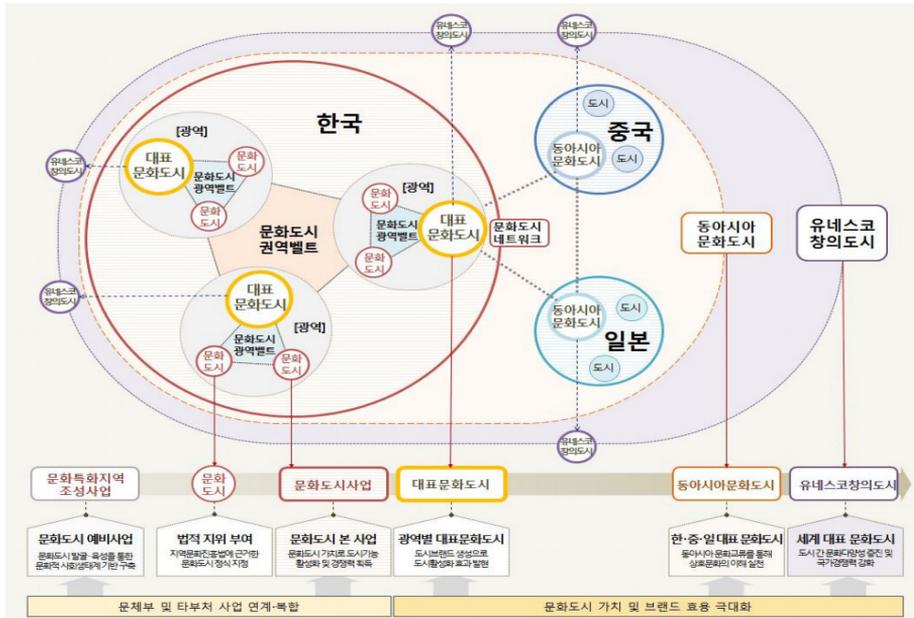
이를 위해 첫 계획 단계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예비사업’의 단계로 실시하여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화 정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법정 문화도시를 공모하였는데, 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시에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법정 문화도시는 ‘예비 사업’이 필수화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2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 시점부터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지방이양되며 지역에 사업 추진이 전적으로 일임되었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이 필수 충족요소로 제외되며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의 타이틀을 쫓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법정 문화도시의 정책 목표에 당위성을 더해 많은 도시들이 법정 문화도시를 성취하길 희망했다. 2021년 11월 기준 1~4차 문화도시 신청수는 134개로 중복 신청 도시를 제외하면 96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희망하였다.

이는 총 지방자치단체의 39.5%가 문화도시로 지정 받길 희망했다는 의미다<sup>53)</sup>.

그러나 실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의 지정 성과를 추가적으로 이룬 도시는 없었다.

[그림 2-18] 문화도시 가치 및 브랜드 효용 극대화방안 구조 제안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237쪽

경남 김해시의 경우 2021년 문화도시 지정과 동시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었으나 가입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문화도시의 지정이 실제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1차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했던 대구광역시의 경우 문화도시 사업 이전인 2017년에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 되었고, 부산 영도구가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부산광역시는 이와 무관하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2014년에 이루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4년 미디어아트 분야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되었고, 같은 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 된 바 있다. 이는 2007년 추진된 지역거점 문화도시에서 파생된 성과로 해석하는 것이

53)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44쪽

더욱 적절하다.

오히려 지역은 국내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무관하게 세계 대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을 별개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2020년에 지정된 1차 문화도시,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법정 문화도시 및 예비도시로 지정된 바 없는 경기 성남시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통해 국가 규모별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성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 3년차인 현재 도시들에 큰 타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이 지역단위 문화정책과의 강제적 혹은 인센티브 성격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자체의 사업 추진 성과 도출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함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도시의 문화자원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지향할 것인지 혹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에 충실하여 문화향유와 다양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도시들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과 주민의 문화향유 및 공동체성 강화가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며, 동시 성과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한다.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유럽 문화도시 등은 지정을 통해 얻는 사업비 혹은 지원금이 목적이 아니라, 지정이 됨으로써 얻은 도시 이미지를 통해 관광, 문화산업 등의 부가효과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도시 이미지' 사업을 지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도시(Cultural City)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주요 사업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가 홍보를 주로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직접 부가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산업적 혹은 컨벤션을 개최하여 도시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정부는 이미 '문화 도시'로의 역량을 갖춘 도시보다, 문화향유와 참여의 기회가 적고 기반시설이 없으며 공동체성이 약화된 도시에 지원하는, '균형발전

을 위한 정책'으로서 기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기 추진되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처럼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을 통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향유 및 기회 확대 차원의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해야한다는 시각이다.

## 2. 정책사업 기반 및 핵심 자원

### 가. 전문인력의 등장과 성장세 대두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행정의 힘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전문가(기획자, 문화예술인)와 공공행정주체(기초지자체), 사회구성원(도시민, 마을주민)이 균형 있는 거버넌스를 이루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문화재단 내 혹은 문화도시지원센터로 대변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을 갖추었고 이 조직을 통해서도 문화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육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로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강원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도 예비사업 단계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부터 전문인력을 포함한 '문화 생태계' 즉,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고민을 주 검토 사항으로 논의 해 왔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주요 목표가 지역주민과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지자체 행정주체와 균형을 이루고 인적 생태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 문화도시형 사업과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도시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p>[그림 2-19]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목적</p>	<p>[그림 2-20] 청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망 계획도</p>
<p>출처 : 원주문화재단(2017), 「2017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이야기」를 담다, 6쪽 발췌</p>	<p>출처 : 청주시청(2016),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청주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016~2020」, 2쪽 발췌</p>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 또한 문화분야 사업이 행정당국에서의 직접 수행보다 전문가가 매개 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지역 문화재단이 점차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법정 문화도시로 대표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공모 사업에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사업의 중요한 실행 요소로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추진 이전에는 파악이 어려웠던 전문가 집단과 주민 사업 참여에 대한 현황이 나타났다. 사례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을 수행하고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2021년

기준 문화도시 전문 인력이 PM·AM 49명, 강사, 튜터, 연구자 등이 155명, 창의문화농부 또는 문화기획자가 201명, 영상·아카이브 복 제작 참여가 78명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문화도시 활동 시민이 1768명(노지문화탐험대, 문화원탁, 휴먼라이브러리 참여 등), 문화도시 참가 시민이 6935명(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신청 기준 수혜자)으로 나타났다<sup>54)</sup>. 이는 문화 전문인력을 기획책임자, 강사 및 연구자, 문화기획자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고 시민참여 또한 사업 직접 참여자와 간접(프로그램 수혜자)참여자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문화기획과 참여, 향유를 분리하여 인식하여 사업을 추진 및 관리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원주시 또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이후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대표 사업인 ‘원주테이블’은 문화도시 사업의 3대 사업목표(문화도시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문화연대, 문화적 도시재생) 하에 다양한 도시의 문제와 문화적 논의를 하는 장으로서, 2021년 기준 53개가 운영, ‘구성원(테이블 주체 및 주요 활동 인원, 즉 매개인력)’ 692명, ‘참여시민(워크숍, 포럼 등 사업수혜인원)’은 12,160명으로 나타났다<sup>55)</sup>. 매개인력을 전문가 집단으로 뚜렷하게 분리하지 않고 테이블을 운영하는 주체자로서 시민과 행정단을 연계하는 역할로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역할을 사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공모로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 지자체 행정단에서 예산집행과 성과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지자체의 성과 결과를 주민 참여, 전문인력의 역할 등 거버넌스에서 찾음으로 인해 전문인력의 역할은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지역에서 ‘문화전문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문체부 공모사업을 지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등으로 존재하는 전문기관에 집행기능을 부여해 전문인력은 전문기관의 의지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회계감사 등 통제적 기능을 하게 돼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감사가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는 전문조직과 인력의 역할과 비전을 중앙정부에서 컨설팅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때문에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대는 고유의 성과이며, 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54)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2021), 「2021 문화도시 서귀포, 서귀포 타임즈」, 32쪽 발췌

55)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2021), 「문화도시 원주 연차보고서 2021」, 112쪽 발췌

## 나. 전문조직 및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통해 전문조직의 구성이 필수화 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발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과 사업기획을 수행하는, 즉 지방정부(지자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자이자 정부가 구상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때문에 공모사업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 공모 단계에서 정부의 사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협업하기를 희망하고, 이들은 실제 다양한 지자체와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내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법정 문화도시가 4차 지정까지 지속되며 전문인력이 문화·예술 기획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컨설팅을 추진하거나 사업 계획을 직접 담당하게 되어 많은 도시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고, 실제 도시의 자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실행가능성 보다 계획 참여 인력에 따라 공모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정책적으로 문화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 이들의 역할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문화, 예술분야 전공자 등을 중심으로 '문화전문인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육성에 힘써왔으며, 이들을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화전문가에 대한 인식은 넓혀왔다. 그러나 법정 문화도시로 대표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공모사업이 종료된 이후, 혹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일에 투입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업교육과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 정책 차원에서 문화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일경험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역량강화 통합지원' 사업이 있다.

〈표 2-46〉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교육과정(정규과정, 심화과정) 기획·운영 및 기관별 양성 지원, 교육운영협의회 운영
지역문화전문인력 일경험 지원	지역 내 문화기관시설 및 민간문화단체 일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및 프로젝트 지원, 권역별 네트워킹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역량강화 통합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관련한 교육 및 공론장 지원	교육콘텐츠 지원, 현장워크숍, 양성 오픈워크숍

출처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rcda.or.kr/business/business1-3.asp>)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정의를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행·집행하여 지역문화를 창조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sup>56)</sup>.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주로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원 및 민간 기획사에서 프로젝트 수행 및 일경험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문화 발굴 사업이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경험하여 전문가로 성장한 인력 특히 청년층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 전문가단 혹은 전문조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 전문인력의 한계는 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준을 학습하고 지역 현황과 조직의 역량에 맞게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 경험을 토대로 민간 생태계로 성장하는 사례보다, 공적 조직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정 문화도시로 대표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들이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들이 직접 생산자로서 생태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강사성격에 그치게 되는 한계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에 영향을 받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도 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참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지자체, 문화재단 등이 공모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계가 있다.

56) 지역문화진흥원, “2021 지역문화인력(신규)공개모집”, 2021.3.3.참고

이는 민간생태계의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의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과 연계된다. 즉, 기존의 문화전문인력이 아직 이해도가 낮았던 문화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기능했다면 이제는 전문 문화조직이 한 지역에 2개 이상 갖춰질 정도로 인식이 높아지고 역할이 다양화 되었으므로, 민간 생태계를 확대하여 전문가들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산업은 시장의 관점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 PPP(공공 민간 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s)의 형태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역 내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치중해 온 만큼 중앙정부가 지역문화정책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그 일환으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지자체의 규모가 작고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적은 도시일수록 문화전문가와 지역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생활문화인'으로 역할하는 곳도 많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화전문가, 지역문화전문가, 지역문화조직 등의 경계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여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 다. 문화기반시설과 클러스터의 필요성 지속 대두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방향성이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심인 것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높으나, 여전히 문화 인프라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실정이다.

청주시의 경우 '동부창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창고는 7개 동으로 구성된 옛 연초제조창의 담뱃잎 보관창고로 1960년대 공장 창고의 원형을 유지하며 문화산업벨트로 구성한 곳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해당 공간에 인프라적 측면에서 기여한 바는 적으나, 기존 계획에 따라 폐산업시설 문화재생(34동), 공연예술종합연습장(35동), 생활문화센터(36동)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클러스터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인 청주문화산업진흥원도 입주해 있어 정책사업의 편의성이 높고 시민 인지도가 높은 공간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인접하여 문화향유 및 참여의 공간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익숙한 곳이 되었다. 때문에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타 사업 공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그림 2-21] 청주 문화도시센터 위치도 및 인근 클러스터 현황



출처 : 청주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www.cjculture42.org/sub.php?code=142>)

이미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들 중에서도 거점공간이 부재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이 참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공간’이라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구조 상 새로운 공간을 매입하거나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자체가 유희공간을 적극 수용하여 거점공간 화 하거나,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혹은 조직에서 이들을 수용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 클러스터 혹은 문화 거점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거점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공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마을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읍·면·동을 만족할 수 없기에, 도시 내에 대표적인 문화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의견도 높다.

때문에 ‘문화지구’의 조성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언급이 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지구는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에서는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문화시설 등 영업시

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 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문화지구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지정 및 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설치하더라도 사업추진 동력 및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문화지구로서 상업시설이 건립될 경우 향후 용도변경, 신규사업 및 폐업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문화산업 측면에서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에 대해 현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다. 문화지구 내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건립 및 설치될 수 있는 타당성이 담보되고, 기 설치된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자체가 갖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곧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있어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준 및 방식과 문화클러스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제3장

## 국내외 유사 정책 및 사업 분석



# 제1절 국내 유관 정책 및 현황

## 1. 타 부처 사업

### 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 1) 사업 내용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의해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2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와 관련한 사업들이 통합되었으며, 2005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적 도시재정비가 실시되었다.<sup>57)</sup> 그러나 재건축 및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통합되지 못한 상태를 지속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5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전략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에 해당하는 정책이다.<sup>58)</sup>

본 사업의 정책 목표는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며, 5대 추진과제로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핵심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 유형의 경우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형에 따라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이 달라진다.<sup>59)</sup> ‘우리동네살리

57) 국회예산정책처(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1쪽.

58) 대한민국 정부(2020), 「100대 국정과제」, 98쪽.

59)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검색일자: 2022.04.28.)

기' 유형은 인구유출과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은 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이 지원된다. '주거지지원형'은 소규모 주택 정비 및 기반 마련,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해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일반근린형'은 거주지와 골목상권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 공동체 및 상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심시가지형'은 공공서비스 및 상권이 쇠퇴된 지역에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이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기반형'은 국가 및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영커시설 구축 등을 통해 경제적 거점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억 원이 투입된다.

〈표 3-1〉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 2) 문화도시 사업 연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장소와 관련된 각 부처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계사업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문화도시와 관련된 가점 적용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과 ‘지역 특화 재생사업’에 해당한다. 먼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의 경우 중점 연계사업 71개 사업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을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사업은 총 17개 부처(청)의 71개 연계사업이 있으며, 그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은 16개, 문화재청의 사업은 4개로 나타난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16개 사업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특화재생 사업에 따른 가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재생 모델을 말하는데, 12개의 특화모델 중 역사·문화 특화모델이 문화도시 사업이 해당하는 항목이다. 역사·문화 특화모델은 구도심의 문화자원 및 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인정사업은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다.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 부처 중점 연계사업

부처명	부처 연계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	① 문화도시 조성 ②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③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④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⑥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⑦ 마을 미술프로젝트 ⑧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⑨ 문화영향평가 ⑩ 열린관광 환경 조성 ⑪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⑫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⑬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⑮ 관광두레 ⑯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화재청 (4)	①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②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③ 생생문화재 ④ 고도(古鄣) 역사문화도시 조성

자료: 국토교통부(2021),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5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화도시 관련 가점 적용기준 및 가점요소〉

1. 각 부처 연계사업 (최대 2점)
  -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 (주요내용)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1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제외한 타부서 사업도 인정
    -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도/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부처연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뉴딜사업지 내 시행이 결정된 경우 또는 컨설팅 사업인 경우에는 인정
  - (인정요건)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인근)지역에서 기획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 컨설팅 등 단순 제도 운영으로 사업비가 없는 경우는 인정 가능
    -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국토부가 사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가 뉴딜사업비(국비지원액) 이상이면 2점, 그 이하인 경우 1점
- \* (예) 중심시가지형의 경우(국비 최대 150억 원 지원), 연계사업 2개의 총사업비(국비 + 지방비)가 150억 원 이상이면 2점

- 활성화계획(안) 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과 가점부여 신청 양식(엑셀)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관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포함된 부처연계사업이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필수

## 2. 지역 특화재생사업(2점)

① 대학타운 특화모델, ② 건축·경관 특화모델, ③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④ 역사·문화 특화모델, ⑤ 지역상권 특화모델, ⑥ 여성친화 특화모델, ⑦ 농촌지역 특화모델, ⑧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 ⑩ 빈집밀집구역 특화모델, ⑪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특화모델, ⑫ 동행사업(골목길 연계 집수리) 특화모델

④ 역사·문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 (주요내용)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

○ (인정요건)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자료: 국토교통부(2021),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9~33쪽.

##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 1) 사업 내용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은 농산어촌 지역들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지역 내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주민주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계획되었다.<sup>60)</sup> 본 사업의 목표는 농산어촌 및 도시의 문제인 인구 과소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과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및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sup>61)</sup> 사업 내용은 5대 분야(주거 지원, 공간 정비, 기반 구축, 공동체 활동 지원, 농촌형 경제 활성화) 15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대 분야에 따른 15대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주거 지원' 분야에는 다양한 농산어촌 살아가기 체형 공간 조성, 지역단위 빈집은행 운영, 다지역 거주 확대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과제가 있다. '공간 정비'의 세부 과제로는 농산어촌 마을 인프라 정비사업 추진, 도농상생 복합거점시설 조성사업 도입, 농촌 공간 계획 제도화가 있으며, '기반 구축'에는 도·농 연계 농산어촌 유토피아 플랫폼 구축, 농산어촌 유토피아 신규사업 도입, 그린케어 공적보험 지원 과제가 있다. '공동체 활동 지원'의 과제는 도시민과 현장을 매개하는 재능은행 도입, 잠재적 관계인구 대상 사전 교류 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유

60) 송미령 외(2020),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8쪽.

61) 송미령(2021),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 자료, 13쪽.

토피아 리빙랩 사업 추진이 있으며, '농촌형 경제 활성화'에는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형 스마트워크 기업 활동 지원, 농장·정원 이용 기회확대 과제가 있다.

[그림 3-1]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목표



자료: 송미령(2021),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언」,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 자료

2018년부터 관련 연구 및 토론회를 추진하여 사업의 윤곽을 잡아가고, 2021년 4월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9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시범사업의 유형은 주거플랫폼(국토부) 4개소,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뉴딜(해수부) 2개소로 구분하여 선정되었다.<sup>62)</sup> 선정지역은 충북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 함양군, 하동군이다.

〈표 3-3〉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선정지역

시도	시군	기간	테마	사업내용		
				기본모델	연계	기타
충북	영동군	22~25	3up 살림일 영동유토피아	주거,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옥천군	21~25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활성화 도모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아카데미, 학부모 교육센터

6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21.12.31.),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시도	시군	기간	테마	사업내용		
				기본모델	연계	기타
	과산군	21 ~25	도농복합형생태· 힐링의 유토피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전남	진도군	22 ~24	살 속 섬, 활력과 여유가 함께하는 신토피아	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특화 수출가공 센터
경북	의성군	22 ~25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토피아 의성	주거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미래교육지구, 다함께돌봄사업, 어린이집기능보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
경남	밀양시	21 ~25	행복수요를 충족시키는 도농 균형발전 밀양 농촌 유토피아 구현	농촌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국립밀양 등산학교, 치유의숲 등
	함양군	20 ~26	새로운 사람들과 즐겁게 함께 사는 농촌 유토피아 함양 실현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생활SOC, 은퇴자 주거복합 단지 등
	하동군	21 ~25	산업화 속 청정오아시스 네이처피아연막마을	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21.12.31.),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 2) 문화도시 사업 연계

시범사업은 주거플랫폼, 농촌협약, 어촌뉴딜의 기본모델과 더불어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 및 어린이집기능 보강 사업 그리고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sup>63)</sup> 사업 대상지는 전술한 연계사업을 추진 시 관련 부처 공모 및 평가에 가점 부여 및 사업 우선순위 등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6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21.12.31.),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 2. 지방정부 자체 사업 추진 현황

### 가. 서울시의 '문화시민도시'

서울시는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산업, 문화복지, 시민문화 등 5개 분야 27대 과제를 계획한 바 있다.<sup>64)</sup> 이에 따라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조성, 덕수궁 보행전용거리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문화적 환경 개선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서울시에서는 2016년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된다.

[그림 3-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자료: 서울특별시(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16쪽.

64) 서울특별시(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7쪽.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문화주권', '문화공생', '문화재생', '문화창조', '문화협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4〉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추진 과제	
시민의 문화권을 선언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권 선언
		시민문화권과 서울문화정책 방향의 간극을 만드는 「문화시민도 시기본조례」 제정
		사업시행 시 문화의 영향을 제고하고, 시민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영향평가제」 실시
		시민의 문화적 실태 모니터링 및 정책환류를 통해 문화권 강화
	시민의 문화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노동 및 학습시간 축소 노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제고를 위한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준한 「문화복지기준」 설정으로 문화격차 해소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서울 문화주간(Week)' 운영
		문화권 침해의 유·무형 장애를 제거하는 「서울형 유니버설 디자인」 시행
		문화활동 시민을 위한 「문화마일리지 제도」 운영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관람자에서 창조자로)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학교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체계로 문화예술교육 전환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설치·운영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시민을 위한 <서울시민문화대학> 설립·운영
	생활속 문화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활동 촉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취약계층 문화활동 촉진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관람 촉진 프로그램으로 예술기반의 문화생활 유도
		역사, 예술, 대중문화 등 테마별 서울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곳곳에 시민 누구나 활동하는 문화의 장(場)을 만들겠습니다	시장, 거리, 공원, 음식점 등 일상생활 공간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화
		생활문화시설 조성 촉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공간 조성
		누구나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는 문화공간 장비공유시스템 구성·운영
		시민 발표형 문화축제 개최
함께 즐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르기반 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역기반 마을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세계인이 찾는 생활문화예술 축제 개최로 동호회 축제 메가 도시화 3년 단위 시민문화활동실태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생활 속 공유모델 발굴·확산
		문화자원을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장터 운영
		문화공유를 위한 통합문화자원공유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화공유기반 사회적 경제 육성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배타적 공동체에서 포용적 공동체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보호·육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예술활동 보호·육성

목표	추진 과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권역별 예술치유센터 설치·운영
		다양한 유형의 문화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민청 확대 조성으로 시민소통 및 공감능력 확대
		공동체 문화를 해결하는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 확대
		범죄예방, 인지건강 디자인 등 사회적 디자인 확대
거점형 문화공간을 생활중심 문화환경으로	일상의 생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공공공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서울은 미술관」(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시장, 골목, 거리 등 일상생활 내 작은 무대를 만드는 「만개(滿開) 무대」 조성
		근현대 건축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시설 확충
	지역 간 문화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자치구 중심의 지역문화지표 형성
		취약지역 문화환경 우선 개선
		권역별 시립미술관 및 어린이미술관 건립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편차에 관계없이 도서관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자치구별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자치구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등 중간지원조직 전문화 지원	
	시민문화자원 사업 등 주민맞춤형 지원사업의 자치구 이양	
문화를 지우는 재생에서 담아내는 재생으로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운영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하겠습니다	문화지역 관리를 위한 문화지구 제도 혁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방안 마련·시행
	권역별 문화특화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심권: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재생을 통한 도심권 활성화
		동북권: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문화 클러스터 조성
		서북권: 창조경제 지원을 네트워크화한 문화창조벨트 조성
동남권: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스포테인먼트 존 조성 등 대중문화 산업 공간 조성		
서남권: G-밸리 중심의 디지털산업과 예술이 융합되는 서남권 디지털 문화클러스터 조성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에서 존중하는 도시로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 비전 선포 및 <역사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매장문화재 발굴·보존 체계 확립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 전승활동 지원
	모든 시민이 서울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과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및 역사영향평가제 도입
역사와 현대를 공존시키는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조성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자산으로 육성		
역사문화자원 활용성 제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목표	추진 과제	
	세계로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활용체계 구축
		한성백제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성균관묘 문묘, 용산묘원 등 2천년 역사도시의 상징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계 및 북한과의 역사교류 추진
우리나라 창조경제 허브에서 세계 창조경제 허브로	문화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디자인, 패션, 공예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서울의 문화창조 산업으로 육성
		권역별 창조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문화기술 융복합으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서울문화기술융복합센터> 조성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4대 문화축제 개최
		다양한 문화축제 개최 지원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서울문화와 국제문화의 교류 활성화
		혁신적 문화창조의 전진기지로서의 5대 문화시설 건립
		서울 곳곳을 즐기는 창조적 지역 관광 활성화
서울을 창의인재와 예술인이 찾는 도시로	예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거환경 개선
		예술인 노동권 보호·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시행
		예술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서울형 예술인패스> 개발·운영
		각종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내 예술가 단체 입주 지원
		예술인의 자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화
	성장단계에 맞춘 예술창작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성장단계별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예술인 운영 창작 및 연습공간 지원
		자매우호 도시 간 예술인 교류 지원
	양질의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예술인 성장과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예술발전종합계획」 수립
		공공분야에 3,000개 이상의 예술인 일자리 창출
공공갤러리, 아트뱅크, 아트페어, 공연예술마켓 등 다양한 예술시장 확충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문화정책을 관 주도에서 시민과 전문가 중심의 협치로	민관협치를 관 주도에서 시민과 전문가 중심의 협치로	서울형 협치 모델 2.0에 기반한 비전 2030 문화협치 모델 완성
		문화분부와 산하기관과의 위상 및 관계 정립을 위한 조직 진단 및 혁신
		광역과 기초 간 문화정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 문화자치 기반 강화
	문화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도시조례, 문화시민도시조례, 문화예술진흥조례 3대 조례 제정으로 법체계 정비
		문화분야 순계예산 3% 이상 투자 확보

자료: 서울특별시(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20~120쪽.

2022년에는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Digital Culture City)’을 제시하였고,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비전 아래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sup>65)</sup> 서울시가 제시한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내 손 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미래 융합 예술시장에서 예술 창작자들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림 3-3] 2022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비전 및 전략



자료: 내손안에서서울(2022.02.25.),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본격화! 세계 5대 문화도시 목표”

3대 전략으로 ①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분야에 768억 원, ② 시민문화 향유도시 분야에 3,006억 원, ③ 2천년 역사도시 분야에 2,306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총 6,0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대 핵심과제에는 예술기술의 융복합화 추진(446억 원), 빛과 미디어파사드의 도시 조성(300억 원),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현(22억 원), 문화예술이 숨쉬는 한강, 지천 조성(72억 원), 4계절 축제를 즐기는 도시 구현(127억 원),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확충(1,163억 원), 문화예술 융성플랜 추진(1,644억 원),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및 활용(1,643억 원), 역사문화유산 시설건립(552억 원), 세계적 성곽도시 서울의 재발견(111억 원)이 있다.<sup>66)</sup>

6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2.02.23.), “서울시, 매력과 감성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도약·세계 5대 문화도시로”

66)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2.02.23.), “서울시, 매력과 감성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도약·세계 5대 문화도시로”

〈표 3-5〉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3대 전략 및 세부 과제

3대 전략	세부 과제
예술과 기술이 연결되는 ‘디지털감성문화도시’	DDP를 ‘디지털 디자인 플랫폼’으로 구축해 2.0시대 개막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리빌딩 프로젝트’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개장
	융·복합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융합예술 저변확대 및 창작자 역량 강화
	세종문화회관에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운영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LED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로 교체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운영 확대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100년 미디어 아트쇼’
	서울공예박물관 온라인 뮤지엄 오픈
	한성백제박물관 증강현실 게임 앱
	서울역사박물관 파노라마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3D 디지털콘텐츠 전시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시민문화 향유도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노들섬-선유도공원-난지공원 잇는 공공미술 랜드마크
	수변공간에 재미있는 ‘디지털 편(fun) 디자인’ 확대
	‘365거리공연’ 확대 운영
	서울재즈페스타, 서울 드림페스티벌, 서울국제비보잉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뮤직페스티벌, 야간경관축제, DDP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축제 개최
	삼청각 개관
	국내 최초 아트북 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 개관
	미술관+기록원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개관
	‘공연본날’(舊. 학생 공연 관람 지원사업) 추진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및 인프라 지원
	저소득층 예술영재·장애청소년 지원사업
	책 읽는 서울광장
	버스정류장에서 즐기는 미술 ‘서울 아트스테이션’
	예술공감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2천년 역사도시’	2천년 서울 역사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종합계획’ 첫 수립
	2천년 고도(古都) 풍납동 토성 디지털 체험관 조성
	‘서울 성북동 별서’ 단계적으로 매입·복원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통합 유네스코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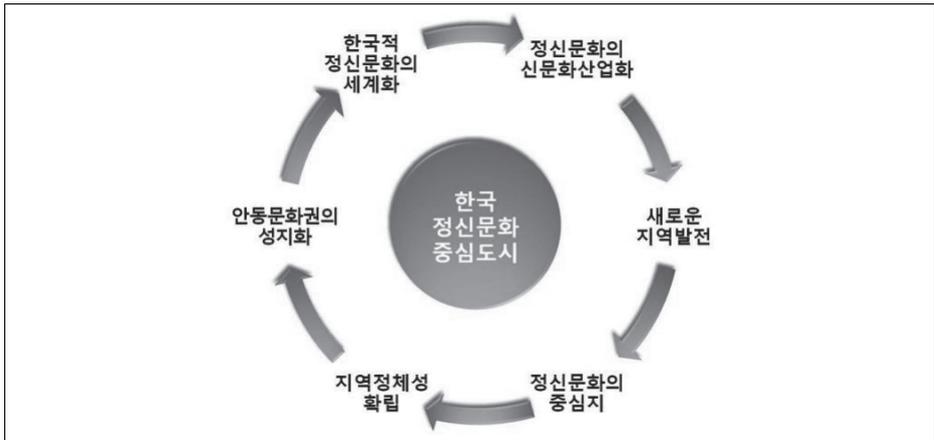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2.02.23.), “서울시, 매력과 감성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도약…세계 5대 문화도시로”

## 나. 경상북도 정신문화 중심도시<sup>67)</sup>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북부권 9개 시·군 지역(안동시, 예천군, 봉화, 영양군, 의성군, 상주시, 청송군, 문경시, 영주시)을 중심으로 정신문화를 발굴 및 계승하는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계획했다. 정신문화 중심도시는 경상북도가 지니고 있는 정신문화자산을 계승 및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창조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산, 광주, 경주, 전주, 공주·부여가 추진한 지역거점 문화도시의 성과를 지역적으로 확산하고자 시작했다.

조성사업의 비전은 ‘한국적 정신문화의 세계화’, ‘정신문화의 신문화산업화’, ‘새로운 지역발전’, ‘정신문화의 중심지’, ‘지역정체성 확립’, ‘안동문화권의 성지화’로 나타난다.

[그림 3-4] 정신문화 중심도시의 조성 비전



자료: 경상북도(2014),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01쪽.

조성 사업 분야는 ‘정신문화의 현대화’, ‘풍류문화의 재발견’, ‘건강한 삶과 정신문화 진흥’, ‘한국 정신문화의 길 조성’으로 나뉘지며, 접근 방향은 지역 정신문화 브랜드 전략의 도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경북북부 지역 정신문화 브랜드의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5대 핵심사업은 ‘도청 신도시 문화환경 조성사업’, ‘정신문화 콘텐츠 로드 조성 사업’, ‘지역 브랜드 콘텐츠 제작 사업’,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사업’, ‘컨트롤 타워 및 프로그램 운영동력 마련 사업’으로 나타나며, 핵심사업에 따른 세부 사업은 총 70개로 구성되어 있다.

67) 경상북도(2014),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표 3-6〉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총괄표(안)

분류	대상지역	사업명	주제	사업비		
도청신도시 문화환경 조성사업 (5)	신도청이전지	신도청 및 개도 700주년 기념상징물 조성		750		
		경상북도 역사자료관 건립		750		
		정신문화 거리 조성		120		
		한옥 마을 한옥체험관 조성		200		
		종기문화진흥원 설립		300		
		소계		2,120		
정신 문화 콘텐츠 로드 조성 사업 (43)	전체 시군 대상사업	정신문화자원 조사 사업		27		
		역사인물 유적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27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		5		
		전통마을 전선 지중화사업		150		
	시군 연계 사업	문경	아리랑 민족음악센터	옛길	300	
			문경, 상주		견훤 트레킹로드 조성	110
		문경, 상주	영남대로 마패길 조성		220	
		의성	최초의 조선통신사 울정선생 기념사업		200	
		상주	경상감영(상주관아) 성문 복원 사업		434	
	개별 시군 사업	안동	선유지몽 사업(낙동강에 흐르는 안동의 정신문화)		328	
		안동	천년누리 문화마당 조성		450	
		봉화	봉화 누정순례길 조성 사업		105	
		의성	조문국 역사문화 탐방로 및 야외공연장 조성		325	
		의성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사업		50	
		상주	국립상주동학박물관 건립		225	
	선비 문화 배움의 길 (12)	전체 시군 대상사업	선비문화수련원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		75	
			유휴시설 활용 정신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		270	
		시군 연계 사업	영주, 봉화	창백리 기념사업(성이성 유적 활용사업)	문학 길	375
			봉화	설죽 문학공원 조성사업		169
			영양	문학치유 힐링센터 건립 사업		300
			청송	객주 여각 조성사업 계획		80
		개별 시군 사업	영주	회한 안향 기념사업		300
			영주	삼판서 및 정도전 기념사업		300
			청송	'얼'문화체험관 조성사업		70
			청송	신성계곡 효체험센터 및 선비풍류체험장 조성		270
			상주	조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승사업		70
			구미	한국사립문화교육원 건립사업		120
총의 정신 선양의 길 (6)	전체 시군 대상사업	경북 사상 트레일 조성 사업		300		
		개별 시군 사업	안동	낙동공원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300	
	예천	예천 충효자원 관광명소화 사업		344		

분류		대상지역	사업명	주제	사업비	
생활 문화 체험의 길 (10)		문경	당교전투 및 농가월령 기념관 설립		110	
		청송	항일의병 기념공원 성역화 사업		80	
		의성	총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100	
	시군 연계 사업	전체 시군 대상사업	오일장과 지역문화 연계 사업		45	
		안동	수운잡방 전통음식연구 지원 사업	전통 음식	45	
			영양	여중군자 장계항 기념사업		100
			상주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 지원 사업		45
			예천	금당실 습산지 정신문화 체험마을 정비사업	십승 지길	250
			영주	금계촌 정감록 녹색테마공원 조성		125
			봉화	서벽 마을정비 사업		125
	개별 시군 사업	안동	안동시립민속박물관 부설 어린이민속박물관 건립 사업		250	
		상주	대한민국한복진흥원 건립		250	
	소계					8,347
	지역브랜드 콘텐츠 제작 사업	안동	수상 테마쇼 '선유지몽(船遊之夢)' 제작		30	
예천		웹게임 '도시복' 제작		6		
문경		3D영상콘텐츠 '지워진 세계사 당교대첩' 제작		10		
영주		웹드라마 '청다리 밑에서 주워 왔지' 제작		10		
봉화		웹툰 '여류시인 설죽' 제작		6		
영양		관객 체험극 '장계항의 손맛' 제작		14		
청송		드라마 '객주' 제작		100		
의성		가무악극 '잊혀진 조문국, 왕국의 부활' 제작		28		
상주		독립영화 '꽃신' 제작		30		
9	소계			234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사업 (6)	전체 시군 대상사업	지역 연구 활성화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50		
		고문헌 국역 및 외국어 번역 지원 사업		50		
		지역학 연구기관·단체 육성		50		
		전통문화산업 창조 콘텐츠 벨리 조성		900		
	신도청 이전지	재외동포 한국문화연수원 건립 사업		300		
	안동	전통문화자원 명품 창작타운 구축		200		
소계					1,550	
컨트롤 타워 및 프로그램 운영 동력마련 사업 (7)	컨트롤 타워	전체 시군 대상사업	한국정신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 설치		-	
			한국정신문화진흥재단 설립		-	
			경상북도 문화재단 설립		-	
			한국국학진흥원 사업 위탁		-	
	프로그램 운영 동력	전체 시군 대상사업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사업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정례화				125		
스토리텔러 및 스토리 마케터 양성 사업				20		
소계					145	
70	총계			12,396		

자료: 경상북도(2014),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17~219쪽.

### 3. 기타 정책 연계 사례

#### 가. 문화영향평가

##### 1) 평가 개요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종 계획 및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sup>68)</sup>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영향평가가 제도로 규정되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평가를 시행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었다.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지표는 3대 평가영역인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아래 6개 지표인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7〉 문화영향평가 지표체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공통 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특성화 지표	※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평가의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사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으로 도시 및 지역 개발과 관련 계획 및 정책, 공간 개발·재생 관련 계획 및 정책, 문화유산·문화경관 관련 계획 및 정책, 문화

68)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4.jsp](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4.jsp)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정책, 문화 부처 외 문화 관련 계획 및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69)</sup>

평가 유형은 자체평가(진단평가, 약식평가)와 전문평가(기본평가, 심층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소관기관의 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 방식이며, 전문평가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제3의 전문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표 3-8〉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특징

평가 유형	평가 심도	평가내용	평가 기간	평가 수행 방법	평가자
자체 평가	진단 평가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1 개월	정책담당자가 진단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 의견 송부→반영계획 제출	정책 소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약식 평가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1~2 개월	정책담당자가 약식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의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정책 소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 전문가 평가위원
전문 평가	기본 평가	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 평가	4~6 개월	외부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전문 평가수행기관
	심층 평가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6~7 개월	외부 평가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및 주민 설문조사→반영계획 제출	전문 평가수행기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4쪽.

## 2) 문화도시 연계 내용

문화영향평가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같은 문화도시 관련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영향평가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였고, 2020년부터는 필수 연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문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했다.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부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약식평가 이상을 수행한 경우에만 문화영향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문화도시 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과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를 수행했으며, 2018년에는 김해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영천 문화특화지역(문

69)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3쪽.

화도시)조성사업이 전문평가를 추진했다. 2019년에는 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 오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통영 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읍 문화도시 조성사업,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제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전문평가를 수행했다. 2020년에는 7개의 사업이 전문평가를 실시했으며, 14개의 사업이 진단평가, 12개의 사업이 약식평가를 수행했다.

〈표 3-9〉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사업(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연도	구분	사업명	소관기관
2017년	전문평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강원 원주시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전남 남원시
2018년	전문평가	김해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영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사업	경북 영천시
2019년	전문평가	수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경기 수원시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강원 춘천시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	강원 강릉시
		오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기 오산시
		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남 진주시
		통영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남 통영시
		정읍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북 정읍시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남 나주시
2020년	전문평가	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지역 자율형)	경기 김포시
		거창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남 거창군
		밀양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경남 밀양시
		여민락 3.0 행복문화수도 세종(세종 문화도시 조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부평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자율형) *단계별평가	인천 부평구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지역자율형) *단계별평가	강원 춘천시
		익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북 익산시
	자체평가 (진단)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강원 속초시
		군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사회문화중심형)	경기 군포시
		시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경기 시흥시
		의정부 문화도시 조성 계획	경기 의정부시
		안동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북 안동시
		부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지역 자율형)	부산 수영구
		서울 영등포구 문화도시 지정 추진	서울 영등포구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 연수구		
		광양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전남 광양시

연도	구분	사업명	소관기관
		목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역사전통형)	전남 목포시
		서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충남 서산시
		홍성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	충남 홍성군
		창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반기선정	경남 창원시
		해남군 문화도시 조성계획 *하반기선정	전남 해남군
	자체평가 (약식)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지역자율형)	강원 춘천시
		김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예비사업 (문화도시형)	경남 김해시
		성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북 성주군
		부평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자율형)	인천 부평구
		순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남 순천시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회문화 중심형)	전북 남원시
		완주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전북 완주군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역사전통 중심형)	충남 공주시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충북 청주시
		인천서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반기선정	인천 서구
고창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반기선정	전북 고창군		
군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반기선정	전북 군산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10쪽~14쪽.

## 나. 지역형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

### 1)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지역형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실행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사업 공모, 관리, 컨설팅 등을 담당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80백만 원으로 1개 지역 당 총 25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역형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은 지방분권화 흐름에 따라 문화 분야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을 얻어야 한다는 인식이 추진 배경이 되었다. 특히 지역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사업 방식으로 지원되던 정책 사업들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 데 발맞추어 생활문화 정책 사업들도 기존에 여러 단위로 나뉘어져 지원되던 방식에서 통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시범 추진한 것이다. 기존 추진 사업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등이 있으며, 2021년에는 개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지역형 생활문화 지

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역형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의 시행 목적은 지역 주도의 생활문화 환경 진단에 따른 지역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지역의 문화역량 축적을 통한 지역문화정체성 형성 및 문화자치 기반 마련 총 네 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형성 및 확장, 생활문화자원 간 연계 및 협력 기반 마련,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기회 확대,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 자율 성과목표 실현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3-10〉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구분	사업 내용	
생활문화 주체, 생활문화 활동, 생활문화 공간 등의 생활문화 자원 간 연계·협력 활동  (전체 사업규모의 50% 내외로 구성)	구분	내용
	우리지역 작은변화형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 지원
	우리지역 가치발견형	우리 지역의 문화가치를 찾아보고, 알아가며, 만드는 활동 지원
	(공동의 목표 설정)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의 변화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목표 설정에 따른 과제 도출	
	(주체-활동-공간 연계)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주체, 공간들과의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연계·협력 활동(협의체 구성, 워크숍, 회의 등)	
	※ 사업참여 핵심주체 간 협력: 공동체-공동체 간, 공동체-동호회-공간 간 등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간 적극적인 협력 프로그램 필수 ※ 지역 안 생활문화 활동 주체 간 협력: 공동체, 동호회 등의 각 개별 활동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업 외부 연결 주체와의 연계·협력 지향 (예: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웃마을 주민, 이웃 공동체, 지자체 공무원 등도 포함)	
	협의체 구성 외에도, 지역 다양성과 자율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 활동도 권장	
	(생활문화 공간)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공간의 경우, 지역 내 다양한 공공-민간공간 주체와의 협력 활동 거점으로서의 역할 중점 지원	
	※ 생활문화 공간 간, 공간과 생활문화 활동(주체)과의 협력 활동 지원 ※ 생활문화 공간은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 공간에서부터 민간 생활문화 공간까지 다양한 지역 생활문화 공간을 포함 ※ 단, 생활문화센터 참여 시 추가 예산 지원 가능(지역 당 40백만 원 이내/1개 센터 당 최대 20백만 원 / '20년 12월 기준 개관·운영센터 대상)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2), 『2021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123쪽

2021년 공모 이후 총 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직들이 신청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역은 총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서울 은평구, 강원 영월군, 경북 영덕군,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이다. 각 사업은 지역 내 신청 단체가 별도로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생활문화동호회,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등이 주 사업 추진 주체가 되었다. 각 사업 주체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를 모집하거나 협업체계를 이루는데 총 61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해당 사업에 네트워크를 이루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지역

광역	기초	지역특성	단체명	사업명	예산(백만 원)		단체 수(개)
					공동체	동호회	
서울	은평구	도시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소문 날 잔치 -‘이쯤이면 날 만도 한데’	공동체	144	13
					동호회	56	
강원	영월군	농산어촌	영월군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연합회	영월형, 생활문화거점 활성화 38417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공동체	200	12
					센터	40	
경북	영덕군	농산어촌	영덕문화관광재단	2021영덕생활문화 활성화사업	공동체	200	11
					센터	40	
경남	김해시	도농복합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김해 다-가치 프로젝트	동호회	200	13
	창원시	도농복합	창원시성호생활문화센터	다시, 마을에서	동호회	200	12

## 2) 문화도시 관련성

지역형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과 사업추진 방식에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유사성을 보인다. 지원 대상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통합형 예산 지원이라는 점,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체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사업을 추진·관리하고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전담기관이기도 한 지역문화진흥원이 사업 운영과 관리·지원을 담당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림 3-5]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체계



한편 2021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도시들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준비하거나 이미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라는 점에서 사업 연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사업시행 주체인 김해문화재단 내 문화도시센터를 갖추고 있어 사업추진 체계, 프로그램 등이 법정 문화도시로서 추진하는 사업 간의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남 창원시와 강원 영월군의 경우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당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으나, 2021년 12월에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승인되어 사업 간의 연관성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공모 시점 이전부터 약 1년 이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 및 사업 체계도 갖추어야 하기에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준비과정에 도움이 되었거나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지역의 행정조직과 관련 공공단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등)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지만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의 경우 관련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 조직과 사회적기업, 동호회 등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2절 국외 유사 정책 및 사업 현황

### 1. 국제사회 흐름

세계의 도시들은 1, 2차 세계대전과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도시 내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문화재의 파괴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폐허가 생겨나는 등의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때 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내 훼손된 유형 인프라인 랜드마크를 변형하고 가로환경재생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변화를 꾀하는 문화도시의 초기모형이 나타난 것이다.<sup>70)</sup> 나아가 물리적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문화 이벤트 추진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꾀하는 사례들도 등장했다. 미국의 도시들과 빌바오(Bilbao), 리버풀(Liverpool), 글래스고(Glasgow), 바르셀로나(Barcelona) 등의 유럽 도시들이 문화를 활용하여 도시를 브랜딩하고 활성화시킨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이와 같이 문화를 통해 도시 변화를 꾀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도시 정부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문화정책을 결합시켜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문화적 인프라 조성과 문화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고용창출 및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지역 내 문화자원과 공동체, 장소정체성 등을 강조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가져오고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sup>71)</sup> 정부는 초기에 첫 번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였으나, 물리적인 개발방식과 일회성 이벤트로 지속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 자원, 공동체와 같은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전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70) 유승호,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문화도시』, 가세, 2014, 101쪽.

71) 계기석(2010),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전략모형의 적용방향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3집, 177~178쪽.

도시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논의들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사사키 마사유키(佐々木雅幸)가 주창한 ‘창조도시’와 프랑코 비안치니(Franco Biannchini), 론 그리피스(Ron Griffiths), 그레이엄 에반스(Graeme Evans), 루크 빈스(Luke Binns) 등이 제시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재생’이 있다. 특히 그리피스와 에반스는 문화 기반 도시재생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피스(1995)는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도시 활성화의 매개체로 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활용 전략에는 세 가지 모델인 통합 모델, 문화산업 모델, 홍보 모델이 있다고 설명한다.<sup>72)</sup> 통합 모델(integrationist model)은 문화 프로젝트가 시민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도시의 소속감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고 문화산업 모델(cultural industries model)은 문화 산물의 생산과 보급을 부의 창출의 중요한 형태로 보고 시청각 산업, 출판 및 패션 디자인과 같은 문화 산업에 주목하는 전략이며 홍보 모델(promotional model)은 예술을 도시 홍보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예술 소비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에반스(2005)는 공공문화기반시설 및 문화 이벤트를 통한 전략인 문화 주도 재생(Culture-led regeneration), 경제, 사회, 환경 분야와 문화활동을 연계하여 장기적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인 문화적 재생(Cultural regeneration), 도시 내 문화활동이 민간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재생을 불러오는 전략인 문화와 재생(Culture and regeneration)으로 구분하여 문화 기반 도시재생을 설명하고 있다.<sup>73)</sup>

이처럼 도시발전에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존재한다. 정책적 사례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수도’가 있다. 유럽문화수도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들로부터 성공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중남미, 아랍 지역,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되었다. 한국도 유럽문화수도와 같은 서구사회의 성공사례에 주목하여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등의 한국형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72) R. Griffiths,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Vol.12, 1995, pp.254-255.

73) G. Evans,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42, 2005, pp.9-12.

## 2. 국제기구 및 국가별 현황

### 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1983년 유럽 문화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문화부 장관인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에 의해 제안된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은 1985년 정부 간 이니셔티브로 구체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이 더 친밀감을 가지고 공통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sup>74)</sup> 선정도시들은 전시, 공연, 퍼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교류를 통한 회원국 간 연결과 더불어 문화를 활용한 도시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유럽문화수도의 추진 목적을 ‘유럽 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성 강조’,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 기념’, ‘유럽 시민의 공통 문화 영역에 대한 소속감 증대’, ‘도시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 촉진’으로 설정했다.<sup>75)</sup>

유럽문화수도(ECOC)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위해 설계됨

- 유럽 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성 강조
-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 기념
- 유럽 시민의 공통 문화 영역에 대한 소속감 증대
- 도시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 촉진

이 외에도 이 이벤트가 다음을 위한 훌륭한 기회임을 보여줌

- 도시재생
-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증진
-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
- 도시의 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음
- 관광 증대

자료: <https://ec.europa.eu/culture/policies/culture-in-cities-and-regions/european-capitals-of-culture>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먼저 1990년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74) Gomes, P., & Librero-Cano, A. (2018). Evaluating three decade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me: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2(1), pp.3-4.

75) <https://ec.europa.eu/culture/policies/culture-in-cities-and-regions/european-capitals-of-culture>

않은 유럽의 국가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1985년부터 2004년까지는 정부 간 합의에 의해 매년 도시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했으나 2005년부터는 유럽연합 기관들이 행사를 유치하는데 개입하고 있다.<sup>76)</sup> 또한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ies of Culture)로 시작했던 본 사업은 1999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결정에 의해 진행중인 현재 유럽문화수도의 선정 절차는 2020년부터 2033년까지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45/2014/EU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sup>77)</sup> 해당 결정에 따르면 사업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6년 전에 유럽문화수도 타이틀을 얻게 될 국가가 선정되며, 해당 국가는 일반적으로 문화부를 통해 사업 신청 요청을 알리고 유럽문화수도를 희망하는 도시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 시작 5년 전 후보 도시 선출 회의를 위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고, 패널은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한다. 패널의 보고에 근거하여 회원국은 후보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게 된다. 회원국에서 최종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선출 회의 후 9개월 이내에 후보 도시와의 선정 회의를 위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며, 패널은 후보도시가 사전 선정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평가한다. 패널은 1개의 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권고와 함께 최종 후보도시에 대한 선정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원국과 위원회에 제출한다. 회원국은 선정 보고서에 따라 유럽문화수도 타이틀을 수여 받을 도시를 지정하고 사업 시작 4년 이내에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지한다. 선정도시는 1년 동안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로부터 ‘Culture 2000 framework programme’ 지원금을, EU펀딩 프로그램으로부터는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sup>78)</sup>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별도 예산과 민간기업의 후원금도 지원받고 있다.

76) 홍익표·이종서(2012), 「EU의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도시차원의 전략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U연구』, 제32호, 138쪽.

77)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a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for the years 2020 to 2033 and repealing Decision No 1622/2006/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D0445>) (검색일자: 2022.05.02.)

78) 김선영·이익신(2019), 「유럽문화수도 사례로 본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방향성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 42집, 145쪽.

사업연도 이전 준비 기간 동안에 전문가 패널에 의한 모니터링 또한 진행된다. 위원회는 패널과 함께 지정된 도시가 참석하는 모니터링 회의를 사업연도 3년 전, 18개월 전, 2개월 전 등 총 3회 진행한다.<sup>79)</sup> 패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도시가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지정도시, 회원국, 후보 국가에 전달해야 한다.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Athens)를 시작으로 매년 도시가 선발되어 현재까지 총 75개의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1999년까지는 1개 도시가 선정되고 대체적으로 회원국의 수도가 사업 대상지가 되었으며, 2000년에는 아비뇽(Avignon), 베르겐(Bergen), 볼로냐(Bologna), 브뤼셀(Brussels), 헬싱키(Helsinki), 크라쿠프(Kraków), 프라하(Praha), 레이카비크(Reykjavik),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가 동시에 선정되었다. 그 이후에는 1개 도시가 선정된 2003년,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 2개 도시가 지정되었고, 2010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3개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선정 도시는 도시 내 문화활동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같은 해 지정된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6] 2016 유럽문화수도 산 세바스티안



자료: <https://www.sansebastian2016.eu/>

[그림 3-7] 2016 유럽문화수도 발레타



자료: <https://valletta2018.org/>

79)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a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for the years 2020 to 2023 and repealing Decision No 1622/2006/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D0445>) (검색일자: 2022.05.02.)

## 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

### ① 사업 내용

창조성, 창조도시, 창조계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유네스코는 다양한 도시들이 창의산업의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개도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을 장려하며, 현대 미술, 패션, 공예, 음악, 디자인 등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sup>80)</sup>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 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창의성을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로 활용하고자 회원도시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고무·향상시킨다.
- 문화 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의 창조, 생산, 분배, 확산을 강화하고;
-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를 개발하고 문화 분야 창작자와 전문가를 위한 기회를 확장하며;
- 특히, 소외집단·취약집단과 개인을 위한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향유, 문화생활의 접근성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 및 계획 전반에 합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도시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경험, 지식, 모범 사례 공유;
-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 전문적이며 예술과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 창의도시들의 경험에 대한 학습, 연구, 평가;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 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172쪽.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는 시 정부의 사업 준비를 통해 자문단 구성과 지역의 창의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4년의 중기 전략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 도시는 7개의 창의분야(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신청 후 유네스코 사무국은 내부 전문가 사전평가를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 또한 실시한다. 내·외부 심사 이후 최종적으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가 선정된다.

80)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20년도 개정판」, 20쪽.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창조도시로 지정되었다.<sup>81)</sup> 가입 도시는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창의도시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워크숍을 추진하여 동일 분야 도시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8] 유네스코 네트워크 연례회의



자료: 일간 경기(2018.06.14.), "부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그림 3-9]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서브네트워크 회의



자료: 이천시 홈페이지  
(<https://www.icheon.go.kr/intropage/index.html>)

## ② 국내 현황

한국은 2010년 서울시와 이천시를 시작으로 총 11개의 도시가 지정되었다.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이천시(2010), 진주시(2019), 김해시(2021)가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 서울특별시(2010), 영화 분야에 부산광역시(2014), 미식 분야에 전주시(2012), 문학 분야에 부천시(2017), 원주시(2019), 미디어아트 분야에 광주광역시(2014), 음악 분야에 통영시(2015)와 대구시(2017)가 있다.

81) <http://map.unesco.or.kr/creativecities/> (검색일자: 2022.05.02.)

〈표 3-12〉 한국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현황

분야	도시	지정연도
공예와 민속예술	이천시	2010
	진주시	2019
	김해시	2021
디자인	서울특별시	2010
영화	부산광역시	2014
미식	전주시	2012
문학	부천시	2017
	원주시	2019
미디어아트	광주광역시	2014
음악	통영시	2015
	대구시	2017

한국의 가입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인 정회원 도시와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인 예비회원도시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회 이상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예비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sup>82)</sup>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교류는 연례회의 이외에도 국내 가입 도시 간의 교류, 가입 도시와 예비회원도시 간의 교류, 국내 가입도시와 해외 도시와의 교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회원도시 간의 교류 사례를 살펴보면, 음악창의도시인 통영시와 대구시는 도시의 대표공연 기관인 통영국제음악재단과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교류협력 활동을 약속한 업무협약식을 2021년 8월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솔라시안 유스오케스트라 공연과 피아니스트 백건우·김선욱 협연 공연과 메조 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리 사이틀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sup>83)</sup> 회원도시와 예비회원도시의 교류는 음악창의도시인 통영을 이끄는 통영국제음악재단과 음악창의도시를 희망하는 예비회원도시인 울산의 울산문화재단이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창의도시 거버넌스 구축’, ‘창의 문화자산 홍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연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82)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20년도 개정판」, 88쪽.

83) 경남매일(2021.08.11.), “거장·신진 연주가 통영서 ‘아름다운 선율의 만남’”, 한국경제(2022.03.11.),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통영-브르노를 잇는 특별연주회”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84)</sup> 해외도시와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속예술 도시인 이천시는 프랑스 리모주(Limòtges), 미국 산타페(Santa Fe), 중국 징더전(景德鎮)과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도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sup>85)</sup>

#### 다. 영국 문화도시, 이탈리아 문화수도, 프랑스 문화수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수도 사업과 별개로 자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유럽문화수도 선정도시인 리버풀 사례를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확인하였고, 이에 영국 문화부에서는 침체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영국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를 추진하였다. 이탈리아는 2019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도시들이 참여함에 따라 자국 자체 사업인 ‘이탈리아 문화수도(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를 추진하여 문화 분야에서 이탈리아 도시의 계획 및 구현 능력을 지원, 장려, 향상시키고자 하였다.<sup>86)</sup> 프랑스의 경우도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사업을 계획했다. 유럽문화수도가 규모가 큰 도시가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자체 사업은 규모가 작은 도시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프랑스 문화수도(Capitale Française de la Culture)’ 사업을 창안해냈다.

##### ① 영국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sup>87)</sup>

영국 문화도시 사업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며, 사업 주무 부처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이다. 본 사업은 영국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4년에 한 번씩 문화도시를 선정하며, 선정된 도시는 문화 주도 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

84) 울산문화재단(2021.10.01.), “(재)울산문화재단-(재)통영국제음악재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85)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portal/contents.do?key=1584>) (검색일자: 2022.05.02.)

86) <https://www.fondazione scuolapatrimonio.it/innovazione-e-sperimentazione/capitale-italiana-cultura-analisi-programma/> (검색일자: 2022.05.02.)

87)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city-of-culture-2025-full-guidance-for-long-listed-bidders/uk-city-of-culture-2025-full-application-guidance>) (검색일자: 2022.05.03.)

하게 된다. 영국 문화도시는 유럽문화수도로 1990년 선정된 글래스고와 2008년 선정된 리버풀의 성공에 따라 출발했다. 영국은 이들 도시의 사례를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를 경험했다. 2023년에도 다시 한 번 개최국이 되어 유럽문화수도를 이끌어 갈 예정이었지만, 브렉시트의 결과 때문에 2017년 유럽위원회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사업참여를 제한했다.<sup>88)</sup> 이에 영국 정부는 영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사업 대상 도시 선정 절차는 총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영국 전 지역으로부터 사업 참여의향서를 받고, 이를 전문가 자문 패널이 입찰 지침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전문가 패널이 신청자 명단을 추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명단에 있는 도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 수립을 위해 4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6 달 동안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평가 핵심 기준인 적격성(Eligibility), 장소 만들기(Placemaking), 회복과 성장(Recovery and growth), 레벨업(Lavelling up), 혁신(Innovation), 영국 및 국제 협력(UK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 개방(Opening up access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유산(Leg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하여 후보도시를 평가하고,<sup>89)</sup> 후보 명단을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후보 도시를 방문하여 현장 평가와 사업 비전 및 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네 번째 단계는 전문가 패널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게 영국 문화도시로 선정될 최종 도시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하고,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13년 데리-런던데리(Derry-Londonderry)가 최초로 영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헐(Hull), 2021년에는 코벳트리(Coventry)가 선정되었다. 현재 2025년 타이틀을 얻기 위해 브래드퍼드(Bradford), 더럼 카운티(County Durham), 사우샘프턴(Southampton), 렉섬 카운티보로(Wrexham County Borough) 등 4개의 도시가 경쟁 중이다.

88) dezeen(2017.11.24.), "Creative sector "gutted" as EU disqualifies UK cities from European Capital of Culture contest"

89)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city-of-culture-2025-full-guidance-for-long-listed-bidders/uk-city-of-culture-2025-full-application-guidance>) (검색일자: 2022.05.03.)

[그림 3-10] 2013 영국 문화도시 데리-런던데리



자료: <https://www.bbc.co.uk/news/uk-northern-ireland-25451675>

[그림 3-11] 2017 영국 문화도시 헐



자료: <https://www.britishcouncil.org/arts/hull-city-culture-tour/city-of-culture>

## ② 이탈리아 문화수도(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

이탈리아 문화수도는 2014년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령에 의거하여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목표는 ‘문화적 제안의 진보, 사회적 포용의 성장 및 문화격차의 극복’, ‘사회적 포용 및 통합의 강화뿐만 아니라 대중 참여의 발전’, ‘관광객 유입 발전과 계절효과 표준화 (destagionalizzazione)의 존재 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문화 명소 강화’, ‘젊은 세대의 더 많은 참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사용’, ‘문화 및 창조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촉진’, ‘문화 혁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의 실현’,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의해 설정된 목표의 추구’로 설정하고 있다.<sup>90)</sup>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이탈리아 문화수도 타이틀을 희망하는 지방 자치단체 및 광역시·지방자치단체 연합은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문화 프로젝트 요약문을 제출한다. 심의위원은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대 10개의 후보 도시를 선정하며, 공청회를 위해 후보도시를 소집한다. 공청회는 대면 혹은 비대면 회의를 통해 60분간 진행되며, PT 발표와 심의위원의 질의로 구성된다. 이후 심의위원단은 문화부 장관에게 이탈리아 문화수도에 적합한 도시를 추천하고, 문화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이탈리아 문화수도 타이틀은 각료위원회에서 수여된다.<sup>91)</sup>

90) Bando per il conferimento del titolo di «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 per l'anno 2024 ([https://www.promopa.it/wp-content/uploads/2021/06/decreto\\_mic\\_sg\\_461\\_16.06.2021\\_capitale\\_cultura\\_2024.pdf](https://www.promopa.it/wp-content/uploads/2021/06/decreto_mic_sg_461_16.06.2021_capitale_cultura_2024.pdf)) (검색일자: 2022.05.04.)

91) Bando per il conferimento del titolo di «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 per l'anno 2024 ([https://www.promopa.it/wp-content/uploads/2021/06/decreto\\_mic\\_sg\\_461\\_16.06.2021\\_capitale\\_cultura\\_2024.pdf](https://www.promopa.it/wp-content/uploads/2021/06/decreto_mic_sg_461_16.06.2021_capitale_cultura_2024.pdf)) (검색일자: 2022.05.0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시는 총 13개이다. 2014년 12월 12일 장관 회의에서 2019년 유럽문화수도 선정에 참가한 칼리아리(Cagliari), 레체(Lecce), 페루자(Perugia), 라벤나(Ravenna), 시에나(Siena)에 2015년 이탈리아 문화수도 타이틀을 부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6년 만토바(Mantova), 2017년 피스토이아(Pistoia), 2018년 팔레르모(Palermo), 2020~2021년 파르마(Parma), 2022년 프로치다(Procida), 2023년 브레시아(Brescia), 베르가모(Bergamo), 2024년 페자로(Pesaro)까지 지정되었다.

### ③ 프랑스 문화수도(Capitale Française de la Culture)<sup>92)</sup>

프랑스 문화수도 사업은 2년을 주기로 하며, 중소도시 혹은 소규모 도시인 인구 2만~20만 명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창작 지원, 문화유산 강화, 문화예술 전승, 지역주민 동원, 지역 예술가 및 문화인 참여, 지역 경제 활력에 대한 문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의 주무부처는 프랑스 문화부이며 실질적인 사업 담당 기관은 국립박물관연합-그랑팔레(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Grand Palais)이다. 또한 외무유럽부, 재정경제부, 지자체 협력 및 지역 통합부와의 범부처 협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선정 절차는 신청, 심의, 후보도시 선정, 심의, 최종 도시 선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신청 희망 도시는 프랑스 문화수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과정에서 지역문화사무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또는 문화사무국(DAC, 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청서는 DRAC 또는 DAC가 검토하고, 전문가 심의를 통해 최대 10개의 후보 도시가 선발된다. 전문가 심의위원은 ① 예술가 및 문화기관의 장과 같은 문화 전문가 2명, ② 지역사회 및 문화관광 관련 전문가 2명, ③ 국내 혹은 국제 행사 주최자, ④ 공공 문화 정책 전문가, ⑤ 대중 교육 및 연대 분야 국가 협회·재단·활동·네트워크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한쪽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 기관의 검토와 심의위원에 의해 선발된 후보도시는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PT 면접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개 도시가 프랑스 문화수도 타이틀을 얻게 되며, 프랑스 문화부는 선정도시에 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92) 프랑스 문화수도 홈페이지(<https://capitale-culture.fr/>) (검색일자: 2022.0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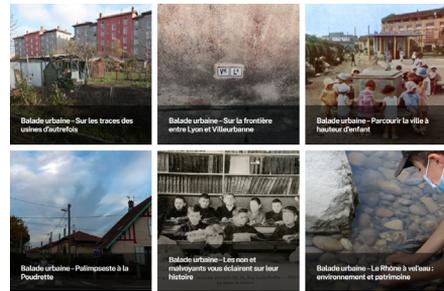
2022년 프랑스 최초의 문화수도로 빌뢰르반(Villeurbanne)이 선정되었다. 빌뢰르반은 문화수도 사업을 위해 축제, 전시회, 공연, 문화유산 산책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700여개의 이벤트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022년인 현재는 2024년 문화수도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기준인 ‘프로젝트의 혁신성’, ‘문화예술의 전승’, ‘주민 참여’, ‘국제협력’, ‘장애인 접근성’, ‘지역 연대’, ‘사업 수행 능력’,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2022년 12월 두 번째 프랑스 문화수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림 3-12] 2022 프랑스 문화수도 빌뢰르반 개막식



자료: <https://villeurbanne2022.fr/>

[그림 3-13] 빌뢰르반 문화유산 산책로 목록



자료: <https://villeurbanne2022.fr/>

### 3. 국외 사업 유형 검토

국외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문화 도시 브랜드형’과 ‘문화적 도시개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2년 현재기준 국외에서 추진 중인 지역단위 문화 사업의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제외한 4개 사업이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문화 수도, 문화 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유럽문화수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같이 국가 외부의 도시들과의 교류를 목적 혹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문화 도시 브랜드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탈리아 문화수도, 프랑스 문화수도 등 국가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도시개발형’으로 분석되었다.

단, 영국 문화도시의 경우 지정 후보군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정 과정에서 후보도시에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를 활용한 도시개발 계획 강화를 독려하고,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 지정된 문화도시에는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문화도시’로의 타이틀을 부여함으로써 ‘문화도시 브랜드형’으로 사업을 완료 짓는 형태를 보였다. 다만 영국 문화도시의 경우 4년에 한 번 지정되어 영국 전역의 대표적 문화도시로의 브랜드를 부여받고, 문화 주도 재생에 대한 비전을 전파하는 역할을 받는다. 영국 문화도시는 2013년, 2017년, 2021년 총 3년 간 세 개의 도시를 지정하였고, 2025년 타이틀을 위해 현재 4개의 후보도시가 경쟁 중에 있다. 이는 후보 도시에서부터 문화적 역량과 계획을 검토하나, 후보 도시들 또한 사업 과정 중에서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최종 경쟁을 통해 선정된 도시가 ‘문화도시’로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함으로 ‘문화도시 브랜드형’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의 현황은 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몇 년을 주기로, 몇 개의 도시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인지가 드러난다. 대체로 문화 도시 브랜드형 사업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이틀의 무게를 강화하는데 이는 도시 간 경쟁에 의해 대표 도시를 뽑는다는 인식으로 관광효과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 부가적인 이익 창출을 유도하게 한다.

〈표 3-13〉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유럽문화수도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이 더 친밀감을 가지고 공동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추진</li> <li>도시재생,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증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 관광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위원회로부터 사업기간 중 도시 당 최고 150만 유로(약 20억)까지 재정 지원</li> <li>EU펀딩 프로그램 추가 보조금 가능</li> <li>사업추진 국가 및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및 민간기업 후원금 활용</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Creative Cities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간 국제협력 강화</li> <li>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회원도시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 고무·향상</li> <li>문화 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의 창조, 생산, 분배 확산 강화</li> <li>창의도시 간 경험, 지식, 모범사례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없음</li> <li>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성과 관리 및 사업 개발,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지자체)의 자체 사업예산 활용</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영국 문화도시 (UK City of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도시의) 문화 주도 재생에 대한 비전 제시</li> <li>문화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li> <li>4년에 한 번 지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4단계의 지정단계 중 2단계에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투부(DCMS)로부터 ‘전체 지원서 강화’를 목적으로 4만 파운드(약 6천 3백만 원) 보조금 수령</li> </ul>	문화 도시 브랜드형 (일부혼합)

사업명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예산지원 여부	유형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단계까지 통과한 도시는 '문화도시'로의 타이틀 수여</li> </ul>	
이탈리아 문화수도 (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적 제안의 진보, 사회적 포용의 성장 및 문화격차의 극복</li> <li>사회적 포용 및 통합의 강화와 대중 참여의 발전</li> <li>관광객 유입 발전과 문화명소 강화</li> <li>젊은 세대의 참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li> <li>문화 및 창조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촉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도시는 6년 간 각 100만 유로(약 13억 원) 지원<sup>93)</sup></li> <li>매년 심사하지만 지정도시가 없을 수 있음</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프랑스 문화수도 (Capitale Francaise de la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도시 혹은 소규모 도시인 인구 2만~10만 명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을 대상으로 실시, 2년에 한 번 지정</li> <li>창작지원, 문화유산 강화, 문화예술 전승, 지역주민 참여, 지역 예술가 및 문화인의 참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에 대한 문화의 기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원 보조금은 2년에 걸쳐 500,000유로(약 7억 원) 지원</li> <li>동시에 공공운용기금에서 500,000유로(약 7억 원)가 2년에 걸쳐 지원, 이는 국가지원 보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음</li> </ul>	문화적 도시개발형

93) 출처 : 이탈리아 하원 홈페이지 ([https://temi.camera.it/leg17/temi/le\\_capitali\\_della\\_cultura](https://temi.camera.it/leg17/temi/le_capitali_della_cultura))

##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 1. 분석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시행 초반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 추진하더라도 도시 내 문화기반시설 등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도시 내 문화 정책이 발전의 중심으로써 기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 정책,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문화 분야의 역할 수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등에 한 축으로도 참여를 하게 된다. 해당 사업들은 각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고,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문화정책은 타 부처가 설립한 문화기반시설, 복지 및 편의시설 등에 소프트웨어를 담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수단이자 해결 기조로서 문화적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세부 사업에서 드러나는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마을미술프로젝트,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공동체, 문화유산, 문화향유 측면에서의 사업 예측을 추진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주도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의 경우 문화 정책이 공동체성 회복과 함께 청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중복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일부 법정 문화도시 등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반으로서 역할하기도 하였지만, 광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 문화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문화시민도시'의 경우, 법정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인 문화주권, 문화재생, 문화창조, 문화공생(공동체) 등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이 계획은 기존의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조성, 덕수궁 보행전용거리 등 인프라 사업의 성과 평가를 근거로 환경개선에서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발전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로서 지니는 문화적 특성이 타 지자체와 다르기에 정책 환경에서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이 인근 지역 영향권도 넓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Metropolitan Area)이자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에 가입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광역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거점 도시의 역할과 정책 기조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기능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신문화 중심도시로서 광역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경상북도 내에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지정된 도시들이 이러한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게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광역차원에서의 계획은 주로 하드웨어 기반 조성에 중점이 있고 기초차원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기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내에서 해당사항이 없기에 자체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시사점

타 부처와 지자체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도시 행정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을 찾고, 이에 대한 일부 사업 추진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을 공모 지원한다. 이는 지역문화정책의 수요가 부처, 지역별로 다양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 분야의 수요 측정과 프로그램 운영 관리, 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점차 인식이 높아져 지역 문화재단의 수행 역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조직 또한 확대되는 특성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 개발보다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방향 기조를 참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곧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는 정책 방향과 지역문화 진흥의 목표가 기초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도시 발전 정책에 있어 문화정책의 역할과 문화정책 분야를 필요로 하는 도시의 수요를 적절하게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사례에서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되, 참여 계층의 다양화를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다.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거나, 도시브랜드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식의 사례인데 이는 소요 예산의 출처와 목적성에 대한 연계성에도 근거가 있다. 브랜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요를 민간 참여 및 산업 확대로 추진하고,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예산 투입으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상향시키는 방식이다. 즉, 하나의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제4장

## 관계자 및 전문가 정책 의견 조사

rka

# 제1절 조사개요

---

## 1. 조사 목적 및 방법

### 가. 조사 목적

본 설문은 기 추진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도출하고 향후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하여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설문의 세부 목적은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파악, 둘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별 인식과 성과(인지도 및 효과성) 검토,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사업 지향점 도출이다. 조사 대상자가 모든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함께 추진하였다.

### 나.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설문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구 수행, 사업평가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관여 사업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사업으로 문화지구,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있으며 그 외 사업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해당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및 관여한 관계자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 정책 응답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였다. 사업 담당자 표본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관련 사업 전문조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며 전문인력은 참고문헌, 발표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pm 7.11\%p$ 이다. 조사기간은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13일 간 진행하였다.

## 2. 응답자 특성

〈표 4-1〉 조사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전체		(100)	100
성별	남성	(52)	52.0
	여성	(48)	48.0
연령	30대	(19)	19.0
	40대	(48)	48.0
	50대	(29)	29.0
	60대	(4)	4.0
거주 지역	서울	(18)	18.0
	부산	(7)	7.0
	대구	(3)	3.0
	인천	(8)	8.0
	광주	(2)	2.0
	대전	(2)	2.0
	울산	(2)	2.0
	경기	(11)	11.0
	강원	(11)	11.0
	충북	(1)	1.0
	충남	(5)	5.0
	전북	(5)	5.0
	전남	(5)	5.0
	경북	(11)	11.0
	경남	(7)	7.0
제주	(2)	2.0	
거주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40.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44.0
	읍/면 지역	(16)	16.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12.0
	공무원	(36)	36.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27.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6.0

구분		사례수	구성비
참여 정책 사업 (복수응답)	연구자	(18)	18.0
	기타	(1)	1.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26.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46.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36.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76.0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1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20.0
	문화지구	(8)	8.0
	해당없음	(7)	7.0

## 제2절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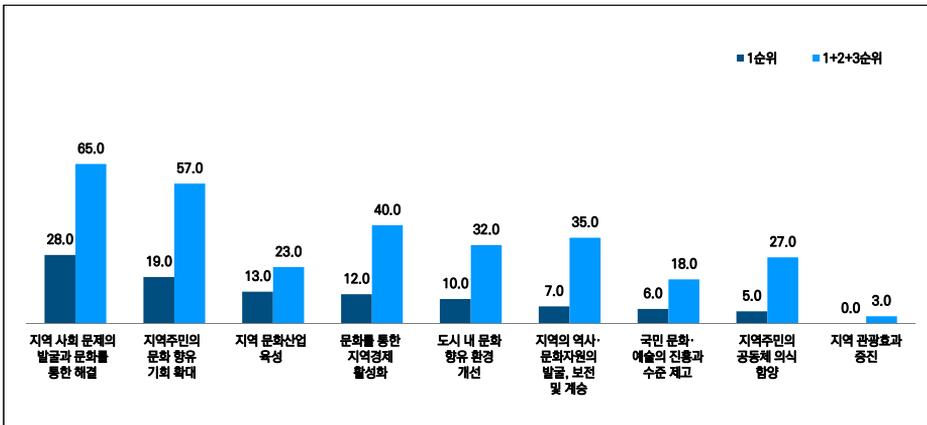
### 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필요성

#### 1)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관련 의견 조사」에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목적을 9 가지 항목 중 중요도 순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목적으로 1순위 기준 ‘지역 사회 문제의 발굴과 문화를 통한 해결’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19.0%), ‘지역 문화산업 육성’(13.0%),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2.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 관광효과 증진’은 응답자 중 단 한 명도 1순위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림 4-1]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순위



## 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는 3개 대분류(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13개의 소분류(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일자리 창출, 관광명소화 등)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4-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

대분류	세분류
경제적 효과	(1)지역주민 소득증대
	(2)지역일자리 창출
	(3)관광명소화
	(4)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적 효과	(5)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6)도시미관, 경관개선
	(7)문화기반시설 개선
사회문화적 효과	(8)지역이미지 제고
	(9)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10)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1)문화자원 발굴
	(12)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13)도시 정주 의사 향상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는 사회문화적 효과의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가 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중요도 평가가 높았던 항목은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4.47점)으로 환경적 효과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 평가가 높은 경우의 대부분은 사회문화적 효과에서 두드러졌다. 그 결과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4.45점), ‘문화자원 발굴’(4.44점), ‘지역이미지 제고’(4.43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우 평균 2.30점으로 다른 기대효과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13개 조사 항목에서 유일하게 2점대에 그쳤다. 특히, 경제적 효과의 3개 항목(부동산 가격 상승, 관광명소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은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에서 하위 3개 영역이다.

응답자들은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해 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3〉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평균요약)(1)

(단위 : 명, 평균 5점)

	사례수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 명소화	부동산 가격 상승	문화적 도시 공간 조성	도시 미관, 경관 개선	문화 기반 시설 개선	
전체	(100)	3.55	3.95	3.47	2.30	<b>4.47</b>	3.87	4.29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40)	3.48	3.88	3.43	2.28	4.53	3.88	4.3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3.50	3.95	3.50	2.25	4.43	3.86	4.23
	읍/면 지역	(16)	3.88	4.13	3.50	2.50	4.44	3.88	4.31
직업	교수 및 강사	(12)	3.75	3.92	3.83	2.25	4.42	3.83	4.00
	공무원	(36)	3.81	4.11	3.67	2.56	4.47	4.00	4.4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3.19	3.81	3.04	1.85	4.44	3.59	4.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3.50	4.00	3.50	2.83	4.50	3.83	4.00
	연구자	(18)	3.50	3.83	3.44	2.33	4.50	4.06	4.17
	기타	(1)	3.00	4.00	4.00	2.00	5.00	4.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69	3.92	3.62	2.42	4.38	4.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52	4.00	3.46	2.26	4.52	3.91	4.3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3.56	3.97	3.53	2.28	4.53	4.03	4.3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51	3.93	3.47	2.28	4.50	3.88	4.3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3.64	3.64	3.36	2.64	4.45	4.00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3.60	4.00	3.60	2.45	4.70	3.90	4.20	
문화지구	(8)	3.88	3.75	3.50	1.88	4.75	4.13	4.38	
해당없음	(7)	3.57	4.00	3.29	2.29	4.43	3.71	4.14	

〈표 4-4〉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평균요약)(2)

(단위 : 명, 평균 5점)

	사례수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문화 자원 발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도시 정주 의사 향상	
전체	(100)	<b>4.43</b>	<b>4.45</b>	<b>4.53</b>	<b>4.44</b>	4.35	4.3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40)	4.38	4.45	4.48	4.50	4.35	4.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4.43	4.36	4.61	4.43	4.32	4.34
	읍/면 지역	(16)	4.56	4.69	4.44	4.31	4.44	4.0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4.33	4.33	4.58	4.25	4.17	3.92
	공무원	(36)	4.53	4.36	4.58	4.44	4.39	4.3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30	4.67	4.59	4.48	4.59	4.52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4.50	4.67	4.50	4.50	4.33	4.17
	연구자	(18)	4.44	4.28	4.28	4.44	4.00	4.33
	기타	(1)	5.00	5.00	5.00	5.00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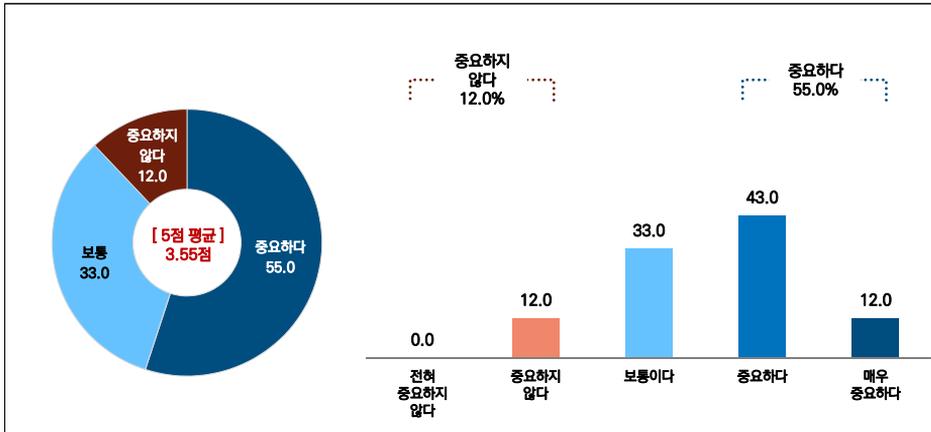
		사례수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문화 자원 발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도시 정주 의사 향상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4.58	4.38	4.69	4.58	4.27	4.2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4.46	4.61	4.72	4.41	4.48	4.3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4.42	4.44	4.58	4.50	4.36	4.5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4.45	4.53	4.62	4.45	4.34	4.3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4.36	4.36	4.82	4.55	4.18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4.50	4.60	4.80	4.50	4.30	4.40
	문화지구	(8)	4.25	4.50	4.63	4.50	4.50	4.38
해당없음	(7)	4.29	4.00	4.14	4.29	4.43	4.43	

이어, 각 조사 항목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는 평균 3.55점이었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0%(매우 중요하다: 12.0%+중요하다: 43.0%)로,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4-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의 평균(3.55점)을 상회하는 지역은 읍/면 지역으로 3.88점이다.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표 4-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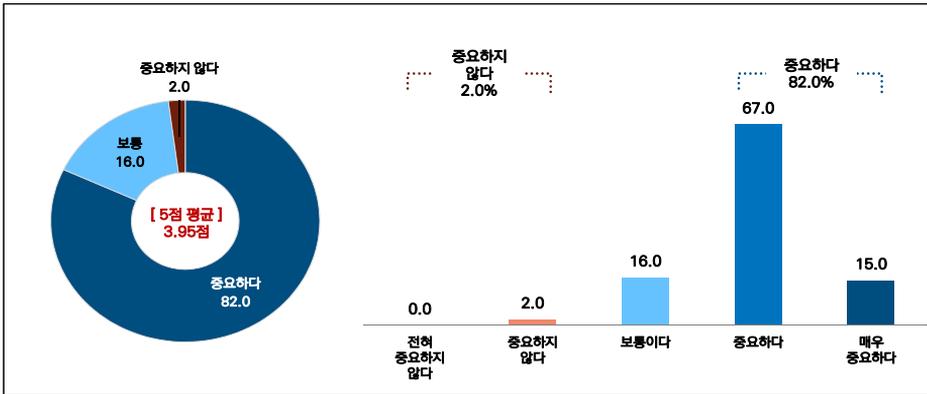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2.0	33.0	43.0	12.0	3.5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12.5	35.0	45.0	7.5	3.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15.9	31.8	38.6	13.6	3.50
	읍/면 지역	(16)	-	0.0	31.3	50.0	18.8	3.88

②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는 평균 3.95점이었다. 응답자의 82.0%(매우 중요하다: 15.0% + 중요하다: 67.0%)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직업적 특성에 따른 결과, 공무원(4.11점),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4.00점)은 전체 평균(3.95점)보다 높았다.

[그림 4-3]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지역일자리 창출)



〈표 4-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일자리 창출)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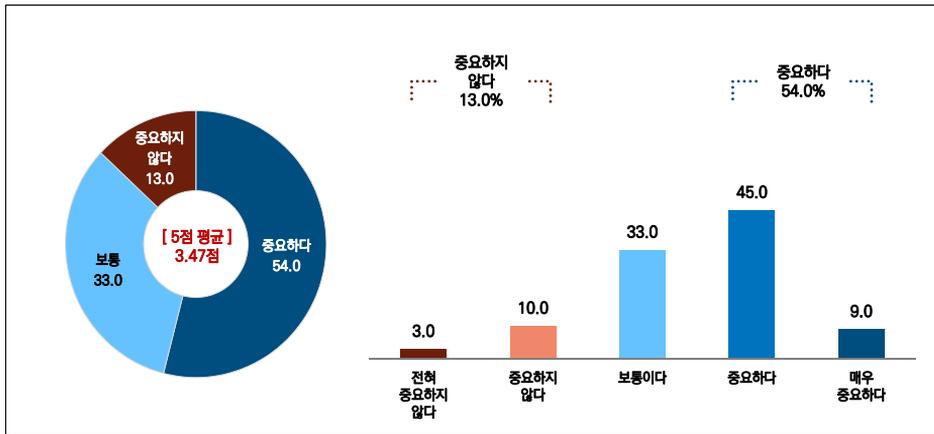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2.0	16.0	67.0	15.0	3.9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16.7	75.0	8.3	3.92
	공무원	(36)	-	0.0	11.1	66.7	22.2	4.1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3.7	18.5	70.4	7.4	3.8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100.0	0.0	4.00
	연구자	(18)	-	5.6	27.8	44.4	22.2	3.83
	기타	(1)	-	0.0	0.0	100.0	0.0	4.00

특히,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는 지역일자리 창출 100.0%(매우 중요하다: 0.0%+중요하다: 100.0%), 공무원 88.9%(매우 중요하다: 22.2%+중요하다: 66.7%), 교수 및 강사 83.3%(매우 중요하다: 8.3%+중요하다: 75.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③ 관광명소화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관광명소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평균 3.47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4.0%(매우 중요하다: 9.0% + 중요하다: 45.0%)는 관광명소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표 4-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3.0	10.0	33.0	45.0	9.0	3.47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0.0	25.0	66.7	8.3	3.83
	공무원	(36)	2.8	5.6	27.8	50.0	13.9	3.6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11.1	51.9	29.6	0.0	3.04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50.0	50.0	0.0	3.50
	연구자	(18)	0.0	27.8	16.7	38.9	16.7	3.44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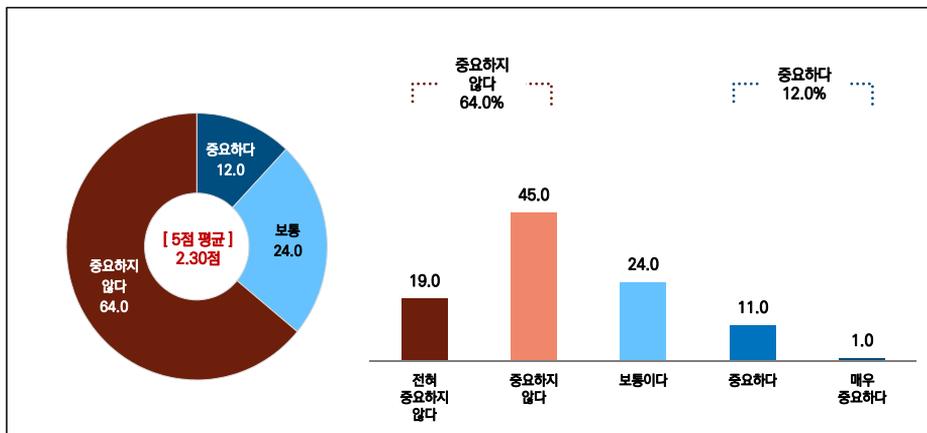
직업적 특성에 따른 '관광명소화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 및 강사 75%(매우 중요하다: 8.3%+중요하다: 66.7%), 공무원 63.93%(매우 중요하다: 13.9%+중요하다: 50.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5점 평균으로는 교수 및 강사 3.83점, 공무원 3.67점이다.

반면, 문화관련 기관 직원들의 경우, 관광명소화에 대한 기대효과 중요도 평균은 3.04점으로 전체 평균(3.47점)보다 0.43%p 낮았다. 관광명소화 기대효과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연구자(27.8%)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문화관련 기관 직원(7.4%)과 '공무원(2.8%)'에서만 확인 가능했다.

#### ④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는 평균 2.30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2.0%(매우 중요하다: 1.0% + 중요하다: 11.0%)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64.0%(전혀 중요하지 않다: 19.0%+중요하지 않다 45.0%)로 긍정 답변의 5배 이상이었다. 즉, 지역단위 문화정책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는 중요도 부분에 있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림 4-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주 지역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30점) 대비 읍/면 지역(평균 2.50점)의 평균이 높았으나, 지역별 구분에 따른 응답 특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직업적 특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는 2.83점으로 전체 평균 2.30점보다 0.53%p 높았다. 반면, 문화관련 기관 직원 중 긍정적인 응답은 전무하였다(평균 1.85점).

참여정책 사업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참여자의 기대 점수는 2.64점이었고, 문화지구 참여자의 기대 점수는 1.88점에 불과하였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참여자(2.28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표 4-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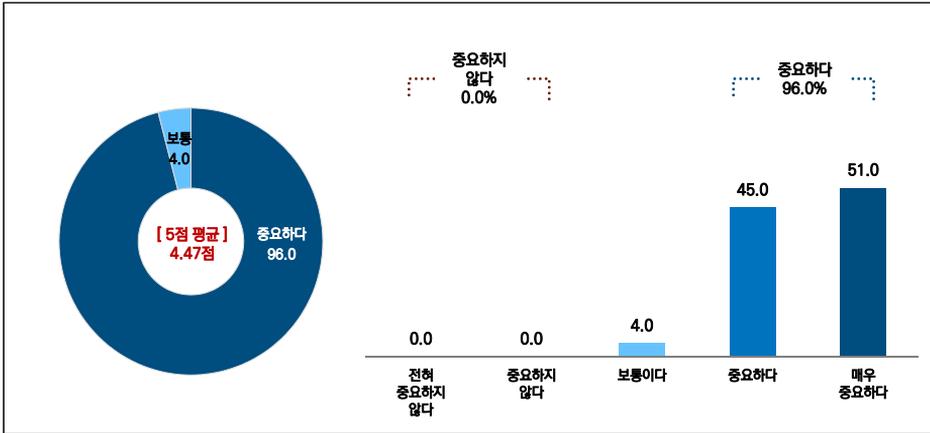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19.0	45.0	24.0	11.0	1.0	2.3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20.0	45.0	25.0	7.5	2.5	2.2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2.7	40.9	25.0	11.4	0.0	2.25
	읍/면 지역	(16)	6.3	56.3	18.8	18.8	0.0	2.5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8.3	66.7	16.7	8.3	0.0	2.25
	공무원	(36)	11.1	41.7	30.6	13.9	2.8	2.5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0.7	33.3	25.9	0.0	0.0	1.85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16.7	33.3	0.0	50.0	0.0	2.83
	연구자	(18)	11.1	55.6	22.2	11.1	0.0	2.33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5.4	50.0	15.4	15.4	3.8	2.4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1.7	45.7	19.6	10.9	2.2	2.2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2.2	36.1	33.3	8.3	0.0	2.2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2.4	40.8	25.0	10.5	1.3	2.28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18.2	36.4	9.1	36.4	0.0	2.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25.0	25.0	35.0	10.0	5.0	2.45
	문화지구	(8)	37.5	50.0	0.0	12.5	0.0	1.88
	해당없음	(7)	14.3	57.1	14.3	14.3	0.0	2.29

#### ⑤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평균 4.47점으로, 응답자의 96.0%(매우 중요하다: 51.0% + 중요하다: 45.0%)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다+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무(0.0%) 하였다.

[그림 4-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표 4-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4.0	45.0	51.0	4.47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	7.7	46.2	46.2	4.3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	4.3	39.1	56.5	4.5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	2.8	41.7	55.6	4.5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	3.9	42.1	53.9	4.50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	0.0	54.5	45.5	4.4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	0.0	30.0	70.0	4.70
	문화지구	(8)	-	-	0.0	25.0	75.0	4.75
	해당없음	(7)	-	-	14.3	28.6	57.1	4.43

⑥ 도시미관, 경관개선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도시미관, 경관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전체 평균은 3.87점이었 다. 부정적 응답 중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없었다.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직업적 특성으로는 현장 전문가 집단 에서 비교적 낮은 결과가 나왔다. 문화관련 기관 직원(평균 3.59점), 문화 기획 관련 전 문가(평균 3.83점) 집단이 전체 평균 3.87점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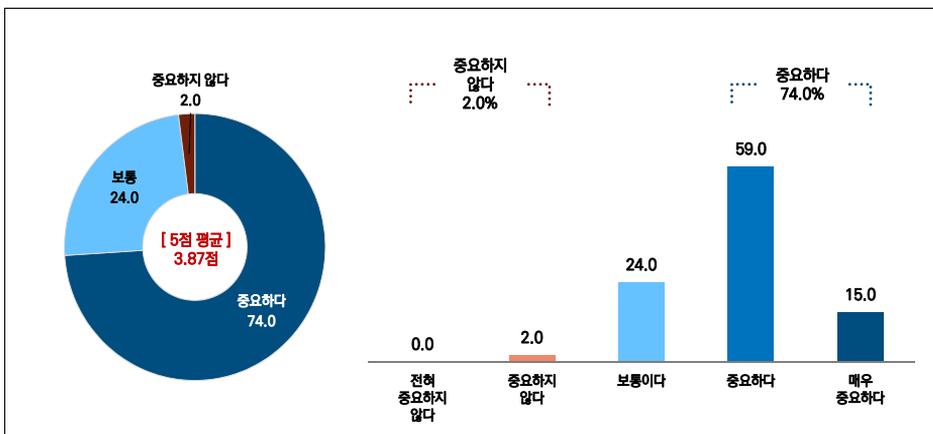
지역단위 문화정책 참여자의 경우, 도시미관, 경관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의견은 해당 없음(3.71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평균 3.87점보다 높았다.

〈표 4-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2.0	24.0	59.0	15.0	3.87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2.5	25.0	55.0	17.5	3.8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25.0	56.8	15.9	3.86
	읍/면 지역	(16)	-	0.0	18.8	75.0	6.3	3.88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8.3	16.7	58.3	16.7	3.83
	공무원	(36)	-	0.0	16.7	66.7	16.7	4.0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44.4	51.9	3.7	3.5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16.7	0.0	66.7	16.7	3.83
	연구자	(18)	-	0.0	22.2	50.0	27.8	4.06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15.4	57.7	23.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23.9	60.9	15.2	3.9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19.4	58.3	22.2	4.0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2.6	22.4	59.2	15.8	3.88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9.1	0.0	72.7	18.2	4.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5.0	20.0	55.0	20.0	3.90	
문화지구	(8)	-	0.0	0.0	87.5	12.5	4.13	
해당없음	(7)	-	0.0	28.6	71.4	0.0	3.71	

[그림 4-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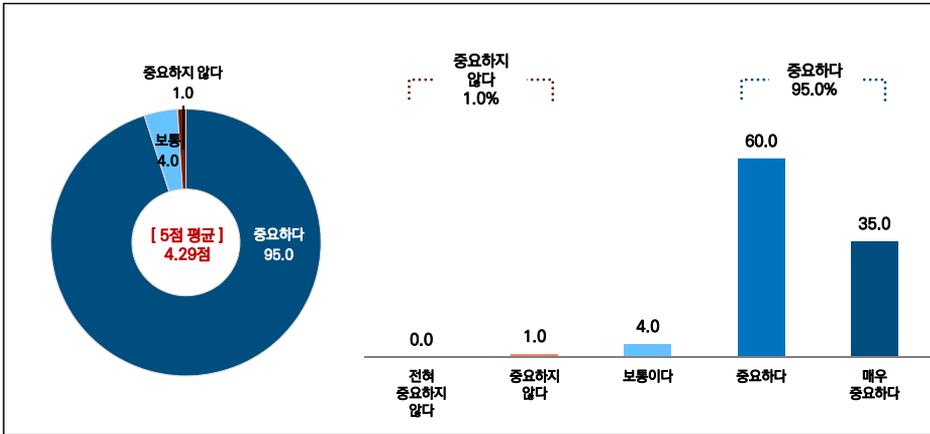
⑦ 문화기반시설 개선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문화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29점이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적 특성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100.0%(매우 중요하다: 100.0%+중요하다: 0.0%), 공무원 100.0%(매우 중요하다: 44.4%+중요하다: 55.6%)로 이 두 개 직업군의 긍정적 응답이 매우 높았다. 5점 척도 기준, 공무원은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점수는 4점으로 교수 및 강사,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기타의 경우가 해당된다.

[그림 4-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표 4-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4.0	60.0	35.0	4.29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2.5	60.0	37.5	4.3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6.8	56.8	34.1	4.23
	읍/면 지역	(16)	-	0.0	0.0	68.8	31.3	4.31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8.3	0.0	75.0	16.7	4.00
	공무원	(36)	-	0.0	0.0	55.6	44.4	4.4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7.4	48.1	44.4	4.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100.0	0.0	4.00
	연구자	(18)	-	0.0	11.1	61.1	27.8	4.17
	기타	(1)	-	0.0	0.0	100.0	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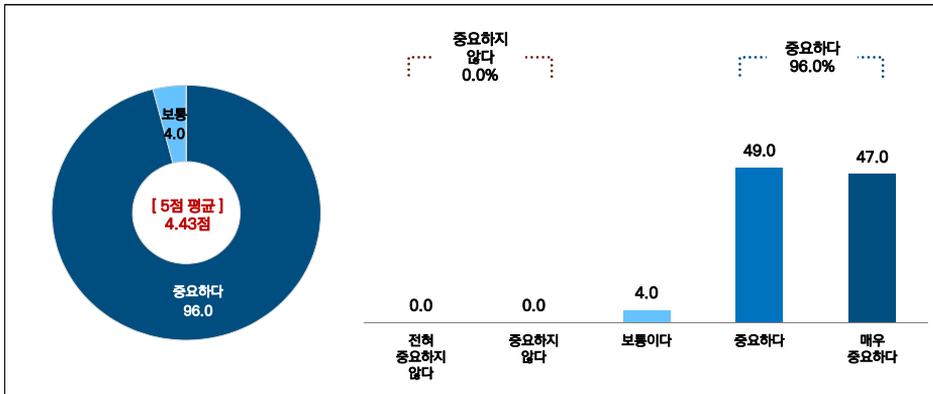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0.0	3.8	65.4	30.8	4.2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4.3	56.5	39.1	4.3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2.8	58.3	38.9	4.3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3.9	55.3	39.5	4.3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0.0	72.7	27.3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5.0	5.0	55.0	35.0	4.20
	문화지구	(8)	-	0.0	12.5	37.5	50.0	4.38
	해당없음	(7)	-	0.0	0.0	85.7	14.3	4.14

### ⑧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지역이미지 제고에 대한 기대효과는 96.0%(매우 중요하다: 47.0% + 중요하다: 49.0%), 5점 척도 기준 평균 4.43점이었다.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이미지 제고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는, 거주지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읍/면 지역 거주자의 지역이미지 제고에 대한 기대효과는 100.0%(매우 중요하다: 56.3% + 중요하다: 43.0%)로 부정적 답변은 전무하다.

[그림 4-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표 4-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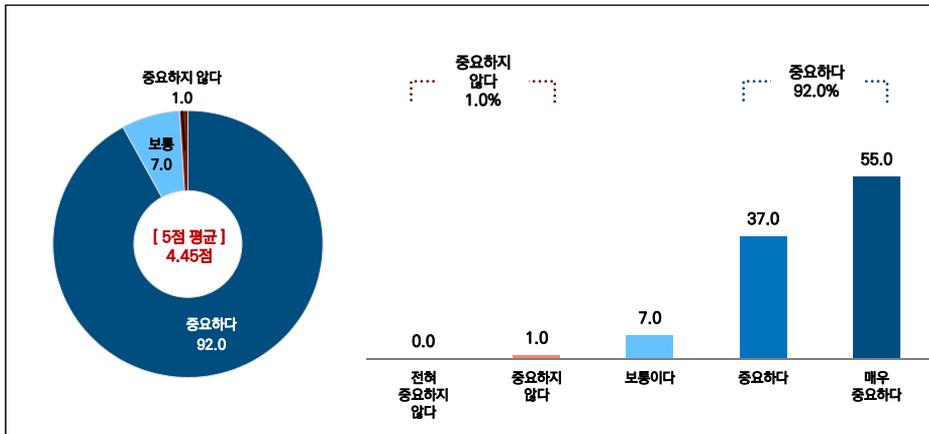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4.0	49.0	47.0	4.43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	5.0	52.5	42.5	4.3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	4.5	47.7	47.7	4.43
	읍/면 지역	(16)	-	-	0.0	43.8	56.3	4.56

⑨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지역 내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92.0%(매우 중요하다: 55.0% + 중요하다: 37.0%)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전체 평균 4.45점).

거주 지역 유형으로는 일반 읍/면 지역 거주자 92.8%(매우 중요하다: 75.0% + 중요하다: 18.8%), 직업적으로는 문화 관련 기관 전문가 및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전문가 집단에서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66.7%+중요하다: 33.3%)'는 응답이 높았다.

[그림 4-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표 4-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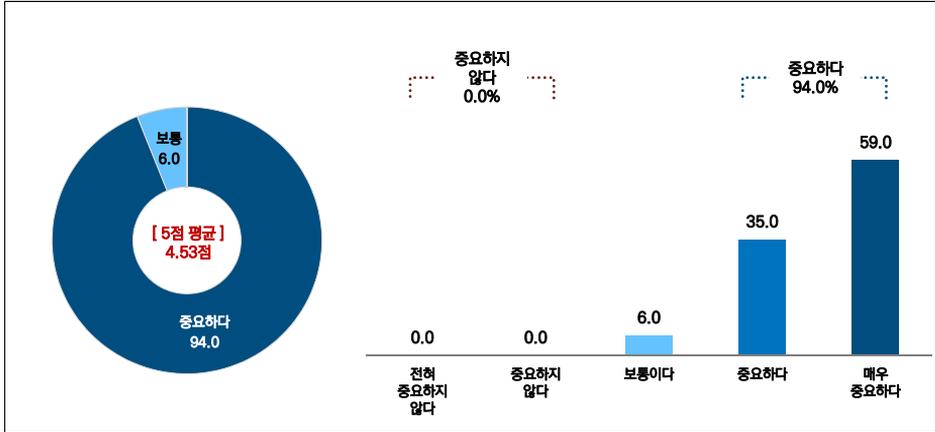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7.0	37.0	55.0	4.4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7.5	40.0	52.5	4.4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6.8	40.9	50.0	4.36
	읍/면 지역	(16)	-	0.0	6.3	18.8	75.0	4.6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8.3	50.0	41.7	4.33
	공무원	(36)	-	2.8	8.3	36.1	52.8	4.3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0.0	33.3	66.7	4.6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33.3	66.7	4.67
	연구자	(18)	-	0.0	16.7	38.9	44.4	4.28
	기타	(1)	-	0.0	0.0	0.0	100.0	5.00

⑩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대효과는 94.0%(매우 중요하다: 59.0% + 중요하다: 35.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전체 평균 4.53점).

[그림 4-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개선에 대해 일반 시·도의 동 지역 거주자 93.8%(매우 중요하다: 50.0%+중요하다: 43.8%)의 기대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일반 시·도의 동 지역 거주자(평균 4.61점)의 응답 결과는 전체 평균(4.53점)을 상회한 반면,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거주자(평균 4.48점) 및 읍/면 지역 거주자(평균 4.44점)는 평균 이하였다.

<표 4-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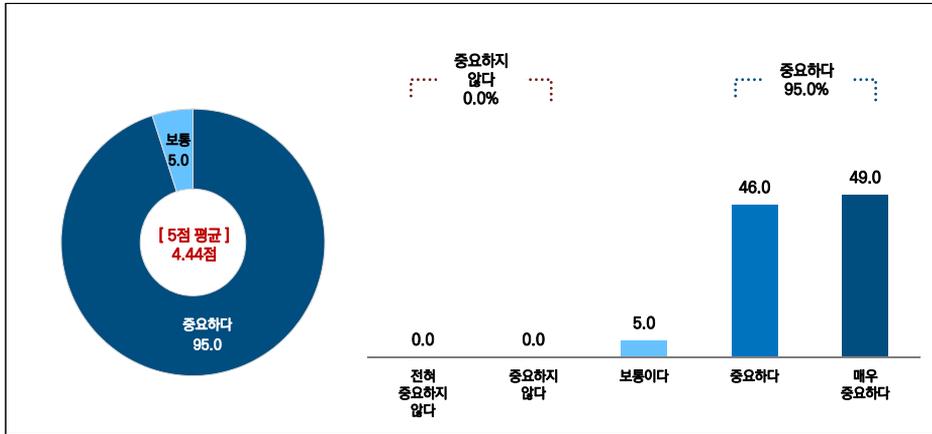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6.0	35.0	59.0	4.53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	10.0	32.5	57.5	4.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	2.3	34.1	63.6	4.61
	읍/면 지역	(16)	-	-	6.3	43.8	50.0	4.44

① 문화자원 발굴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문화자원 발굴에 대한 기대효과는 95.0%(매우 중요하다: 49.0% + 중요하다: 46.0%)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 4.44점이었다.

[그림 4-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자원 발굴)



직업적 특성으로는 교수 및 강사(평균 4.25점)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중요도 결과는 전체 평균 4.44점보다 높았다.

<표 4-1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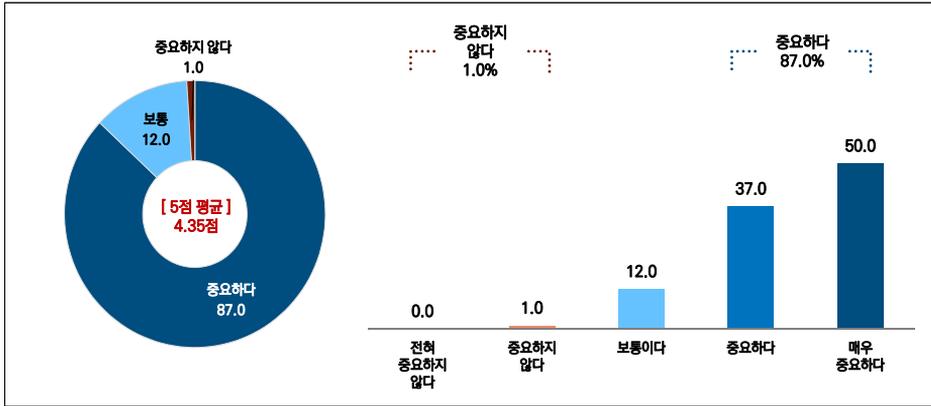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5.0	46.0	49.0	4.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	0.0	75.0	25.0	4.25	
	공무원	(36)	-	-	8.3	38.9	52.8	4.4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	7.4	37.0	55.6	4.48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	0.0	50.0	50.0	4.50	
	연구자	(18)	-	-	0.0	55.6	44.4	4.44	
	기타	(1)	-	-	0.0	0.0	100.0	5.00	

②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효과는 87.0%(매우 중요하다: 50.0% + 중요하다: 37.0%)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 4.35점이었다.

[그림 4-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효과는 5점 척도 기준, 읍/면 지역 4.44점,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4.35점, 일반 시·도의 동 지역은 4.32점 순으로, 읍/면 지역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표 4-1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12.0	37.0	50.0	4.3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40)	-	2.5	7.5	40.0	50.0	4.3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0.0	15.9	36.4	47.7	4.32
	읍/면 지역	(16)	-	0.0	12.5	31.3	56.3	4.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16.7	50.0	33.3	4.17
	공무원	(36)	-	0.0	13.9	33.3	52.8	4.39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3.7	33.3	63.0	4.5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66.7	33.3	4.33
	연구자	(18)	-	5.6	22.2	33.3	38.9	4.00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참여자	(1)	-	0.0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0.0	19.2	34.6	46.2	4.2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8.7	34.8	56.5	4.4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11.1	41.7	47.2	4.3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11.8	36.8	50.0	4.3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27.3	27.3	45.5	4.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15.0	40.0	45.0	4.30
	문화지구	(8)	-	0.0	12.5	25.0	62.5	4.50
해당없음	(7)	-	0.0	0.0	57.1	42.9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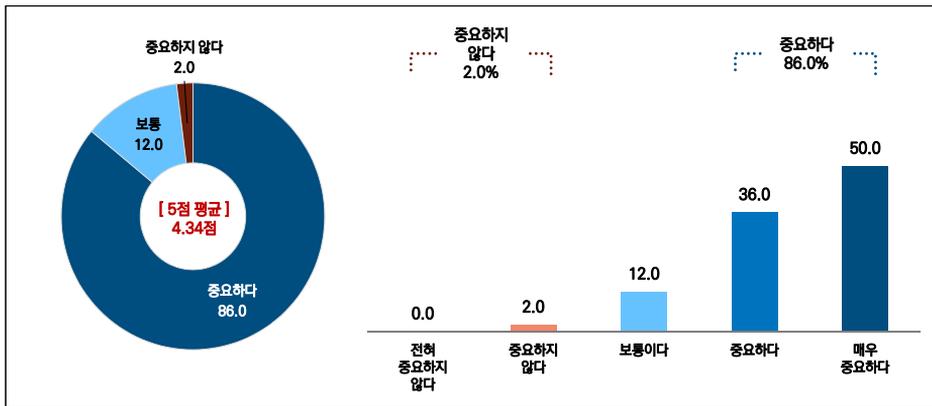
⑬ 도시 정주 의사 향상

지역단위 문화정책 중 도시 정주 의사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86.0%(매우 중요하다: 50.0% + 중요하다: 36.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점 평균 4.34점이었다.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도시 정주 의사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5점 척도 기준, 특별 시·광역시 동 지역 4.48점, 일반 시·도의 동 지역은 4.34점, 읍/면 지역 4.00점 순으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도시 정주 의사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직업적 특성에 따라 도시 정주 의사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관련 기관 직원 4.52점, 공무원 4.36점으로, 해당 직군은 전체 평균(4.34점)보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문화관련 기관 직원 및 공무원의 경우,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실무 및 정책행위자로서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유추 가능한 결과이다.

[그림 4-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표 4-1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2.0	12.0	36.0	50.0	4.3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10.0	32.5	57.5	4.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0.0	13.6	38.6	47.7	4.34	
	읍/면 지역	(16)	-	12.5	12.5	37.5	37.5	4.0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33.3	41.7	25.0	3.92	
	공무원	(36)	-	5.6	2.8	41.7	50.0	4.3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7.4	33.3	59.3	4.52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33.3	16.7	50.0	4.17	
	연구자	(18)	-	0.0	16.7	33.3	50.0	4.33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15.4	34.6	46.2	4.2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2.2	13.0	34.8	50.0	4.3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5.6	38.9	55.6	4.5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13.2	38.2	47.4	4.3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9.1	54.5	36.4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15.0	30.0	55.0	4.40
	문화지구	(8)	-	0.0	12.5	37.5	50.0	4.38
해당없음	(7)	-	0.0	14.3	28.6	57.1	4.43	

## 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식 및 성과

### 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본 문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7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알고 있는지 묻는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지도 응답 시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인지도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평균 4.71점으로, 7개 사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문화특화 지역조성 사업(평균 4.22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평균 4.13점)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문화지구 인지도는 평균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 유형 및 직업에 따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에서도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1순위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연장선에서 참여정책 사업에 따른 인지도 결과도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가장 높았다. 다만,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의 경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인지도(평균 4.64점)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 인지도(평균 4.58점)보다 높았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특성 중 하나로, 응답자가 참여한 사업의 인지도는 대부분 법정 문화도시 사업 다음으로 높았다. 즉,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의 인지도 1순위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평균 4.65점), 2순위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4.15점)이었다. 마찬가지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참여자의 인지도 1순위도 법정 문화도시 사업(평균 4.89점)이었고, 인지도 2순위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평균 4.76점)이었다.

〈표 4-1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평균 요약)

(단위 : 명, 점(평균 5점))

		사례수	문화지구	지역거점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조성	문화적도시재생	법정문화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전체		(100)	3.13	3.55	4.22	4.13	<b>4.71</b>	3.40	3.5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외 동지역	(40)	3.28	3.45	4.03	4.10	<b>4.68</b>	3.40	3.5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3.07	3.59	4.41	4.23	<b>4.70</b>	3.39	3.68
	읍/면 지역	(16)	2.94	3.69	4.19	3.94	<b>4.81</b>	3.44	3.2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3.67	4.00	4.33	4.50	<b>4.83</b>	3.17	3.83
	공무원	(36)	2.72	3.44	4.19	3.86	<b>4.72</b>	3.14	3.1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2.93	3.30	4.44	4.41	<b>4.89</b>	3.70	3.7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3.00	3.67	4.33	4.00	<b>4.83</b>	4.00	4.00
	연구자	(18)	3.89	3.78	3.78	4.06	<b>4.28</b>	3.39	3.67
	기타	(1)	4.00	4.00	<b>5.00</b>	4.00	<b>5.00</b>	4.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42	4.15	4.04	4.00	<b>4.65</b>	3.58	3.5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24	3.65	4.76	4.33	<b>4.89</b>	3.76	3.9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3.39	3.64	4.33	<b>4.64</b>	4.58	3.64	3.89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14	3.55	4.39	4.21	<b>4.83</b>	3.61	3.78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4.18	4.27	4.45	4.36	<b>4.91</b>	4.64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3.55	4.05	4.60	4.55	<b>4.90</b>	4.00	4.85
	문화지구	(8)	4.63	4.25	4.38	4.38	<b>4.75</b>	4.13	4.13
해당없음	(7)	3.14	3.57	3.71	4.00	<b>4.71</b>	2.86	3.0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조사는 5점 척도로 진행되었다. 5점 척도 기준은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 있다(2점)’,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3점)’,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4점)’,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5점)’로 구성되었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 조사는 상기 인지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각 사업별 인지도 조사에서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 있다(2점)’로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문화 정책사업 효과성에 응답할 수 없는 구조로 조사 문항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7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성 조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지역단위 문화정책 효과성은 7개 사업별 사례수가 상이하였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 인지도 조사와 상위 3개 사업 순위가 일치

하였다. 효과성 조사에서도 법정 문화도시가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특화 지역조성 사업(평균 3.72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평균 3.70점)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평균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7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 결과, 1순위는 모두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었다. 직업별 응답 특성으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지역단위 문화정책 효과성 1순위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었으나, 문화관련 기관 직원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효과성 1순위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평균 3.81점)을 손꼽았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효과성 평균점수는 3.44점으로 7개 사업 중 네 번째에 그쳤다.

〈표 4-19〉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평균 요약)

(단위 : %, 점(평균 5점))

		사례수*	문화 지구	지역 거점 문화 도시	문화 특화 지역 조성	문화적 도시 재생	법정 문화 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체		(100)	3.22	3.52	3.72	3.70	<b>3.99</b>	3.12	3.17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3.28	3.45	4.03	4.10	<b>4.68</b>	3.40	3.5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3.07	3.59	4.41	4.23	<b>4.70</b>	3.39	3.68
	읍/면 지역	(16)	2.94	3.69	4.19	3.94	<b>4.81</b>	3.44	3.2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3.22	3.69	3.73	3.82	<b>3.95</b>	3.21	3.09
	공무원	(36)	3.13	3.45	3.74	3.56	<b>4.23</b>	3.03	3.33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3.50	3.36	3.60	<b>3.81</b>	3.44	3.15	2.92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3.09	3.82	3.75	3.67	<b>4.00</b>	2.88	3.09
	연구자	(18)	3.39	3.57	3.74	3.79	<b>3.81</b>	3.28	3.13
	기타	(1)	3.13	3.30	3.56	3.62	<b>4.15</b>	3.09	3.26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4.00	3.50	3.67	4.00	<b>4.33</b>	3.00	3.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13	3.56	3.88	3.56	<b>4.00</b>	3.14	3.2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00	3.00	<b>4.00</b>	<b>4.00</b>	<b>4.00</b>	2.00	3.0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35	3.65	3.68	3.76	<b>3.85</b>	3.16	3.2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3.32	3.54	3.85	3.67	<b>4.26</b>	3.18	3.2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3.31	3.70	4.00	3.92	<b>4.31</b>	3.33	3.44
	문화지구	(8)	3.28	3.54	3.72	3.74	<b>4.05</b>	3.17	3.25
	해당없음	(7)	3.00	3.73	3.64	3.55	<b>4.00</b>	3.18	3.27

주 :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별 인지도 문항 3, 4, 5번 응답자 대상으로 효과성 조사 진행, 사업별 사례수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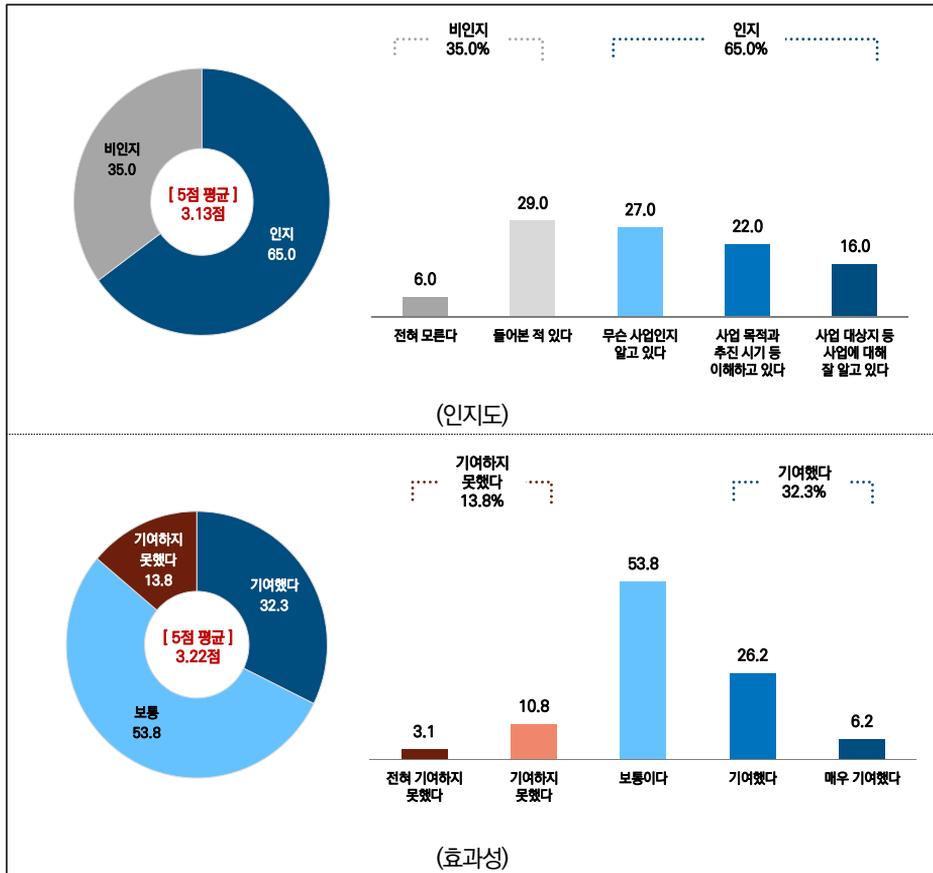
지역단위 문화정책 참여 응답자별 효과성 조사 결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각 사업 모두 평균 4.0점)한 반면, 문화지구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각 평균 2.0점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① 문화지구 인지도 및 효과성

‘문화지구’ 인지도는 평균 3.13점, 효과성은 평균 3.2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문화지구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65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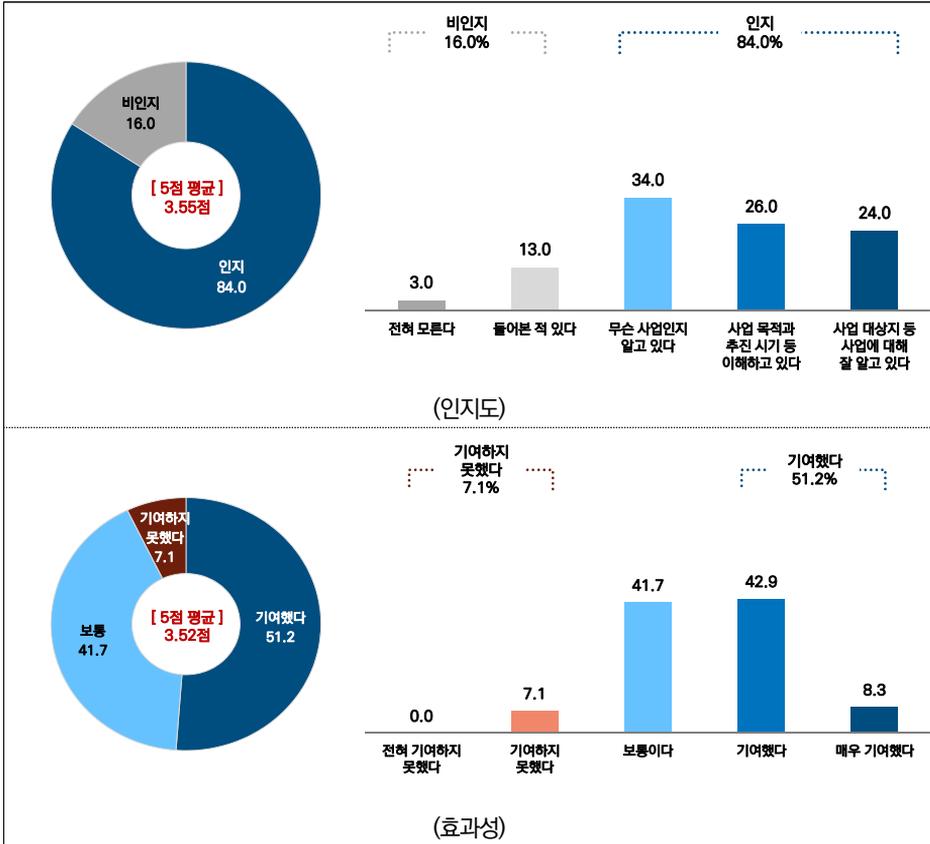


② 지역거점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인지도 평균은 3.55점, 효과성은 3.5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지역거점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84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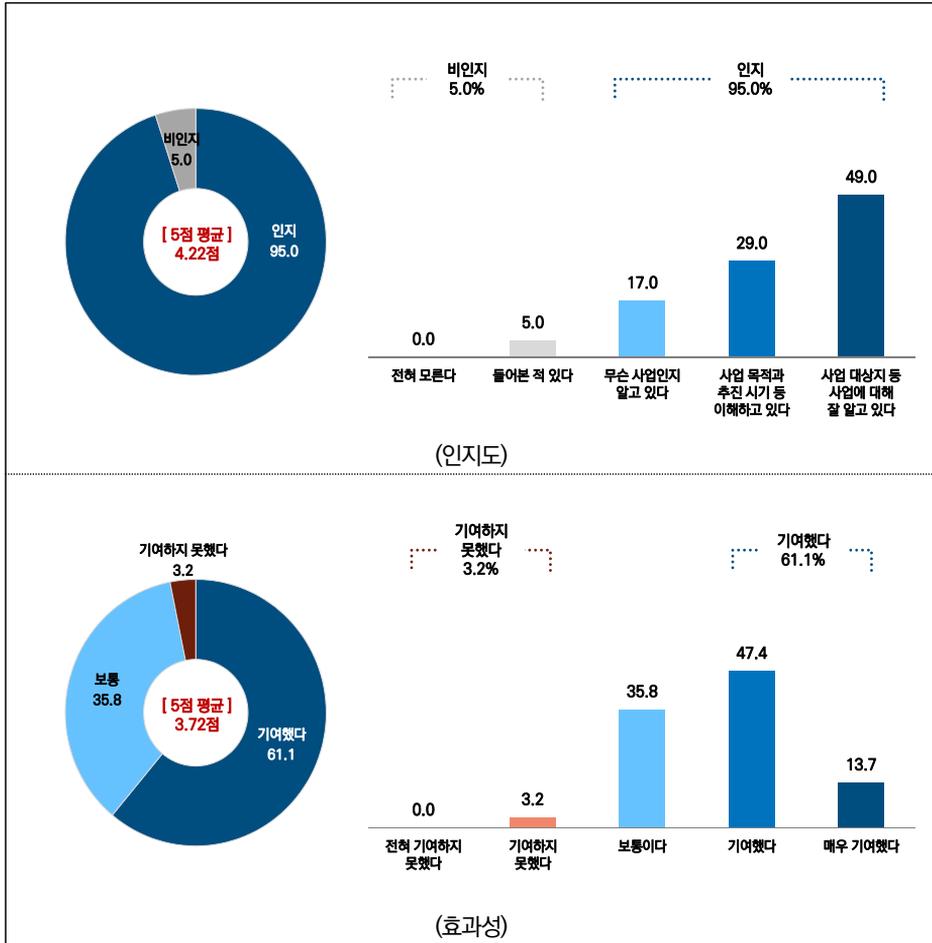


③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지도 평균은 4.22점, 효과성은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95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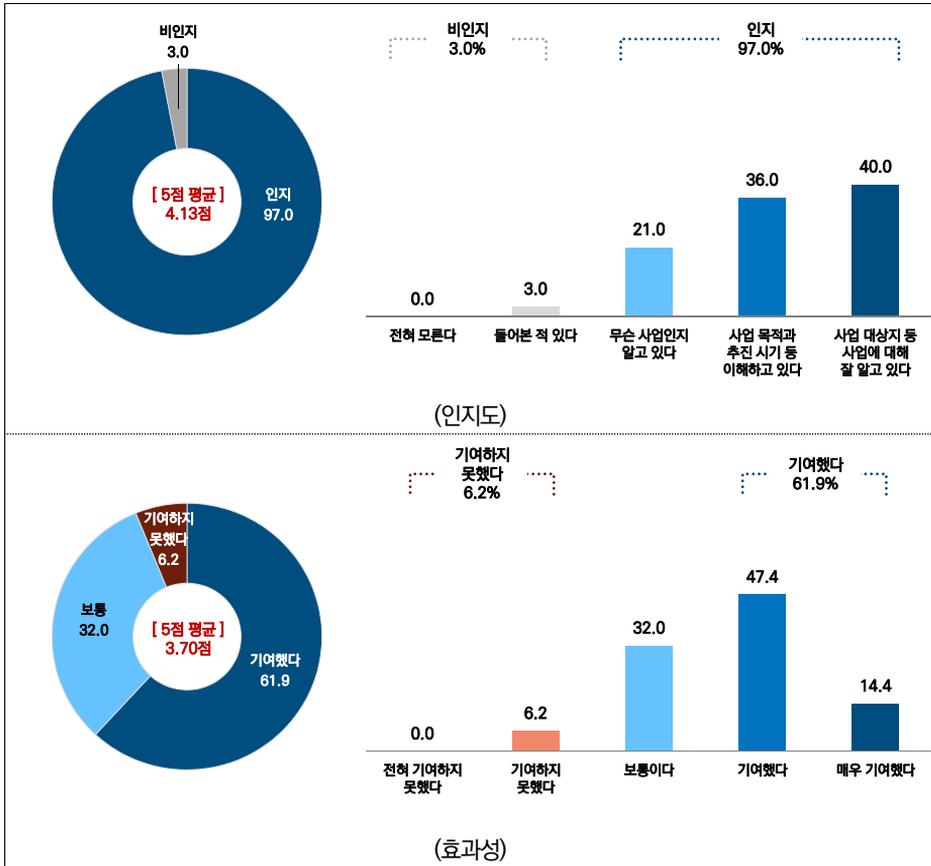


④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인지도 평균은 4.13점, 효과성은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97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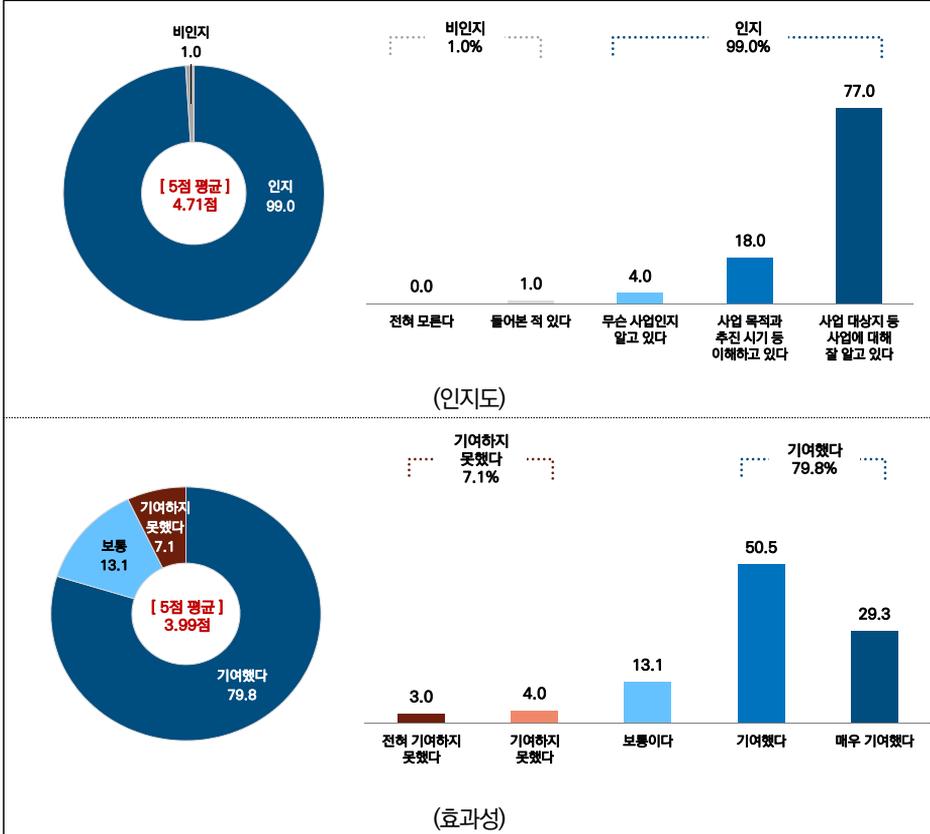


⑤ 법정 문화도시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법정 문화도시 사업’ 인지도 평균은 4.71점, 효과성은 3.99점이었다.

[그림 4-19] 법정 문화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9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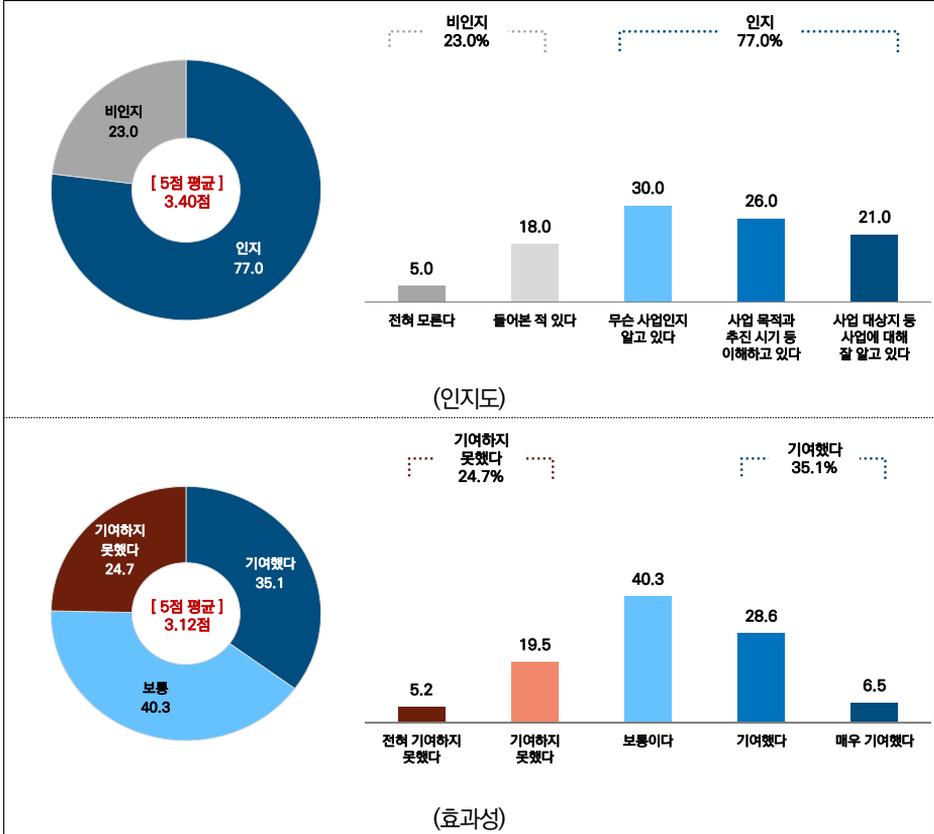


⑥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지도 평균은 3.40점, 효과성 평균은 3.12점이었다.

[그림 4-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77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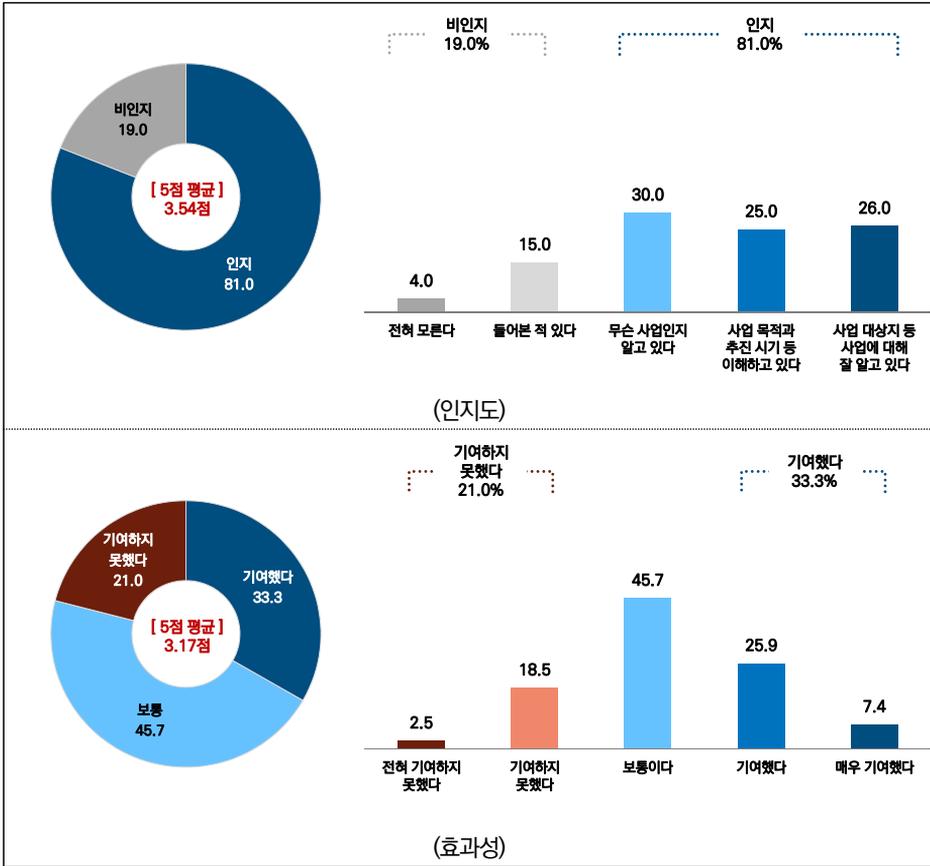


⑦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인지도 및 효과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인지도 평균은 3.54점, 효과성은 평균 3.17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인지도 및 효과성

(사례수=인지도 100명, 효과성 81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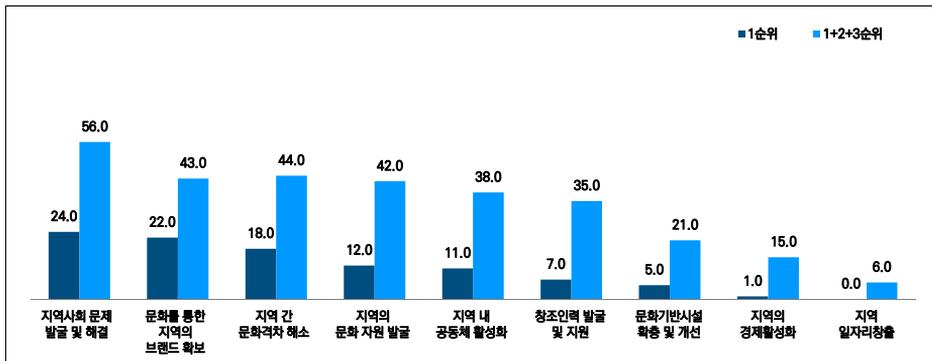


### 3. 정책사업의 지향 방향성

문화 도시 정책사업의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1순위 기준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이 24.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22.0%)’,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18.0%)’,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12.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 일 자리 창출’은 0.0%였다.

1+2+3순위 합계도 1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56.0%)’이었다. 1+2+3순위 합계 결과와 1순위 결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4-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방향성



문화 도시 정책사업의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1순위 기준, 거주 지역 유형, 직업, 참여 정책 사업 구분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문화 도시 정책사업의 지향 방향성에 대한 거주지역별 1순위는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32.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거주자는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20.5%)’, 읍면/지역 거주자는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25.5%)’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25.5%)’를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라고 응답하였다.

직업별 문화 도시 정책사업의 지향 방향성에 대한 응답 결과, 교수 및 강사는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33.3%)’, 공무원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27.8%)’, 문화관련 기관 직원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44.4%)’을 1순위로 꼽았다.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는 ‘창조인력 발굴 및 지원(50%)’이 압도적으로 1순위였다.

연구자는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22.2%)',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22.2%)',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22.2%)' 등 의견이 다양하였다.

참여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34.6%), 법정 문화도시 사업(27.6%) 참여자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34.6%), 동아시아 문화도시(36.4%) 사업 참여자들이 1순위로 꼽은 방향성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27.8%)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30.0%) 참여자는 각각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를 1순위 문화 도시 정책사업의 지향 방향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화지구 참여자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37.5%)'를, 참여 사업을 '해당없음'으로 선택한 경우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가 1순위였다.

〈표 4-2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방향성(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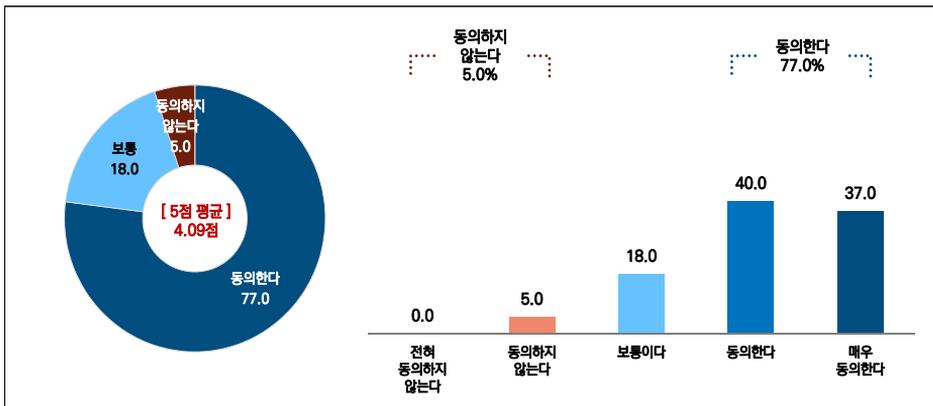
		사례수	지역 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창조 인력 발굴 및 지원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일 자리 창출
전체		(100)	24.0	22.0	18.0	12.0	11.0	7.0	5.0	1.0	0.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32.5	22.5	20.0	7.5	10.0	0.0	5.0	2.5	0.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0.5	20.5	13.6	15.9	11.4	13.6	4.5	0.0	0.0
	읍/면 지역	(16)	12.5	25.0	25.0	12.5	12.5	6.3	6.3	0.0	0.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8.3	33.3	16.7	16.7	25.0	0.0	0.0	0.0	0.0
	공무원	(36)	11.1	22.2	27.8	8.3	13.9	5.6	11.1	0.0	0.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4.4	22.2	14.8	7.4	0.0	7.4	3.7	0.0	0.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33.3	0.0	0.0	16.7	0.0	50.0	0.0	0.0	0.0
	연구자	(18)	22.2	22.2	11.1	22.2	16.7	0.0	0.0	5.6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례수	지역 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창조 인력 발굴 및 지원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일 자리 창출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 도시 사업	(26)	19.2	34.6	7.7	19.2	11.5	7.7	0.0	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2.6	23.9	19.6	4.3	10.9	8.7	0.0	0.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7.8	27.8	11.1	16.7	2.8	11.1	0.0	2.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7.6	23.7	17.1	9.2	10.5	6.6	5.3	0.0
	동아시아 문화 도시	(11)	27.3	36.4	0.0	18.2	9.1	9.1	0.0	0.0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20)	30.0	30.0	5.0	15.0	15.0	5.0	0.0	0.0
	문화지구	(8)	0.0	25.0	0.0	25.0	37.5	12.5	0.0	0.0
	해당없음	(7)	0.0	14.3	28.6	14.3	28.6	0.0	14.3	0.0

①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77.0%(매우 동의한다: 37.0% + 동의한다: 40.0%)으로, 5점 척도 기준 평균 4.09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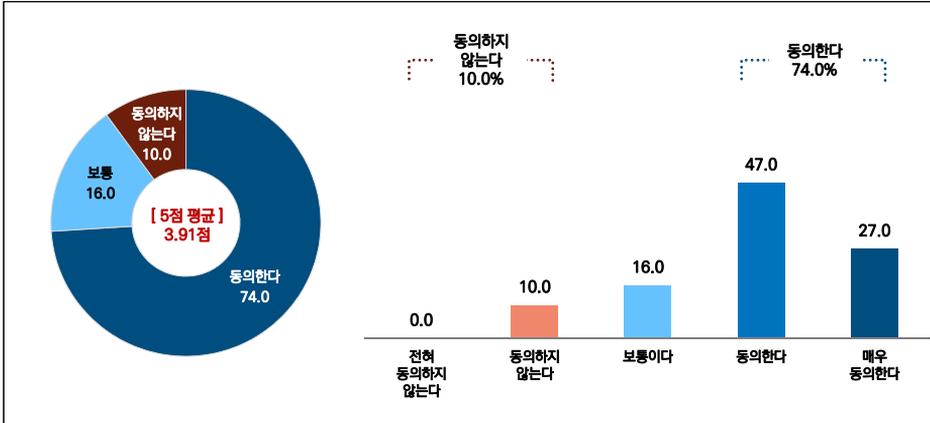
[그림 4-23]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



② 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지역 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문 문항에 대해 74%(매우 동의한다: 27.0% + 동의한다: 47.0%), 평균 3.91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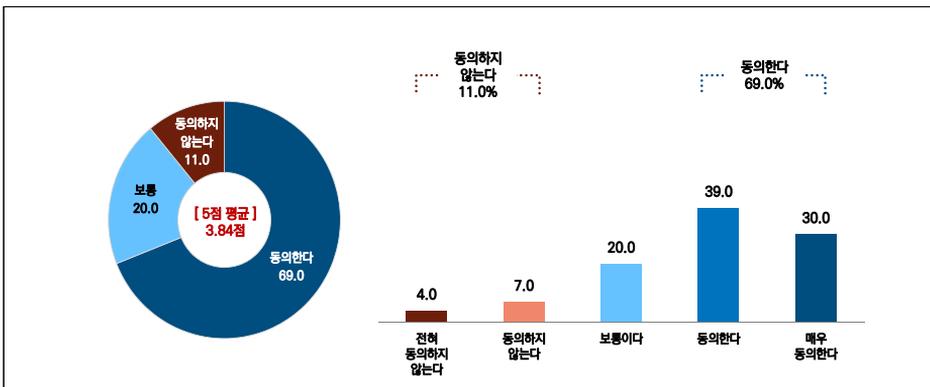
[그림 4-24] 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



③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조직, 별도 문화관련 기관으로 일임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행정조직이 아닌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동의율은 69.0%(매우 동의한다: 30.0% + 동의한다: 39.0%),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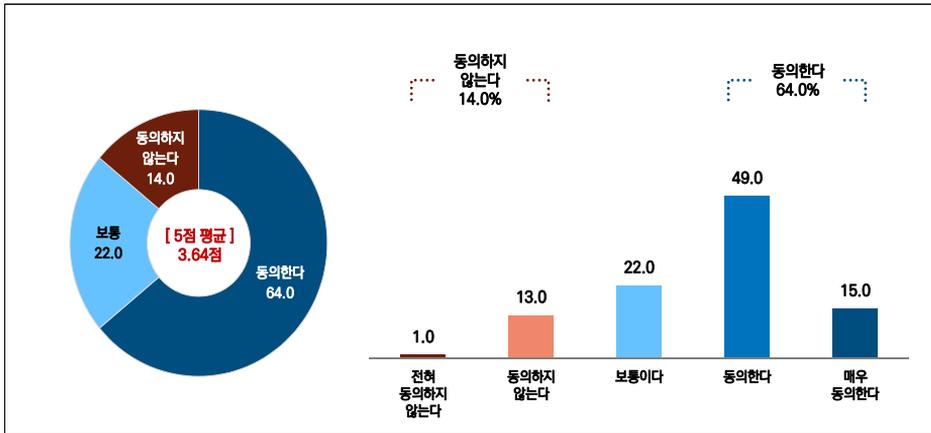
[그림 4-25]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조직,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으로 일임



④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의 의견이 64.0%(매우 동의한다: 15.0% + 동의한다: 49.0%),로, 평균 3.64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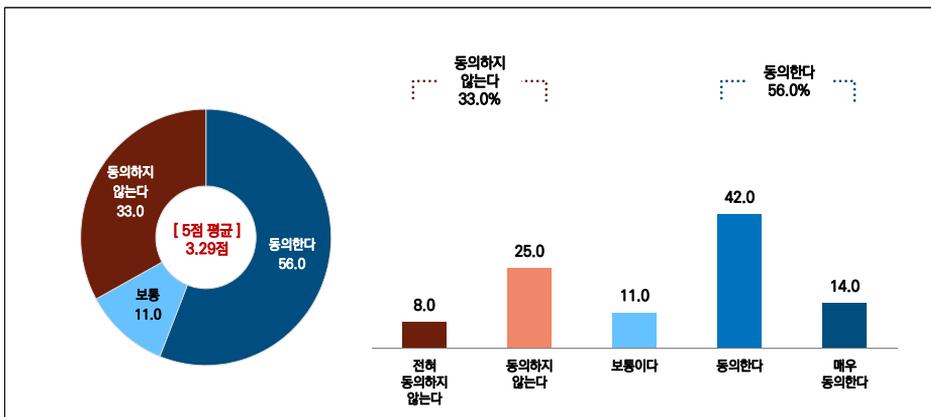
[그림 4-26]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⑤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 시 기본 콘텐츠 분야 설정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할 때 기본 콘텐츠 분야(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등) 설정은 필요하다’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6.0%(매우 동의한다: 14.0% + 동의한다: 42.0%)평, 5점 척도 기준 평균 3.29점이었다.

[그림 4-27]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 시 기본 콘텐츠 분야 설정



##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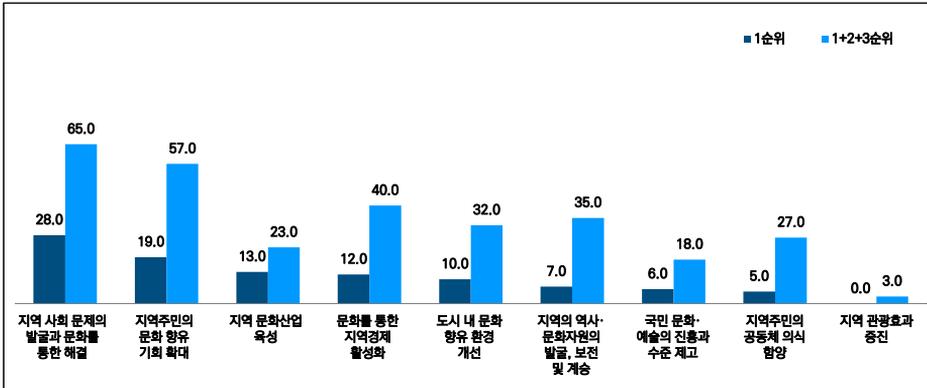
### 1. 조사 결과 요약

#### 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사회 문제의 발굴과 문화를 통한 해결’이 1순위(28.0%) 및 1+2+3순위(6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관광 효과 진흥’은 1순위 응답자가 0.0%였고, 1+2+3순위 합계에서도 3.0%로 9개 항목 중 최하위였다. ‘지역 문화산업 육성’은 1순위 응답률이 13.0%로 세 번째로 높았던 반면, 1+2+3순위 합계(23.0%)에서는 지역 관광 효과 증진’ 다음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그림 4-2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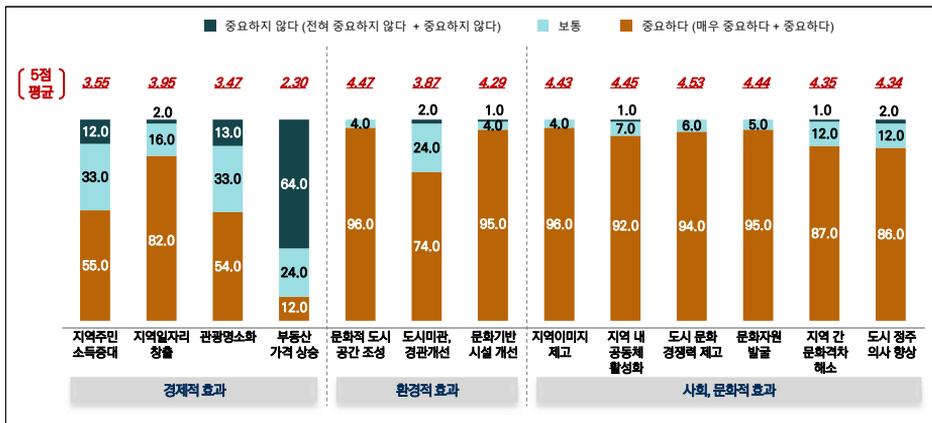
#### 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는 3개 영역(경제적 효과 4개 항목, 환경적 효과 3개 항목, 사회문화적 효과 6개 항목)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는 ‘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가 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4.47점)’,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4.45점)’, ‘문화자원 발굴(4.44점)’, ‘지역이미지 제고(4.43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우 평균 2.30점으로 다른 기대효과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에서 상위권 응답의 대부분은 사회문화적 효과 영역에 해당되며, 경제적 효과 영역의 ‘지역주민 소득증대(3.55점)’ 등의 중요도 결과는 모두 4점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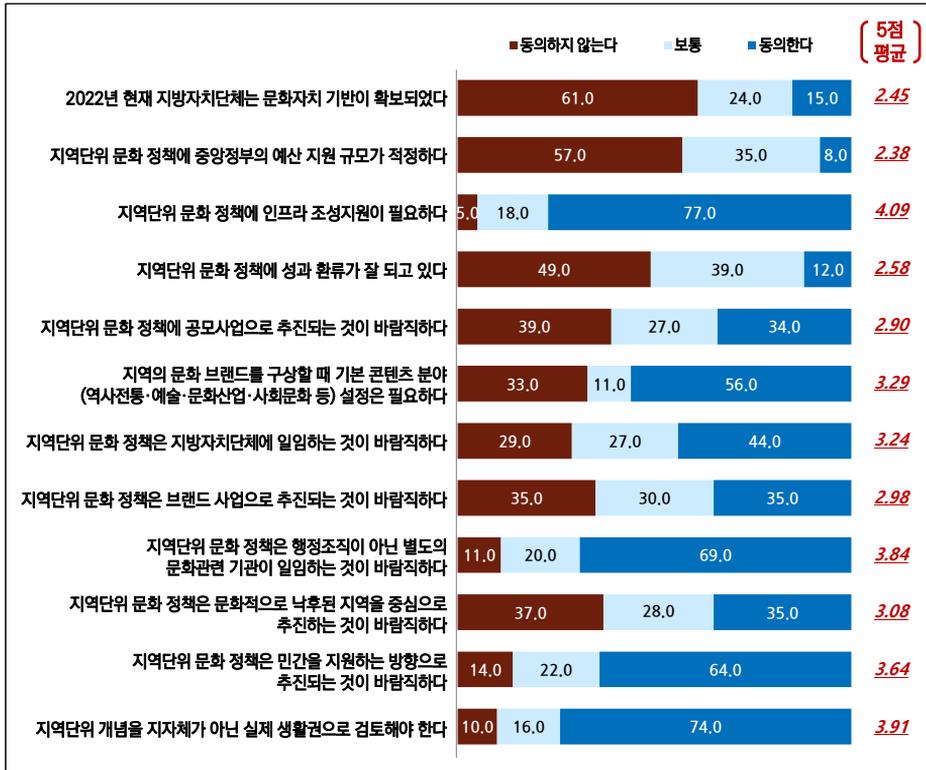
[그림 4-2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종합)



#### 다.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중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0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해야 한다(3.91점)’,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행정조직이 아닌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이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84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 2. 개방형 의견 요약

### 가.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의견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인지도 및 효과성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이 인지도와 도시 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각 변화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효과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히 '성과' 측면에서 해당 사업들의 성과를 정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문화격차 및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해 정성적으로 긍정 평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부분에 정책의견을 제시한 설문 응답자들은 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문화지구 등 물리적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답변자도 있었다.

〈표 4-2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관련 주요 의견 요약

분류	주요의견	세부 내용
인지도	도시브랜드 관심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와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인지도 및 효과성을 높임</li> </ul>
	도시에 대한 시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관주도에서 주민 중심 사업으로, 경관 미화사업에서 삶의 질 중심 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인지함</li> </ul>
효과성	지역별 효과성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의 특성보다 보편적인 문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도시의 역량에 따라 효과성의 차이가 큼</li> </ul>
	효과성 논의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효과성을 무엇으로 판단해야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음</li>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효과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결과를 논의하기 어려움</li> <li>효과성의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성과지표에 대한 공동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li> </ul>
	다년도 사업 기획으로 효과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사업이 단년도로 추진되는 반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효과성이 높음</li> </ul>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부심 증대 등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됨</li> </ul>

분류	주요의견	세부 내용
	지역갈등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의 문제 해결 방향을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한 점이 중요</li> <li>지역 내 산재해 있는 갈등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주도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li> <li>문화적 소외 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일환임</li> </ul>
	지역의 상황을 고려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도시의 특색과 정체성을 발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사업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에 급급하게 됨</li> <li>도시의 특색과 정체성을 발굴하지 못하고 차별화 되지 않은 보편적인 정책이 되어 진정한 도시의 문화가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 발생</li> </ul>
	사업 본질에 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에서 큰 사업비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본질이 퇴색되어 아쉬움. 실제 사업 수혜자는 지역문화 전문가라고 할 정도니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줄여야 할 것임</li> </ul>
사업방향제언	유사사업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중복사업이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지역의 문화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모니터링제도 도입 및 사업 승인 컨트를 장치의 개선이 필요함</li> <li>일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줄세우기식 공모사업으로 변질되어 사업의 변화 필요</li> </ul>
	변화하는 사회환경 수렴,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기반 문화정책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시민, 예술가, 지자체의 문화인식을 확장하게 하여 동시대에 상응하는 지역의 주체적 문화기반을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음</li> <li>외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li> </ul>
	도시의 유기성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임</li> </ul>
	물리적 규제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지구의 경우 국제법상의 지구단위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시스템 상으로는 좋은 제도로 파악됨.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면 좋겠음</li> </ul>

## 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방향 의견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주관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책 사업의 방향성과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확보, 문화시설 확충 방안 모색, 전문조직 및 인력의 적극 활용, 공모 형태의 사업에 대한 제고, 민간 영역의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표 4-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방향 의견

분류	주요의견	세부 내용
사업의 방향성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속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하나 지방정부가 문화부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재할 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함</li>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을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문화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중앙정부가 적절한 지원 및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li> <li>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의 여건에 따른 자율성 부여 필요</li> </ul>
	정책사업 목적성 명확하게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사업목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포괄적 개념보다 정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임</li> <li>추상적인 정책목표 지양 필요</li> </ul>
	지자체의 종합적 정책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성과는 지역에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나, 단편적이고 개별사업 단위에서 진행되어 종합적인 지역단위 정책 설계에 한계점이 있음</li> <li>상향식 사업설계, 도시의 문화적 경영체계 구축, 문화민주주의 확대 관점 필요</li> </ul>
	정책 시행 방향의 원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원활성 부족.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 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 문화정책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가 자문위원회 모두가 다름</li> <li>정책시행방향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고 생각,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li> </ul>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를 균등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단위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방식 필요</li> <li>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에 일부 주면 지자체로의 점진적 분권이 가능할 것</li> <li>중앙정부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기회 확대를 위해 정책 방향 수립, 광역과 기초는 지역 내 자치와 협업의 토대 위에 분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정책 시행 필요</li> <li>중앙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예산 수립, 국가단위 지역문화정책 연구, 문화인력양성 및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광역은 광역 내 문화예술 창작지원,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사업 운영, 기초 지자체 균형발전 지원, 문화기반조성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초는 생활문화진흥사업, 지역주민 문화향유사업, 소규모 단위 특화거점 사업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유사사업관리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의존도가 높고 전국이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사업은 한정적임</li> </ul>

분류	주요의견	세부 내용
	광역-기초 간의 협력 방안 도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기반의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업과 역량강화를 위한 광역-기초 간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이 요구됨</li> <li>인구소멸이 심각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위의 연대 및 교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원 방안 모색</li> </ul>
	권한부여 전 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정부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정부가 문화정책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판단하여 합당할 때 지원하는 것 필요</li> </ul>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정량성과도출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종합성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함</li> </ul>
	과정을 성과로 인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민, 관, 전문가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음</li> </ul>
	자체 성과관리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서 성과를 스스로 설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환경 마련 필요</li> <li>중앙과 지역, 지역의 문화현장의 협력적 구조 속에서 환류과정 자체가 성장의 과정과 연결되도록 정책 개발 필요</li> </ul>
	비 문화도시와의 성과토론, 확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 성과 공유를 공모 선정 도시들끼리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미선정된 도시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li> </ul>
문화시설 확충 방안 모색	수요대비 시설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시설은 지역별 특성화가 필요, 지역에 문화시설 확충은 수요대비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li> <li>지역은 여전히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배려 필요</li> </ul>
	인프라 부족 도시의 정책 개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 환경 등이 조성되지 못한 곳에 정책 개입이 필요함.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에 정책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li> </ul>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를 통한 보조금 사업은 경비 제한 등 문화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성과가 위축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하드웨어가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음. 무분별한 문화시설 조성을 경계하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li> <li>문화는 기반(인프라)가 중요함. 소모성사업보다 소프트웨어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조성 즉, 하드웨어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높음</li> </ul>
전문조직 및 인력 활용	로컬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지역 로컬 전문인력 양성 필요</li> <li>문화정책 분야 전문인력을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기반 부족</li> <li>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이 기본적으로 바탕 되어 지자체가 지역활동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li> </ul>
	지역인력 활용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사업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li> <li>지역의 문화예술관련 학과 부재로 관련 인재를 찾기에 어려운 실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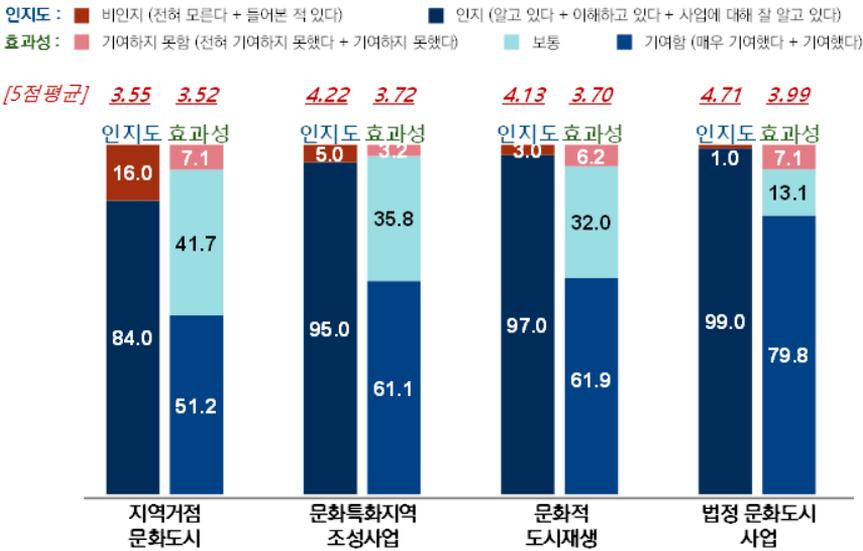
분류	주요의견	세부 내용
	전문인력을 연계한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당분야 전문(행정)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책적으로 일관된 기초를 가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li> </ul>
정책사업 추진 형태	참여자 확대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의 참여자가 복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문화적 삶의 질 확산이 이뤄지지 못함</li> <li>젊은세대 중심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문화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li> </ul>
	공모 외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 문화정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사업 성과 증명에 어려움이 있음. 경쟁가열 구도 쇄신을 위해 공모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li> <li>공모방식의 정책사업 추진은 오히려 지역 문화의 획일화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li> <li>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전 준비 및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국비확보를 위해 공모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경쟁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음</li> </ul>
민간영역 참여	자생적 민간조직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 등의 공공조직이 아닌, 자생적 민간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모델링하여 기존의 사업 취지대로 추진 필요</li> <li>지역 문화기획자 양성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공간 등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민간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에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음.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양성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li> </ul>
	경제성 효과 창출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와 관광 융복합사업 등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을 꾀하고 민간 활동 투자 공공기금 조성 확대 등을 고려 필요</li> </ul>
기타	빠른 다음 지역단위 문화정책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도시 시즌2로 불리는 차기 사업에 대한 정책설계가 진행되어야 기초 자치단체의 정책 공백이 없을 것임</li> </ul>
	실 생활환경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구역에 따른 정책은 실제 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 있음</li> </ul>

### 3. 시사점

#### 가.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중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와 효과성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4-3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결과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 현재 지방이양된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의 인지도는 84.0%, 효과성은 51.2%로 나타났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인지도(95.0%), 효과성(71.1%)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인지도(95.0%)와 효과성(61.9%)과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정책 인지도 99.0%, 효과성 79.8%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전문가 집단 및 문화전문가(사업담당자)의 인식 또한 현재 정책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사업의 평가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그에 따라 효과성 또한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효과성에서 기여하지 못했다(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3.2%, 법정 문화도시 사

업은 7.1%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 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차이로 분석된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브랜드 차원이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차원이든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환경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행정추진 주체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다. 이에, 중앙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해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 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나. 공간 기반 인프라 조성

본 연구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중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중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0%로 12개 질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그림 4-32]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이 필요하다”의 응답 현황



이에 대한 설문 주관식 의견 및 현장 인터뷰를 종합하면, 문화사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수행 및 집행 체계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문화기반시설 혹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공간을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된 공간들은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아울러,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근 지역을 ‘클러스터’화 하려는 계획이 있을 경우,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주민들이 부동산 시세를 높게 받고자 하는 등 ‘재개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인프라 조성사업에 매우 한정적인 예산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를 국고보조금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모든 지역에 문화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며, 기 설립된 문화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고민인 지역이 분명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공모 대상을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화 할 것이라면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해당 사업의 수혜를 볼 확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였다. 즉,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으면 사업 조직을 갖추는 것 또한 어려우며, 주민이 모이는 동력이 사라지므로 정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 응답 집단별 의견 편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및 사업담당자는 대체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에 있어서 '지역 사회 문제의 발굴과 문화를 통한 해결'이 전체 직업 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즉, 직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목적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이해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교수 및 강사, 연구자들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전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문화관련 기관 직원들은 실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을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의 시대적 흐름 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은 참여 지역과 인력의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가장 많은 도시가 참여한 사업이자 인지도 및 효과성 부분에서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사업의 참여가 곧 정책의 효과성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실제 사업 담당(문화기획 관련 전문가 등) 집단보다 '문화를 통한 브랜드 확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개방형 의견에서는 비예산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의견과 지속적인 공모사업 체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정량적 결과에서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의 척도 항목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35.0%)'과 '동의하는 비율(35.0%)'이 같았고, '보통' 응답이 30.0%로, 이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효과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방형 의견 수렴 결과, 설문 참여자 100명 중 88명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방향성과 사업 추진 의견을 작성하였다. 이는 설문 참여자들이 정책 관심도가 높고, 향후 정책 방향에 다양한 의견들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량적 설문결과 및 개방형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과 사업 추진 방향성 도출에 반영하였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제5장

##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선 방향



# 제1절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 재구조화

## 1.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재구성

### 가.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 재구성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문화 도시의 육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도시가 ‘문화 도시’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의 흐름과 도시의 규모, 특징에 따라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될 것이다. 때문에 많은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들이 지정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문화 도시, 문화 수도의 선정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단에 이전의 문화 도시의 타이틀을 수여받은 경험이 있는 도시들을 참여시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선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 선정 방식을 2000년대부터 고수하고 있지만, 정책 목표는 인프라 조성, 도시 콘텐츠의 발굴,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주민의 참여 등으로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문화 도시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문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도시에는 인프라 지원을, 시민의 문화참여와 향유가 보장되지 않는 도시에는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의 제공과 참여 기회의 확대를, 문화적 역량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하고 싶은 도시는 ‘문화도시’로의 가치 인정을, 그리고 문화자원을 통해 도시의 산업을 개발하고 싶은 곳은 개발자원으로서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요구들이다. 각각의 목표들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문화도시형’과 ‘문화마을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던 사례나, 지역단위 문화정책 이외의 사업들로 필요를 충족하려 하였다. 다만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법정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형태로 추진되어 문화도시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도시와 문화적 역량 개발이 필요한 도

시 모두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점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성과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중앙정부가 원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표에 대한 제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역의 문화정책 현황에 근거한 '정책 개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 현재 전문가 및 관련 사업 실무자들은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새로운 키워드로 '균형발전', '지역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자생기반 마련', '구체적 목표'를 꼽는다.

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문화기반,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지역성 강화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이 계획과 사업에 있어 획일화 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이자, '문화적 도시'가 갖는 의미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현재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광역과 기초가 함께 경쟁하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인식이자, 정부 규모에 맞는 역할이 있어야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현장의 경험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 등을 거쳐 온 이들은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설정, 법제도 및 기반지원 방안 확충에 집중하고 광역정부는 기초 지자체 간 자원 연계, 재정 지원에 힘쓰며, 기초 지자체는 단위 사업을 담당하여 지역 곳곳의 문화환경 개선과 주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충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자생기반 마련은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지속성을 띄기 위해서는 공간과 사업, 그리고 인력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이를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화 도시로 브랜딩된 사례들이 민간과의 협업, 사업확대 등을 통해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 중앙 및 지자체 예산으로 성장한 이후의 도시 성과는 민간시장의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 목표는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바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업 계획단계부터 공유하여, 성과 도출과 이에 따른 환류를 명확하게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공모의 성격으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평가 체계에서 우수성을 드러낸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모든 지역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무엇으로 성과의 고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와 각 사업 간의 달성 목표에 대한 목표를 각기 다르게 수립하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전문가와 사업 전문주체들은 중앙정부가 재정당국과의 예산 수립에 앞서 정책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밝힌다면,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이 흐름에 맞는 문화예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될 것임을 조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구의 감소, 문화기반시설의 부족,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관련 전문인력의 미비 등으로 광역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도시의 경우, 오히려 정부 공모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문화 기반이 낙후된 도시를 발굴하여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으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표 5-1〉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키워드 및 주요 내용

개념 키워드	주요 내용
균형발전	지역 간의 문화기반,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
지역성 강화	지역단위 문화정책에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
중앙과 지방의 협력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간의 역할과 사업 책임의 분담
자생기반 마련	민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담보
구체적 목표	성과도출, 환류 체계의 명확성 확보

이에 따라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지역이 문화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가 함께 이루는 문화 도시 육성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목표는 이에 근거하여 중앙의 목표, 광역 지자체의 목표, 기초 지자체의 목표 등이 하위로 생산되는 구조로 구상할 수 있다.

## 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표

우리나라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의 문화 도시 논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되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구조를 지향하는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되며 2004년 지역 거점 문화도시 육성부터 본격적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출발하였다.

정책의 특징은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추진되던 2000년대부터, 해당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불려왔으며, ‘문화도시’의 발굴과 육성이 정책 목표로서 지속적으로 대두 되었다. 즉, 정책적으로 ‘문화 도시(Cultural City)’에 대한 개념과 사업목적은 조금씩 다르게 인지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도시 전반이 문화적 이미지로 충만하고, 문화향유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문화를 통한 생태계가 구현되는 ‘문화도시’의 육성을 목표로 했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인 법정 문화도시 또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목적성에 대한 지적보다, 도시가 ‘문화 도시’로서 인정받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갈증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자체가 ‘문화도시’로의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갖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오랫동안 정책이 수행되며 기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성장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상과 지역의 현황에 맞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추진했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한 발전적인 문화도시의 상과 이에 따른 정책 목표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1차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2024년에 종료되는 만큼, 이후 도시들이 문화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가 앞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2.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방향성

### 가. 브랜드화 및 개발형 등 정책 목표 설정 필요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문화도시’ 사업으로 불리며 약 20년 간 중앙정부가 기획·실행해 왔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도시를 공모하여 브랜드를 먼저 부여한 뒤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기초 지자체가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일부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반, 문화환경, 문화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고 일부는 우수한 지역에 대표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사업의 다양화로 세부 목적 수립 추진을 위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장소기반의 문화정책이므로 해당 장소가 갖는 특징을 파악하여 중앙정부는 지역 단위별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농촌, 대도시-소도시, 도농복합간 문화적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역 문화지수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각 유형에 공모 조건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이 문화정책을 어떠한 목적으로 수립하려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 정책 사안인지를 자체 점검 및 평가하여, 스스로가 대표 ‘문화도시’로서 기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법정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와도 연계될 수 있다. 2022년 현재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5차 도시 지정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차 법정 문화도시의 사업이 종료된다. 이는 법정 문화도시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지속화 할 것인지, 향후 6차 이후의 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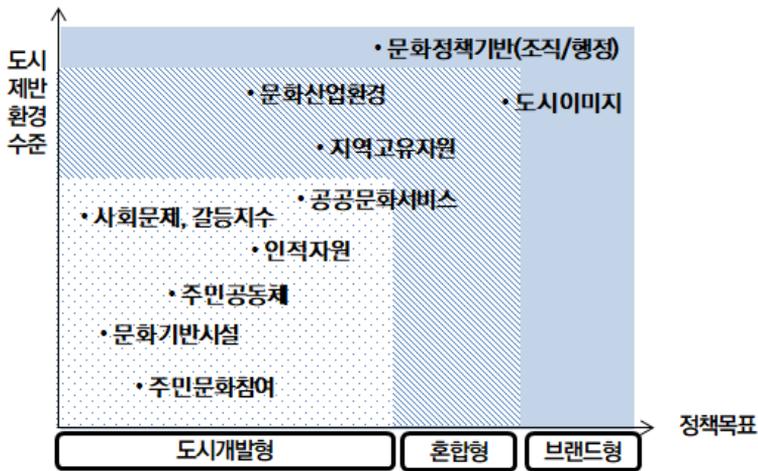
더불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아닌, 또 다른 ‘문화 도시’를 지정하는 절차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중앙정부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목표를 ‘우수한 도시 브랜드’에 둘 것인지, 혹은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로 설정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약 20년 간 지속적으로 언급되던 ‘문화도시’가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발전시키고, 지역민이 향유하고 참여하는, ‘문화적인 모든 것을 갖춘 도시’를 지향하는 의미로 활용하였다면, 이제는 국가 대표 문화적 도시로 표현할 것인지, 혹은 전 국토의 문화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문화기반 도시 개발 사업의 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문화도시의 사례처럼, 브랜드를 갖는 과정에서의 지원을 추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타이틀을 가질 도시를 선정하여 정책의 사례이자 특정 기간의 브랜드 리더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규모와 참여 대상을 분리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소규모의 지원사업 및 도시 문화기반 육성 사업의 경우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향후 중앙정부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5-1] 도시제반 환경 수준에 따른 정책목표 구분(안)



\*연구진 직접 작성

### 나. 공간의 범위에 따른 정책 방향 조정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예비사업이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사업의 세부 분류였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단위의 도시에게 타이틀과 예산지원이 함께 부여되는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도시형과 문화마을형으로 구분되어, 한 도시 내에서도 2건 이상 지원이 이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중복지원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성이 다르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또한 달랐기에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문화도시형 및 문화마을형 모두 인프라 구축 지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문화도시형의 경우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 당 국비 3억 원, 지방비 4.5억 원 총 7.5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마을형의 경우 마을 단위로 지원, 1개 마을 당 국비 0.8억 원, 지방비 1.2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내용 또한 문화도시형은 도시 문화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데에, 문화마을형은 마을단위 공동체활동과 마을가치 확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당시에도 지방이양대상사업임을 명시하고, 문화도시형에 한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의 가능성을 사전에 공고하기도 하였으나, 도시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달리 하여 필요에 따라 도시가 선택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자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모든 도시가 공모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추진되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5년 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의 경우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여력이 없거나, 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계획, 평가 단계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건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방비와 매칭하여 문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국비 지원 공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방분권법과 이에 따른 보조금법에 근거해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비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성과를 향후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 문화 클러스터와 문화 도시 간의 차이 제고

현재까지 추진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인프라 조성 지원에 대한 제고와 지역단위의 개념을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인프라의 조성 지원은 지역분권법에 근거하여 보조금법 상 한계가 있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부처 간 합동으로 추진되

는 생활SOC 건립지원사업 내 생활문화센터 또한 지방이양 시점의 도래로 지속 건립 확충 및 이에 따른 운영 활성화 저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대형 유휴공간 등에 국립 문화기반시설 분원 유치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인프라 조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시립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건립이 가능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제반 정책환경이 긍정적인 경우이며, 실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규모 시설(생활문화센터 등 참여형 활동 공간)은 소도시일수록 건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고 운영주체가 없는 한계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인프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 클러스터’의 필요성과 조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지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를 지정하는 방식과 지정 이후의 장점이 실질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안하였다. 때문에 ‘문화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인구 수, 접근성 등에 비례하여 문화 인프라를 검토하였을 때, 시설이 부족한 도시가 이를 확충하고자 할 때 정부가 지자체 매칭 등을 통해 보조 및 컨설팅 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화 클러스터의 방식은 2010년대 초반, 문화예술의 기능을 특정 공간에 집적시키는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s)’의 관점에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시도가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내 문화지구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당시의 문화 클러스터의 정의는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 기능의 지리적 집합체”<sup>94)</sup>로서 예술가의 문화 생산과 교류의 집적과 문화예술 활동의 긍정적 확산 효과를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는 데 초점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내 문화지구의 정의도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명시 돼 있다.

2022년 현재까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추진되며 한계점 및 보완점으로 제안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기존의 문화지구보다 더 소규모의 주민의 실질적 문화 활동이 보장될 수 있으며,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기획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위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생활SOC 공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주민의 문화활동이 단순 참여공간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공연, 전시, 교육, 예술활동 등 다방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문화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94) Stern and Seifert, 2007; 박세훈·김은란, 2013 재인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 ‘문화 클러스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의 근거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방식의 ‘문화 클러스터’는 기초 지자체 단독 추진이 아니라, 생활권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지방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주민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세출액이 15년간(2001~2016년) 42만 7천 원에서 161만 9천 원으로 119만 2천 원이 증가했고,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20개 축소도시는 136만 8천 원에서 482만 2천 원으로 345만 4천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군 단위 지역의 경우는 1인당 평균 세출액이 198만 4천 원에서 736만 9천 원으로 무려 538만 5천 원이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20개 축소도시 내 59개 공공시설 중 97%가 적자였다. 때문에 마강래(2019)는 ‘압축도시’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중소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 중앙이 계획하고 나서서 게 옳다면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시점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과세 자주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95)</sup>.

도시 전반의 ‘압축화’에 앞서 현실적으로 도시의 경계를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클러스터’화 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출범한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제도와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를 언급하였고, ‘국정과제 14.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에서 현 공모 방식의 정책사업을 지자체 중심 상향식 정책사업으로 개편할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들이 인근 도시이나 같은 생활권 내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형으로 인프라 조성을 구상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5) 마강래(2019),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개마고원, 138~148쪽 참고

## 라.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다양화 검토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궁극적으로 ‘문화 도시’를 육성 지원하는 데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목표는 각 지역의 특색과 기반환경에 따라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향후에 추진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 목표를 지역의 문화적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인지, 혹은 문화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 혹은 동시 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을 모두 목표로 할 경우, 사업의 다양화 혹은 지원 및 공모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고 정책에 따른 수혜자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 간 문화적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가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즉 기반시설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실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목적인 경우가 다수였으나, 이에 앞서 국비 지원을 위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의 필수 이행 혹은 성과 반영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정책 확장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이양된 사업들이 무의미하게 종료되는 것 보다 연계성을 찾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성과 및 환류 체계를 제안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이를 연속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마. 지역단위 문화정책 세부 사업 추진 방향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세부 사업을 검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약 20년 동안 논의되고 지속되어 온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연계성을 갖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같이 지방이양이 된 사업에 대해 비예산 관리 체계 등이 있었다면 현재 추진되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들이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이미 성장을

어느정도 달성한 도시들에 대한 정책과 여전히 문화 격차를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들에 대한 정책을 다르게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도시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문화 도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문조직의 설립과 같이 인력 육성 지원이 단순 사업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정책적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도시’에 대한 범위 또한 기초지자체보다 더 작은 단위 혹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주민의 향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위의 정책 개발 또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세부 사업이 점차 도시 간에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초 지자체의 상향식 사업 개발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향식 사업계획은 다소 정책용어가 부족하고 실행 방안이 있어 투박하다는 평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정책 개발자들이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이는 광역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권한을 이양하여 점차적으로 문화분야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는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2절 정책 추진의 효율화 제언

### 1. 정책 추진 고려사항

####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곧 지방분권이라는 대제 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자체도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 중앙 주도의 공모 사업에 있어 광역의 개입이 과연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또한 높기에 중앙정부가 감사 역할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표가 여전히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성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의 발굴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해당 목표에 대한 적절성이 유지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분리하여 브랜드 사업과 개발(육성)사업으로 분리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부 정책 및 사업 방향을 「지역문화진흥계획」 등에 담아 자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로 삼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모사업의 수준을 지자체의 규모, 예산의 규모, 사업목적 등으로 분리하여 유형화하고 개발 및 육성이 목적인 사업은 목적에 대한 성과 관리와 환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브랜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문화도시’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하여 문화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넘어 각 지자체에 도시의 문화적 요소와 발전 방안 등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정책 우수 사례로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예산 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들의 사례처럼,

일정 기간 동안 ‘문화도시’로서의 타이틀을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시 부여할 것인지 또는 선행 ‘문화도시’로서 명예의 전당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광역시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인구, 문화환경, 인적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실제 조사를 기반으로 예산 매칭,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개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되 세부적인 문제 발굴과 이에 따른 자체 성과목표 및 관리 체계를 도출하여 상향식으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하며, 이는 광역을 거쳐 향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을 도모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현재까지 육성된 전문기관과 시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한 인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기 건립 및 수립된 인프라와 이에 따른 운영조직 및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단, 기초지자체의 여건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와, 컨설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모색을 검토해야 한다.

#### 나. 민관협력사업의 가능성 검토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기초지자체의 문화정책 인식 및 방향성 확보에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부 보조금의 종료 이후 정책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64.0%가 동의하여 향후 지원이 지자체 직접지원을 넘어 민간 생태계의 구축으로도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림 5-2]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응답 현황



이는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 경제적 효과 창출과 민간 활동 투자, 공공기금 조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직접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를 추진할 수도 있으나, 현장 전문가는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집행하여 실적을 내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고, 민간의 영역은 또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방향성을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자연스러운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문화산업은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이 지역의 자원이 강조되는 만큼, 외부지역의 민간 투자와 인력 유입으로 인해 기획의 지속성 한계, 인재의 유출, 전 지역의 문화산업의 획일화 등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보조금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민관과의 협력체계, 혹은 기존 전문인력의 문화산업으로의 성장 등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에 민관협력체계 또한 인프라,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 지역단위 문화정책을 통해 설립된 기반시설을 전문 민간기관이 위탁하여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양성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 추진하고 모범 사례를 육성하여 광역 지자체에서도 유사 자체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에서 새롭게 사업화 하여 발전적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즉, 민간이 지역문화를 통해 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이드를 주고 최소한의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민간협력의 기본 목표는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직접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으므로 산업적, 일자리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도시 브랜드를 관리, 지원하는 정부조직 제고**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단순 문화사업 지원이 아닌, 도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복합 정책

으로 볼 수 있다. 인구·사회적 변화와 지역의 역사 및 자원과 긴밀하게 영향이 있으며 인적자원의 능력에도 영향을 받는 유기적 정책 사업이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도시 브랜드와의 적합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같이 국제 사회에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도시 브랜드와의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정책 사업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는 중앙정부 부처 내 지역 브랜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육성 및 중복사업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공간을 관할하는 사업들을 소관하는 부서를 설립하거나 TF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법정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부처 내 도시 브랜드 공모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담당을 지정하는 것이다. 도시 관점에서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브랜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육성, 성장시킬지에 대한 가이드와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관 사업을 특정 지자체가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지 검토의 기능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선정과 평가, 환류를 체계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부서로 역할 할 수 있다.

새로운 부서 조직 혹은 전담 TF의 수립으로 인해 기존의 담당 부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계획과 비전,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담당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과 평가, 법적 한계 개선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문화의 변화와 문화적 낙후도에 따른 새로운 사업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새로운 부서는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 체육, 관광분야 지정 도시에 대한 모니터링에 체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문화적 브랜드를 인정받은 도시들이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벤션, 페스티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홍보 등의 간접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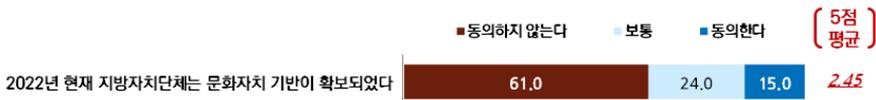
## 2. 중앙정부의 역할

### 가. 정책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할 권한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사업 종료와 예산 소진에 따른 이양이 아닌, 실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데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기 이양된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의 현황을 기반으로 이양의 시점에 따른 지자체의 사업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의 시점이 예산 종료와 반드시 획을 같이할 것이 아니라,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202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치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항목에 61.0%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정부 사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을 지자체의 요구와 좁혀지지 않은 지역의 문화적 격차에서 찾되 기존의 방식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3] “202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치 기반이 확보되었다”의 응답 현황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정책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수 있다. 즉, 예산 지원은 없으나 인증 및 간접지원을 통한 ‘브랜드형’과 낙후지역의 지원 보조를 위한 ‘성장형’ 공모사업의 지속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형 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부여하는 복합형 사업 또한 검토가 가능한데, 이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방향성을 ‘문화도시’ 브랜드로 지속화 할 것인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대상을 지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업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도 논의할 수 있다. PPP로 일컫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 혹은 PFI로 일컫는 민간회사가 건물, 시설을 완성하여 정부에

임대하는 형식(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지자체가 문화자원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초기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나. 성과관리 및 환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성과는 주로 예산 소요 현황과 계획대비 실적, 수혜자의 수 등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순 지표가 실질적인 지역의 문화적 영향력과 성과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문화정책이 단기성 성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만족도 등은 매우 상대적인 지표로 사업 영향을 드러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에서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다’는 질문에 49.0%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동의율은 12.0%에 그쳐 실제 사업 성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4]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대한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다”의 응답 현황



성과관리의 어려움은 사업의 고도화로도 분석될 수 있기에, 사업 담당자의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수월성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다양할수록 성과관리에 한계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과관리의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중앙정부의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환류 체계를 갖추으로써 정책 참여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 환류는 비예산 사업에서 더욱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자체가 정책에 참여하는 동력을 자체 성과의 환류에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방정부의 역할

#### 가. 정부 정책 사업의 연속성 확보

정부가 개발하여 추진한 브랜드 사업이 정부 지원 종료 또는 지방이양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이후라도 정부가 관심을 두면 정책 브랜드가 사라지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성과를 거두는 사례는 적지 않다.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문화의집은 1996년에 전국에 500개 건립을 목표로 시작되었다가 2005년에 지방이양되었다. 지방이양되고 나서 조성된 문화의집은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문화의집이 운영되었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문을 닫았다.

그런데 1999년 전국문화의집운영자협의회를 시작으로 200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의집협회가 활동하면서 지금까지도 문화의집 브랜드는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보다 운영 동력이 많이 축소 됐으나 여전히 문화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이양된 이후에도 협회를 통해 문화의집 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되었고, 문화의집 이름으로 공동사업이 진행되었다. 물론 문체부에서도 지방이양 이후 시설별 운영비 1천만 원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문화의집 연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의집 창의학교 및 문화학교 지원사업, 전국문화의집 축제 등 문화의집 브랜드가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문화의집과 기능이 유사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는데도 여전히 문화의집은 고유 브랜드를 유지하며 생활문화의 중요한 시설이자 기관으로 활동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추진된 50개 지자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40% 가까이에 달하는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발굴한 지역문화의 특성화 성과가 이어지고, 문체부가 개발한 도시형 문화정책 브랜드가 사장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기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를 지원하여 정책 브랜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 둘째, 기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도시와 광역 내 문화도시 지정도시가 연계하여 광역 차원에서 문화적 도시발전 효과가 확장되도록 유도하는 사업, 셋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구상하여 새롭게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넷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나타난 지역의 문화적 특성화 성과가 지역발전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문체부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가 개발·지원하여 지역에서 실행된 정책 브랜드와 그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문화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기반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문화진흥계획 등에 이양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완하거나,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리모델링,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산업기반 확충 등이 이러한 노력이 포함된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에 대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도시브랜드 확산 전략 참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통한 관광 효과이다. 전주시가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으로 전통문화도시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도시가 되었듯이, 문화특화지역 역시 관광브랜드 구축과 관광객 유입이 중요한 성과였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5년 동안 많은 도시에서 관광 효과를 가져 올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런데 문화특화지역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역별 특성화 성과가 관광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목표를 문화도시 법적 지정으로 설정하면서 관광마케팅이 미흡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문화도시와 무관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문화도시 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나온 문제이다.

문화도시를 지향하지 않거나 문화도시 본 지정에서 탈락한 도시 중에서 몇몇 도시는 문화특화지역의 목표인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가 지역문화 분야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관광, 지역경제 등에 연계되도록 도시 브랜드 확산 전략을 문체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통한 브랜드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가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성과 확산 사업)한다면 독자 사업으로서 문화특화지역의 성과가 지역에서 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4. 민간의 역할

### 가.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정책 대상 다양화

민관협력이란 행정주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하였던 공적 서비스업무를 “행정주체”와 “민간”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파트너십의 형태로 공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수법을 의미한다. PPP, 즉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과 PFI, 즉 민간 회사가 건물, 시설을 완성하여 정부에 임대하는 형식(Private Finance Initiative), 지정관리자제도, 민영화, 산학협력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 경우 민간의 개념에는 기업, 산업체, 학계, NGO 등 공공부문 이외의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과 ‘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공적 업무의 수행은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절감 및 민간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고용증대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한국법제연구원, 2011)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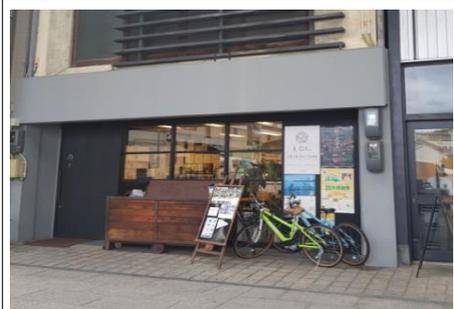
PPP라는 용어는 처음 미국에서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민관이 공동으로 조달하는 상황에서 쓰여 졌다가 1950년대에 전기·수도를 조달하기 위한 자원마련 그 자체를 지칭하는데, 1960년대 들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합작(public-private joint venture)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원에서 PPP형 도시재생을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력을 활용한 자립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행정주체와 민간주체가 계약에 기초하여 책임과 리스크를 분담하여 성과지향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을 기존 보조금 의존형(도시재생) 지원사업들이 겪게 되는 사업이후 자생력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일본내각부는 2013년 민관협력(PPP/PFI)추진 액션 플랜을 수립해 노후 인프라 유지보전과 유휴 공적부동산 활용을 장려한 바 있다. 일본 오노미치의 U2는 지역이 소유하고 있었던 70년 항만창고를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였는데, 민간사업자는 이를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5] 오노미치U2



[그림 5-6] 민간운영주체 :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사무실

출처 : 연구진 직접촬영

이와 유사한 국내 사례로는 군산시의 군산시민예술회관이 있다. 군산시민예술회관은 1989년 대지면적 9,451㎡에 858석의 객석을 갖춘 공간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인근에 군산예술의전당(1만2000석)이 지어지며 기능을 상실하였다. 해당 건물은 유명 건축가(김중업)의 작품이며, 123억에 달하는 대형공공시설을 인수하겠다는 대상을 찾기 어려웠고 약 9년간 운영이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되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건축공간연구소와 협력하여 PPP형 도시재생의 형태로 이 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단순 민간위탁식 사업이 아닌 착한 건물주와 주체적 세입자의 관계로서의 민관협력의 방식을 추구하였다. 2021년에는 공모를 통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고, 2022년 현재 선정된 담당자들은 이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과업이나 연간위탁료를 얹어고, 공모참가자가 직접 공간의 용도와 단계별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 군산지역의 쇠락한 전통시장을 재생하는 ‘영화타운 프로젝트’ 역시 공공의 공간과 자산을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과 운영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PPP형 사업의 예로 볼 수 있다.

#### 나. 브랜드로서의 인증 방안 및 사례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사업 목적을 브랜드화로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인증과 인증의 지속성 즉 취소제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의 사례는 연단위 혹은 2년, 4년제 단위로 도시 브랜드를 부여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같이 당해 혹은

몇 년 간의 대표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경우는 분야별로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도시의 성격에 따라 브랜드가 부여된다는 차별성이 있으며, 필수 조건은 아니나, 정기적인 성과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유산(Japan Heritage)은 도시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것은 아니나, 문화재나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유산과 지역을 연계한 인증제도로서 독특한 운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면단위의 문화유산활용정책으로 ‘역사문화기본구상(歴史文化基本構想)’을 공표하고 각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38건의 시정촌이 사업에 참여한 채 미완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미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게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것으로 요구하며, 이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참여자체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역사문화기본구상의 경우,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 행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 행정과 지역재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새롭게 시작된 ‘일본유산’ 지정 정책은 일본 문화청(文化庁)의 주관으로 문화재나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지역을 연계한 인증제도다. 2016년도에 시작되어 2000년까지 100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구상되었고 2016년 18곳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104곳(2021년 통계)이 선정되었다. 당초 목표했던 100곳을 유지하고 기존 지정대상에 대해 재지정제도 및 지정취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의 경우, 4건의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3건이 추가 후보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2022년에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았다(2022년 7월 29일 공고 기준). 선정은 문화청과 일본유산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본유산’은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세대를 초월하는 지속성을 가진 이야기들을 엮어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패키지화하여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정보발신, 인재육성과 전승, 환경 정비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이 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진흥·관광진흥·인재육성 등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장려한다. 일본문화청은

이 지정제도의 기대효과를 관련 문화유산의 해당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체성 재확인과 지역의 브랜드화 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방창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기존의 문화재 행정의 개개의 유산을 ‘점(点)’ 단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정과 보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점으로 존재하는 유산들을 ‘면(面)’으로, 즉 문화재군(群)으로서 그룹화하고, 이를 지역의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서 차별점이 있다.

‘일본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청 인증의 전용 심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유산활성화추진사업」(2020년 예산 : 6.7억 엔, 약 65억 원)을 통해 3년간 재정지원을 받아 인재육성사업, 보급·계발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유산에 선정된 지자체 관계부국, NPO, 문화재보호단체, 상공회의소,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문화재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구상을 하면 지역 단위 문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단체가 실행하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전문가 파견지원사업, 국내외로의 홍보사업 등에 참여 수혜를 받게 된다.

2020년부터는 관과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을 유도하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민관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유산 팔로우업위원회를 2017년부터 구성하여 지정 후 3년간 사업을 위한 지표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이를 평가하고 심의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18년도 선정 지역의 성과를 2022년도에 최종 발표하는 방식이다.

[참고] 일본유산(Japan Heritage)의 개념

- ‘일본유산’은 스토리에 의한 패키지화, 지역 단위의 일체적 정비와 활용,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문화의 발신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함.
- ① ‘일본유산’은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발굴해, 스토리에 의한 패키지화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임. 이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전제로 문화유산의 패키지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들 간의 역사·문화·풍토 등 문화재군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지역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접근함.
- ② ‘일본유산’은 지역 전체로서 일체적 정비·활용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일본유산의 바탕이 되는 스토리를 체감할 수 있는 하드웨어(전시·체험·학습 등)와 소프트웨어(인재육성과 확보)의 균형을 이룬 정비를 진행함. 지역의 방문객들이 지역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하며, 지역 내 학교교육과 생애교육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향토애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함.
- ③ 국내외에 적극적인 동시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발신하도록 함. 일본유산은 문화재군의 스토리성을 더해,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 임팩트와 알기 쉬운 스토리성의 결합을 통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관심을 환기하여 세계유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

---

우리나라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의 문화 도시 논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되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구조를 지향하는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되며 2004년 지역 거점 문화도시 육성부터 본격적인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출발하였다.

정책의 특징은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추진되던 2000년대부터, 해당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불려왔으며, ‘문화도시’의 발굴과 육성이 정책 목표로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정책적으로 ‘문화 도시(Cultural City)’에 대한 개념과 사업목적은 조금씩 다르게 인지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도시 전반이 문화적 이미지로 충만하고, 문화향유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문화를 통한 생태계가 구현되는 ‘문화도시’의 육성을 목표로 했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인 법정 문화도시 또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목적성에 대한 지적보다, 도시가 ‘문화 도시’로서 인정받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갈증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자체가 ‘문화도시’로의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오랫동안 정책이 수행되며 기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성장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상과 지역의 현황에 맞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추진했던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한 발전적인 문화도시의 상과 이에 따른 정책 목표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1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2024년에 종료되는 만큼, 이후 도시들이 문화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가 앞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제2절 향후과제

---

### 1. 연구 한계

본 연구는 중앙정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기초 자료는 기 발간된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계획안 및 성과자료집 등을 활용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서면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성과와 정책 애로사항이 있음을 다수가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된 정책 사업 일수록 공개된 자료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초지자체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연차별로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명 변경 등 매년 다양하게 추진되어 서면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예산분석에 있어서도 공개된 정보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언급하는 비목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기초자치단체마다 관리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일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추진한 설문조사의 경우 지역단위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기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도시(Culture City)’의 의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정책 이해도 및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발전 방향이 법정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오래된 사업일수록 효과성에 대해 인자율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시기별로 고도화되었음을 파악하였고,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성과제고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 2. 향후 과제

도시가 ‘문화 도시(Cultural City)’로서 구성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들이 대체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곧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책 개발을 위해 대국민 의견조사, 라운드테이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타 부처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사업 간의 유사성 분석도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련 부서 신설을 제안하며 지역단위의 문화정책을 소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앞서 부처 내에서 어떠한 협동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등 타 부처에서도 도시를 대상으로 특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화분야의 역할이 수반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 체계 또한 별도의 과제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간혹 사업 추진의 성과를 국내 공모 사업과 함께 제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주체도 겹치는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기 가입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는 사업의 연계와 국외 교류 성과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가입을 검토하는 도시를 대상으로는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성과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도시 브랜드가 일관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에 대한 세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역단위 문화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가칭 문화도시 2.0’ 등으로 표현하며 다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었는데, 이는 사업 개발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문수(2011),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강릉시(2021), 「(강원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 경상북도(2014), 「한국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 계기석(2010),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전략모형의 적용방향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3집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2020), 「2020년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I)」
-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관계부처 합동(2018), 재정분권 추진방안
- 국토교통부(2021),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국회예산정책처(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 김선영·이의신(2019), 「유럽문화수도 사례로 본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방향성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42집.
- 김성주·전성만(2021).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연진(2011),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준섭(2006), 「영상문화도시 부산 조성방안」, 『부산발전포럼』
- 김해시(2021), 「(경남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 대구광역시(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대구 백서」
- 대한민국 정부(2020), 「100대 국정과제」
-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라도삼·이정현·오찬섭(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문화관광부(1998), 「국민의 정부 새 문화관광정책」
-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지역발전위원회 보고 자료(2009.10.29.)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7),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21), 「'21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도시 사업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22),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 마강래(2019),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개마고원
- 문화재청(2007),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문화재청(2011), 「문화재 보존 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재청(2015),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2021」
- 박병희 외(2020),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박신의(2017), 「문화유산 활용과 가치 제고 전략」,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 박은실(2018), 『문화예술과 도시 시대적 변화와 실천적 담론』, 정한책방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2021), 「2021 문화도시 서귀포, 서귀포 타임즈」
- 서울특별시(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서정섭(2015),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정화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김성주(20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초구청(2019),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공고」

- 송미령 외(2020),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2021),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 자료
- 유승호(2020),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문화도시』, 가짜, 202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20년도 개정판」
- 윤주선 외(2017),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원
- 이수진 외(2013),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순자 외(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이정선(2019), 「일본 문화유산의 연속적 활용에 관한 연구 -‘군마 실크유산’과 세계유산, 일본유산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재』, 52(1).
- 인천 부평구(2021), 「(인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 임학순(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인사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완주군(2021), 「(전북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계획」
- 원주문화재단(2017), 「2017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이야기를 담다」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2021), 「문화도시 원주 연차보고서 2021」
- 원주시(2020), 「(원주) 문화도시 조성계획」
- 이성근 외(2016), 「한국의 지방재정론」, 법무사
- 이준구·조영환(2018), 「재정학:제5판」, 문우사
- 이재원(2019),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33-64.
- 이재원(2019), 「지방재정론」, 윤성사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주 백서」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22), 「2021 문화도시 청주 성과기록집」
- 청주시청(2016),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청주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016~2020’」

- 춘천시(2021), 「(강원 춘천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 홍근석(2020),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익표·이종서(2012), 「EU의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도시차원의 전략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U연구』, 제32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도시재생 문화에 길을 묻다」
- 행정안전부(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국외문헌]

- Bando per il conferimento del titolo di «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 per l'anno 2024
-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a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for the years 2020 to 2033 and repealing Decision No 1622/2006/EC
- Decision No 445/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establishing a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for the years 2020 to 2033 and repealing Decision No 1622/2006/EC
- G. Evans. (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42.
- Gomes, P., & Librero-Cano, A. (2018). Evaluating three decades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me: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2(1).
- R. Griffiths. (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Vol.12.
- 岡本真生(2019), 「『日本遺産』のつくりかた: 地域文化デザインの現場にて」,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 130.
- 金子淳(2019), 「博物館を取り巻く『物語性』をめぐって~『観光立国』政策と日本遺産を中心に~」, 『人文研究』, 11.
- 森重昌之(2020), 「観光資源論から見た資源の『利用』の考え方 -日本遺産を活用した兵庫

県淡路島の取り組みを事例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 [법령 및 규정]

- 「지방재정법[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 「지방교부세법[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 [법률 제18425호]

###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 경남매일(2021.08.11.), “거장·신진 연주가 통영서 ‘아름다운 선율의 만남’”
- 경인매일(2021.07.06.),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출범…부천시 등 12개 도시 문화교류 강화”
- 경주신문(2021.05.27.), “이름만 바꾼 문화도시 정책들, 효과 있을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21.12.31.),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 국회사무처(2021.10.01.), ‘2021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내손안에서울(2022.02.25.),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본격화! 세계 5대 문화도시 목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1.10.07.), “[분권레터]재정분권으로 확보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3.26.),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0.25.), “한국을 대표해 동아시아문화를 이어갈 도시를 찾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1 문화도시 성과』, 2022.5.11.
- 매일신문(2022.1.23.), “‘배보다 큰 배꼽’ 대구경북 문화도시 조성 잇단 고배”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2.02.23.), “서울시, 매력과 감성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도약…세계 5대 문화도시로”
- 울산문화재단 보도자료(2021.10.01.), “(재)울산문화재단-(재)통영국제음악재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일간 경기(2018.06.14.), “부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 정책브리핑(2018.03.20.), “문화적 도시재생 우수모델 만든다”
- 정책브리핑(2019.04.04.), “문화적 도시재생, 전국 19곳으로 확대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 “2021 지역문화인력(신규)공개모집”, 2021.3.3.
- 한국경제(2022.03.11.),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통영-브르노를 잇는 특별연주회”

- BBC NEWS(2013.12.30.), “In pictures: Derry's UK City of Culture year”
- dezeen(2017.11.24.), “Creative sector “gutted” as EU disqualifies UK cities from European Capital of Culture contest”

### [웹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다리너머영도 웹진(<http://ydzine2021.com/>)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 문화도시 김해 홈페이지(<https://xn--4k0bp8hs5gupibiykgb.kr/>)
- 문화도시 부천 홈페이지  
(<http://sweb.smartnm.gethompny.com/subpage.php?p=m13>)
- 문화도시 서귀포 홈페이지(<https://www.nojiculture.kr/>)
- 문화도시 원주 홈페이지(<https://www.xn--2j1bz8hx3nt7b.kr/main.php>)
- 문화도시 천안 홈페이지(<https://xn--hq1b94lyxg1sc8unuu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4.jsp](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4.jsp))
-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 <https://culturecj.com/sub.php?code=30>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bcf.or.kr/main/main.act>)
- 시나미강릉 홈페이지(<https://sinami.co.kr/sub/culture/culture02.html>)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city-of-culture-2025-full-guidance-for-long-listed-bidders/uk-city-of-culture-2025-full-application-guidance>)
- 영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britishcouncil.org/arts/hull-city-culture-tour/city-of-culture>)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wanjuculture.com/web/page.php?pcode=14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map.unesco.or.kr/creativecities/>)
- 유럽문화수도 발레타 홈페이지(<https://valletta2018.org/>)
- 유럽문화수도 산세바스티안 홈페이지(<https://www.sansebastian2016.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europa.eu/culture/policies/culture-in-cities-and-regions/european-capitals-of-culture>)
-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portal/contents.do?key=1584>)
- 일본 문화청(日本文化庁) '일본유산' 관련 페이지 및 관련자료.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nihon\\_isan](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nihon_isan)
- 일본유산 포털사이트(日本遺産ポータルサイト)  
<https://japan-heritage.bunka.go.jp>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rcda.or.kr>)
- 청주문화도시 홈페이지 (<https://www.cjculture42.org>)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phcf.or.kr/munhwacity/munhwaCityView.do?dth=1>)
- 프랑스 문화수도 홈페이지(<https://capitale-culture.fr/>)
- 프랑스문화수도 빌뇌르반 홈페이지(<https://villeurbaine2022.fr/>)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osims.go.kr/hg/hg001/retrieveMain.do>)
- EUR-Lex 홈페이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D0445>)
- Fondazione Scuola dei beni e delle attività culturali 홈페이지  
(<https://www.fondazione scuolapatrimonio.it/innovazione-e-sperimentazione/capitale-italiana-cultura-analisi-programma/>)



---

# ABSTRACT

## **Analysis of Local-Level Cultural Policy Projects**

Nho, SooKyoung·Kim, SuKyeo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verall cultural policy projects pushed forward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local level. The study has multiple purposes: first, the study aims to monitor local-level cultural policy projects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review cultural and urban policy projects for the last 20 years or so in terms of goal, content, and the current state of a designated city and put tog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by period; secondly, the study aims to arrange the participation and designation of cultural policy projects at the local level by local governmen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projects to review their progress, this study will differentiate itself by reviewing the number of local-level cultural policies each local government has participated in to earn the title of cultural city and the different goals each project has pursued. The study will also analyze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projects by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objectives and budgets to understand the reasons behind their particip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such projects; thirdly, the study aims to propose goals and directions for local-level cultural policies. By identifying the goals and directionalities of local-level cultural policie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w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local-level cultural policies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onitoring results of policy projects show that local-level cultural policy projects have been pushed forward to build a cultural ci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There are two goals to pursue the title of cultural city: one is to establish a city's brand, and the other is to promote urban development through culture. The latter has been driven especially for the effort to enhance the cultural foundation of a city.

A total of 86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d in local-level cultural policy project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results were based on the survey of local-based cultural city projects, specialized cultural area projects (cultural city and village types), cultural city regeneration projects, and legal cultural city projects.

The concept of local-level cultural policies reorganized for the study is policies of building and cultivating a cultural city based on collabor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a local cultural ecosystem by taking into account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making use of the cultural uniqueness at the local level. Based on this concept, the study proposed three directions to push forward local-level cultural policies: setting a policy goal according to the overall urban environment, adjusting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urban space scopes, and improving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clusters and cultural c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in particular, enhance the ways they push forward policy projects, manage their outcomes, and promote their circulation. They also need to find policy directions on how to utilize professional personnel that have grown through old projects.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ve to build a city brand by developing project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identify new resourc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will increasingly intensif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objects of policie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projects and increase the ways to expand participation in facilities, manpower, and programs from the private sector.

### **Keywords**

cultural policy projects, Cultural City, cultural and urban policy projects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분석

부록

## 설문지 및 설문결과



# 부록1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양식



## 문화 도시 정책사업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 7.

주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 임 연 구: 노수경 부연구위원 (02-2669-8473), 김수경 책임전문위원(02-2669-8959)

조 사 업 체: 엠브레인 퍼블릭

설문조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답례제공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해당 설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② 응답자의 정보는 답례제공(성명, 연락처)시 사용합니다.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선택항목: 답례제공을 위한 성명, 연락처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는 답례제공 후 즉시 파기됩니다.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시면 아래에 체크 해 주십시오

선택항목 동의(제3자 제공) 성명, 연락처

기본 정보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연세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SQ3. 귀하의 현 거주 시·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세종시 포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1. 귀하의 현 거주 지역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①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동지역      ② 일반 시의 동 지역      ③ 읍/면 지역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교수 및 강사                                      ② 공무원  
 ③ 문화관련 기관(문화재단, 문화원 등) 직원      ④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문화기획자, 프리랜서 전문인력 등)  
 ⑤ 연구자    ⑥ 기타 (    )

SQ5. 귀하께서는 아래 정책 사업에 참여(사업계획 구상, 사업관리, 사업공모 신청, 사업평가(문화영향평가 포함. 관련 단순 자문은 제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모든 사업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②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③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④ 법정 문화도시 사업  
 ⑤ 동아시아 문화도시    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⑦ 문화지구    ⑧ 해당없음

문화 도시 인식

- 문01. 귀하는 지역단위의 문화 정책 사업(문화도시 사업, 지역거점 문화도시사업 등)을 시행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개를 선택 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전 및 계승      ② 국민 문화·예술의 진흥과 수준 제고
  - ③ 도시 문화산업 육성                                      ④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⑤ 관광효과 증진    ⑥ 도시 내 문화 향유 환경 개선
  - ⑦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 ⑨ 기타 (    )

**문02.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 중 어떠한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효과	(1)지역주민 소득증대	①	②	③	④	⑤
	(2)지역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3)관광명소화	①	②	③	④	⑤
	(4)부동산 가격 상승	①	②	③	④	⑤
환경적 효과	(5)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①	②	③	④	⑤
	(6)도시미관, 경관개선	①	②	③	④	⑤
	(7)문화기반시설 개선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적 효과	(8)지역이미지 제고	①	②	③	④	⑤
	(9)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10)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①	②	③	④	⑤
	(11)문화자원 발굴	①	②	③	④	⑤
	(12)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13)도시 정주 의사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인식 및 성과**

**문03. 귀하는 아래 제시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지도 질문에서 1,2점을 응답할 경우 효과성은 응답창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

항 목	정책 인지도					정책 효과성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도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도시 발전에 도움이 안되었다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1) 문화지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거점 문화도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적 도시재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법정 문화도시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동아시아 문화도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06. 향후 문화 도시 정책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부록2 설문조사 결과

〈부록 표 1-1-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순위)(1)

(단위 : 명, %)

		사례수	지역 사회 문제의 발굴과 문화를 통한 해결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문화 산업 육성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내 문화 향유 환경 개선
전체		(100)	28.0	19.0	13.0	12.0	10.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40)	30.0	17.5	7.5	17.5	15.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9.5	22.7	13.6	4.5	6.8
	읍/면 지역	(16)	18.8	12.5	25.0	18.8	6.3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33.3	8.3	16.7	16.7
	공무원	(36)	19.4	16.7	30.6	13.9	11.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4.4	11.1	3.7	3.7	11.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50.0	33.3	0.0	0.0	0.0
	연구자	(18)	27.8	22.2	0.0	22.2	5.6
	기타	(1)	100.0	0.0	0.0	0.0	0.0
참여 정책 사 업(복수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9.2	23.1	15.4	11.5	3.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2.6	19.6	10.9	6.5	13.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38.9	22.2	5.6	8.3	11.1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2.9	18.4	10.5	7.9	10.5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27.3	27.3	9.1	9.1	9.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25.0	25.0	10.0	5.0	0.0
	문화지구	(8)	0.0	37.5	0.0	12.5	12.5
	해당없음	(7)	0.0	28.6	28.6	28.6	0.0

〈부록 표 1-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순위)(2)

(단위 : 명, %)

		사례수	지역의 역사·문화자 원의 발굴, 보존 및 계승	국민 문화·예술의 진흥과 수준 제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관광효과 증진
전체		(100)	7.0	6.0	5.0	0.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0.0	10.0	2.5	0.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13.6	2.3	6.8	0.0
	읍/면 지역	(16)	6.3	6.3	6.3	0.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8.3	0.0	16.7	0.0
	공무원	(36)	5.6	0.0	2.8	0.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11.1	7.4	0.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16.7	0.0	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응답)	연구자	(18)	11.1	11.1	0.0	0.0
	기타	(1)	0.0	0.0	0.0	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5.4	7.7	3.8	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6.5	6.5	4.3	0.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8.3	5.6	0.0	0.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6.6	6.6	6.6	0.0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9.1	0.0	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15.0	15.0	5.0	0.0
	문화지구	(8)	12.5	25.0	0.0	0.0
해당없음	(7)	0.0	14.3	0.0	0.0	

〈부록 표 1-1-3〉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2+3순위)(1)

(단위 : 명, %)

		사례수	지역 사회 문제의 발굴과 문화를 통한 해결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 보존 및 계승	도시 내 문화 향유 환경 개선
전체		(100)	65.0	57.0	40.0	35.0	32.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40)	70.0	52.5	37.5	42.5	40.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61.4	56.8	43.2	31.8	27.3
	읍/면 지역	(16)	62.5	68.8	37.5	25.0	25.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50.0	58.3	25.0	58.3	25.0
	공무원	(36)	55.6	63.9	44.4	19.4	41.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81.5	55.6	22.2	29.6	29.6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83.3	50.0	66.7	50.0	33.3
	연구자	(18)	61.1	50.0	61.1	55.6	16.7
	기타	(1)	100.0	0.0	0.0	0.0	10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61.5	65.4	38.5	30.8	30.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71.7	52.2	34.8	21.7	37.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63.9	58.3	44.4	38.9	27.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67.1	52.6	39.5	34.2	31.6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45.5	63.6	45.5	36.4	27.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65.0	60.0	35.0	45.0	15.0
	문화지구	(8)	62.5	75.0	25.0	37.5	25.0
	해당없음	(7)	28.6	85.7	28.6	57.1	28.6

〈부록 표 1-1-4〉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2+3순위)(2)

(단위 : 명, %)

		사례수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문화산업 육성	국민 문화·예술의 진흥과 수준 제고	지역 관광효과 증진
전체		(100)	27.0	23.0	18.0	3.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17.5	12.5	25.0	2.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36.4	29.5	11.4	2.3
	읍/면 지역	(16)	25.0	31.3	18.8	6.3
직업	교수 및 강사	(12)	33.3	16.7	25.0	8.3
	공무원	(36)	22.2	41.7	8.3	2.8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4.4	14.8	22.2	0.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16.7	0.0
	연구자	(18)	11.1	11.1	27.8	5.6
	기타	(1)	100.0	0.0	0.0	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26.9	23.1	15.4	7.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4.8	26.1	19.6	2.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2.2	16.7	25.0	2.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8.9	22.4	19.7	3.9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18.2	18.2	36.4	9.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30.0	25.0	20.0	5.0
	문화지구	(8)	12.5	25.0	37.5	0.0
해당없음	(7)	14.3	28.6	28.6	0.0	

〈부록 표 2-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2.0	33.0	43.0	12.0	3.5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12.5	35.0	45.0	7.5	3.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15.9	31.8	38.6	13.6	3.50
	읍/면 지역	(16)	-	0.0	31.3	50.0	18.8	3.88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33.3	58.3	8.3	3.75
	공무원	(36)	-	2.8	30.6	50.0	16.7	3.8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25.9	40.7	22.2	11.1	3.1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16.7	16.7	66.7	0.0	3.50
	연구자	(18)	-	16.7	27.8	44.4	11.1	3.50
	기타	(1)	-	0.0	100.0	0.0	0.0	3.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11.5	26.9	42.3	19.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13.0	32.6	43.5	10.9	3.5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13.9	27.8	47.2	11.1	3.5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2	32.9	43.4	10.5	3.51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18.2	9.1	63.6	9.1	3.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15.0	25.0	45.0	15.0	3.60	
문화지구	(8)	-	12.5	12.5	50.0	25.0	3.88	
해당없음	(7)	-	14.3	28.6	42.9	14.3	3.57	

〈부록 표 2-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일자리 창출)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2.0	16.0	67.0	15.0	3.9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27.5	57.5	15.0	3.8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4.5	9.1	72.7	13.6	3.95
	읍/면 지역	(16)	-	0.0	6.3	75.0	18.8	4.13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16.7	75.0	8.3	3.92
	공무원	(36)	-	0.0	11.1	66.7	22.2	4.1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3.7	18.5	70.4	7.4	3.8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연구자	(18)	-	5.6	27.8	44.4	22.2	3.83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23.1	50.0	23.1	3.9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2.2	10.9	71.7	15.2	4.0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19.4	63.9	16.7	3.97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2.6	14.5	69.7	13.2	3.9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45.5	45.5	9.1	3.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20.0	60.0	20.0	4.00
	문화지구	(8)	-	0.0	37.5	50.0	12.5	3.75
해당없음	(7)	-	0.0	14.3	71.4	14.3	4.00	

〈부록 표 2-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3.0	10.0	33.0	45.0	9.0	3.47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5.0	7.5	37.5	40.0	10.0	3.43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3	13.6	27.3	45.5	11.4	3.50
	읍/면 지역	(16)	0.0	6.3	37.5	56.3	0.0	3.5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0.0	25.0	66.7	8.3	3.83
	공무원	(36)	2.8	5.6	27.8	50.0	13.9	3.6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11.1	51.9	29.6	0.0	3.04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50.0	50.0	0.0	3.5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연구자	(18)	0.0	27.8	16.7	38.9	16.7	3.44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0.0	7.7	38.5	38.5	15.4	3.6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2	13.0	28.3	50.0	6.5	3.4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5.6	5.6	25.0	58.3	5.6	3.5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6	10.5	32.9	44.7	9.2	3.47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9.1	45.5	45.5	0.0	3.3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10.0	40.0	30.0	20.0	3.60
	문화지구	(8)	0.0	12.5	37.5	37.5	12.5	3.50
해당없음	(7)	14.3	0.0	42.9	28.6	14.3	3.29	

〈부록 표 2-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19.0	45.0	24.0	11.0	1.0	2.3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20.0	45.0	25.0	7.5	2.5	2.2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2.7	40.9	25.0	11.4	0.0	2.25
	읍/면 지역	(16)	6.3	56.3	18.8	18.8	0.0	2.5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8.3	66.7	16.7	8.3	0.0	2.25
	공무원	(36)	11.1	41.7	30.6	13.9	2.8	2.5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0.7	33.3	25.9	0.0	0.0	1.85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16.7	33.3	0.0	50.0	0.0	2.83
	연구자	(18)	11.1	55.6	22.2	11.1	0.0	2.33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5.4	50.0	15.4	15.4	3.8	2.4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1.7	45.7	19.6	10.9	2.2	2.2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2.2	36.1	33.3	8.3	0.0	2.2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2.4	40.8	25.0	10.5	1.3	2.28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18.2	36.4	9.1	36.4	0.0	2.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25.0	25.0	35.0	10.0	5.0	2.45
	문화지구	(8)	37.5	50.0	0.0	12.5	0.0	1.88
	해당없음	(7)	14.3	57.1	14.3	14.3	0.0	2.29

〈부록 표 2-1-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지역 유형	전체	(100)	-	-	4.0	45.0	51.0	4.47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	2.5	42.5	55.0	4.53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	4.5	47.7	47.7	4.43
	읍/면 지역	(16)	-	-	6.3	43.8	50.0	4.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	0.0	58.3	41.7	4.42
	공무원	(36)	-	-	0.0	52.8	47.2	4.4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	14.8	25.9	59.3	4.44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	0.0	50.0	50.0	4.50
	연구자	(18)	-	-	0.0	50.0	50.0	4.50
	기타	(1)	-	-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	7.7	46.2	46.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	4.3	39.1	56.5	4.5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	2.8	41.7	55.6	4.5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	3.9	42.1	53.9	4.50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	0.0	54.5	45.5	4.4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	0.0	30.0	70.0	4.70	
문화지구	(8)	-	-	0.0	25.0	75.0	4.75	
해당없음	(7)	-	-	14.3	28.6	57.1	4.43	

〈부록 표 2-1-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지역 유형	전체	(100)	-	2.0	24.0	59.0	15.0	3.87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2.5	25.0	55.0	17.5	3.8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25.0	56.8	15.9	3.86
	읍/면 지역	(16)	-	0.0	18.8	75.0	6.3	3.88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8.3	16.7	58.3	16.7	3.83
	공무원	(36)	-	0.0	16.7	66.7	16.7	4.0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44.4	51.9	3.7	3.5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16.7	0.0	66.7	16.7	3.83
	연구자	(18)	-	0.0	22.2	50.0	27.8	4.06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15.4	57.7	23.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23.9	60.9	15.2	3.9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19.4	58.3	22.2	4.0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2.6	22.4	59.2	15.8	3.88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9.1	0.0	72.7	18.2	4.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5.0	20.0	55.0	20.0	3.90	
문화지구	(8)	-	0.0	0.0	87.5	12.5	4.13	
해당없음	(7)	-	0.0	28.6	71.4	0.0	3.71	

〈부록 표 2-1-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4.0	60.0	35.0	4.29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2.5	60.0	37.5	4.3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6.8	56.8	34.1	4.23
	읍/면 지역	(16)	-	0.0	0.0	68.8	31.3	4.31
	교수 및 강사	(12)	-	8.3	0.0	75.0	16.7	4.00
직업	공무원	(36)	-	0.0	0.0	55.6	44.4	4.4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7.4	48.1	44.4	4.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100.0	0.0	4.00
	연구자	(18)	-	0.0	11.1	61.1	27.8	4.17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0.0	3.8	65.4	30.8	4.27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4.3	56.5	39.1	4.3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2.8	58.3	38.9	4.3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3.9	55.3	39.5	4.3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0.0	72.7	27.3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5.0	5.0	55.0	35.0	4.20
	문화지구	(8)	-	0.0	12.5	37.5	50.0	4.38
	해당없음	(7)	-	0.0	0.0	85.7	14.3	4.14

〈부록 표 2-1-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4.0	49.0	47.0	4.43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	5.0	52.5	42.5	4.3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	4.5	47.7	47.7	4.43
	읍/면 지역	(16)	-	-	0.0	43.8	56.3	4.56
	교수 및 강사	(12)	-	-	0.0	66.7	33.3	4.33
직업	공무원	(36)	-	-	2.8	41.7	55.6	4.53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	11.1	48.1	40.7	4.3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	0.0	50.0	50.0	4.50
	연구자	(18)	-	-	0.0	55.6	44.4	4.44
	기타	(1)	-	-	0.0	0.0	100.0	5.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	0.0	42.3	57.7	4.58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	4.3	45.7	50.0	4.4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	2.8	52.8	44.4	4.42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	3.9	47.4	48.7	4.45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	0.0	63.6	36.4	4.3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	5.0	40.0	55.0	4.50
	문화지구	(8)	-	-	0.0	75.0	25.0	4.25
	해당없음	(7)	-	-	14.3	42.9	42.9	4.29

〈부록 표 2-1-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7.0	37.0	55.0	4.4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7.5	40.0	52.5	4.4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6.8	40.9	50.0	4.36
	읍/면 지역	(16)	-	0.0	6.3	18.8	75.0	4.6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8.3	50.0	41.7	4.33
	공무원	(36)	-	2.8	8.3	36.1	52.8	4.3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0.0	33.3	66.7	4.6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33.3	66.7	4.67
	연구자	(18)	-	0.0	16.7	38.9	44.4	4.28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7.7	30.8	57.7	4.3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0.0	39.1	60.9	4.6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5.6	44.4	50.0	4.44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0.0	5.3	36.8	57.9	4.5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0.0	63.6	36.4	4.3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0.0	40.0	60.0	4.60
	문화지구	(8)	-	0.0	0.0	50.0	50.0	4.50
해당없음	(7)	-	0.0	14.3	71.4	14.3	4.00	

〈부록 표 2-1-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6.0	35.0	59.0	4.53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	10.0	32.5	57.5	4.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	2.3	34.1	63.6	4.61
	읍/면 지역	(16)	-	-	6.3	43.8	50.0	4.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	0.0	41.7	58.3	4.58
	공무원	(36)	-	-	2.8	36.1	61.1	4.58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	3.7	33.3	63.0	4.5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	16.7	16.7	66.7	4.50
	연구자	(18)	-	-	16.7	38.9	44.4	4.28
	기타	(1)	-	-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	3.8	23.1	73.1	4.6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	0.0	28.3	71.7	4.7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	5.6	30.6	63.9	4.5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	2.6	32.9	64.5	4.6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	0.0	18.2	81.8	4.8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	0.0	20.0	80.0	4.80
	문화지구	(8)	-	-	12.5	12.5	75.0	4.63
해당없음	(7)	-	-	14.3	57.1	28.6	4.14	

〈부록 표 2-1-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	5.0	46.0	49.0	4.4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	0.0	50.0	50.0	4.5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	9.1	38.6	52.3	4.43
	읍/면 지역	(16)	-	-	6.3	56.3	37.5	4.31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	0.0	75.0	25.0	4.25
	공무원	(36)	-	-	8.3	38.9	52.8	4.4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	7.4	37.0	55.6	4.48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	0.0	50.0	50.0	4.50
	연구자	(18)	-	-	0.0	55.6	44.4	4.44
	기타	(1)	-	-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	0.0	42.3	57.7	4.5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	6.5	45.7	47.8	4.4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	2.8	44.4	52.8	4.5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	5.3	44.7	50.0	4.45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	0.0	45.5	54.5	4.5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	5.0	40.0	55.0	4.50
	문화지구	(8)	-	-	0.0	50.0	50.0	4.50
해당없음	(7)	-	-	0.0	71.4	28.6	4.29	

〈부록 표 2-1-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12.0	37.0	50.0	4.3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2.5	7.5	40.0	50.0	4.3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0.0	15.9	36.4	47.7	4.32
	읍/면 지역	(16)	-	0.0	12.5	31.3	56.3	4.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16.7	50.0	33.3	4.17
	공무원	(36)	-	0.0	13.9	33.3	52.8	4.39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3.7	33.3	63.0	4.5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66.7	33.3	4.33
	연구자	(18)	-	5.6	22.2	33.3	38.9	4.00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0.0	19.2	34.6	46.2	4.2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8.7	34.8	56.5	4.4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11.1	41.7	47.2	4.3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11.8	36.8	50.0	4.3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27.3	27.3	45.5	4.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15.0	40.0	45.0	4.30
	문화지구	(8)	-	0.0	12.5	25.0	62.5	4.50
해당없음	(7)	-	0.0	0.0	57.1	42.9	4.43	

〈부록 표 2-1-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 평균
전체		(100)	-	2.0	12.0	36.0	50.0	4.3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0.0	10.0	32.5	57.5	4.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0.0	13.6	38.6	47.7	4.34
	읍/면 지역	(16)	-	12.5	12.5	37.5	37.5	4.0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33.3	41.7	25.0	3.92
	공무원	(36)	-	5.6	2.8	41.7	50.0	4.3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7.4	33.3	59.3	4.52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33.3	16.7	50.0	4.17
	연구자	(18)	-	0.0	16.7	33.3	50.0	4.33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15.4	34.6	46.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2.2	13.0	34.8	50.0	4.3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5.6	38.9	55.6	4.5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13.2	38.2	47.4	4.3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9.1	54.5	36.4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15.0	30.0	55.0	4.40	
문화지구	(8)	-	0.0	12.5	37.5	50.0	4.38	
해당없음	(7)	-	0.0	14.3	28.6	57.1	4.43	

〈부록 표 2-2-1〉 문화지구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6.0	29.0	27.0	22.0	16.0	3.13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0.0	32.5	27.5	20.0	20.0	3.2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11.4	20.5	29.5	27.3	11.4	3.07
	읍/면 지역	(16)	6.3	43.8	18.8	12.5	18.8	2.9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8.3	25.0	58.3	8.3	3.67
	공무원	(36)	11.1	38.9	25.0	16.7	8.3	2.72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3.7	37.0	33.3	14.8	11.1	2.93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16.7	33.3	16.7	0.0	33.3	3.00
	연구자	(18)	0.0	11.1	27.8	22.2	38.9	3.89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7.7	15.4	26.9	26.9	23.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6.5	26.1	23.9	23.9	19.6	3.24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8	25.0	25.0	25.0	22.2	3.39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9	30.3	28.9	21.1	15.8	3.1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9.1	9.1	36.4	45.5	4.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0	20.0	20.0	25.0	30.0	3.55	
문화지구	(8)	0.0	0.0	0.0	37.5	62.5	4.63	
해당없음	(7)	0.0	42.9	14.3	28.6	14.3	3.14	

〈부록 표 2-2-2〉 문화지구 정책 효과성

(문화지구 정책 인지도 3,4,5번 응답자 65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65)	3.1	10.8	53.8	26.2	6.2	3.22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27)	3.7	14.8	44.4	29.6	7.4	3.22
	일반 시·도의 동 지역	(30)	3.3	10.0	60.0	23.3	3.3	3.13
	읍/면 지역	(8)	0.0	0.0	62.5	25.0	12.5	3.50
직업	교수 및 강사	(11)	0.0	18.2	54.5	27.3	0.0	3.09
	공무원	(18)	5.6	0.0	55.6	27.8	11.1	3.39
	문화관련 기관 직원	(16)	6.3	12.5	43.8	37.5	0.0	3.13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3)	0.0	0.0	33.3	33.3	33.3	4.00
	연구자	(16)	0.0	12.5	68.8	12.5	6.3	3.13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0)	5.0	0.0	55.0	35.0	5.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1)	0.0	9.7	51.6	35.5	3.2	3.3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26)	0.0	11.5	50.0	34.6	3.8	3.31
	법정 문화도시 사업	(50)	2.0	10.0	54.0	26.0	8.0	3.28
	동아시아 문화도시	(10)	0.0	10.0	80.0	10.0	0.0	3.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5)	0.0	6.7	53.3	26.7	13.3	3.47
	문화지구	(8)	0.0	0.0	62.5	25.0	12.5	3.50
	해당없음	(4)	0.0	25.0	25.0	50.0	0.0	3.25

〈부록 표 2-2-3〉 지역거점 문화도시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3.0	13.0	34.0	26.0	24.0	3.5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5.0	15.0	30.0	30.0	20.0	3.4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3	11.4	36.4	25.0	25.0	3.59
	읍/면 지역	(16)	0.0	12.5	37.5	18.8	31.3	3.6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8.3	25.0	25.0	41.7	4.00
	공무원	(36)	2.8	19.4	27.8	30.6	19.4	3.4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18.5	33.3	18.5	22.2	3.3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66.7	0.0	33.3	3.67
	연구자	(18)	0.0	0.0	44.4	33.3	22.2	3.78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0.0	0.0	26.9	30.8	42.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2	13.0	32.6	21.7	30.4	3.6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0.0	16.7	25.0	36.1	22.2	3.64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1.3	15.8	32.9	26.3	23.7	3.55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0.0	18.2	36.4	45.5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0.0	35.0	25.0	40.0	4.05
	문화지구	(8)	0.0	0.0	25.0	25.0	50.0	4.25
	해당없음	(7)	14.3	14.3	14.3	14.3	42.9	3.57

〈부록 표 2-2-4〉 지역거점 문화도시 정책 효과성

(지역거점 문화도시 정책 인지도 3,4.5번 응답자 84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84)	-	7.1	41.7	42.9	8.3	3.52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32)	-	0.0	40.6	50.0	9.4	3.69
	일반 시·도의 동 지역	(38)	-	13.2	36.8	42.1	7.9	3.45
	읍/면 지역	(14)	-	7.1	57.1	28.6	7.1	3.36
직업	교수 및 강사	(11)	-	0.0	27.3	63.6	9.1	3.82
	공무원	(28)	-	3.6	42.9	46.4	7.1	3.5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0)	-	15.0	45.0	35.0	5.0	3.3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16.7	33.3	33.3	16.7	3.50
	연구자	(18)	-	5.6	44.4	38.9	11.1	3.56
	기타	(1)	-	0.0	100.0	0.0	0.0	3.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7.7	30.8	50.0	11.5	3.65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9)	-	5.1	41.0	48.7	5.1	3.54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0)	-	3.3	33.3	53.3	10.0	3.70
	법정 문화도시 사업	(63)	-	6.3	41.3	44.4	7.9	3.5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45.5	36.4	18.2	3.7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10.0	25.0	50.0	15.0	3.70
	문화지구	(8)	-	0.0	37.5	50.0	12.5	3.75
	해당없음	(5)	-	20.0	20.0	40.0	20.0	3.60

〈부록 표 2-2-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	5.0	17.0	29.0	49.0	4.22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7.5	25.0	25.0	42.5	4.03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13.6	25.0	59.1	4.41
	읍/면 지역	(16)	-	6.3	6.3	50.0	37.5	4.1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8.3	50.0	41.7	4.33
	공무원	(36)	-	5.6	16.7	30.6	47.2	4.19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7.4	11.1	11.1	70.4	4.44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16.7	33.3	50.0	4.33
	연구자	(18)	-	5.6	33.3	38.9	22.2	3.78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26.9	30.8	38.5	4.04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0.0	23.9	76.1	4.7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2.8	13.9	30.6	52.8	4.3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1.3	14.5	27.6	56.6	4.39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9.1	36.4	54.5	4.4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5.0	30.0	65.0	4.60
	문화지구	(8)	-	0.0	12.5	37.5	50.0	4.38
	해당없음	(7)	-	28.6	14.3	14.3	42.9	3.71

〈부록 표 2-2-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정책 효과성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정책 인지도 3,4,5번 응답자 95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95)	-	3.2	35.8	47.4	13.7	3.72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37)	-	5.4	35.1	40.5	18.9	3.73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3)	-	0.0	37.2	51.2	11.6	3.74
	읍/면 지역	(15)	-	6.7	33.3	53.3	6.7	3.6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25.0	75.0	0.0	3.75
	공무원	(34)	-	2.9	35.3	47.1	14.7	3.7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5)	-	8.0	40.0	40.0	12.0	3.56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50.0	33.3	16.7	3.67
	연구자	(17)	-	0.0	35.3	41.2	23.5	3.88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5)	-	4.0	36.0	48.0	1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28.3	58.7	13.0	3.8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5)	-	0.0	25.7	48.6	25.7	4.0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5)	-	4.0	36.0	44.0	16.0	3.7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36.4	63.6	0.0	3.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25.0	55.0	20.0	3.95
	문화지구	(8)	-	0.0	37.5	50.0	12.5	3.75
	해당없음	(5)	-	0.0	20.0	80.0	0.0	3.80

〈부록 표 2-2-7〉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정책 인지도

(단위 : 명,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	3.0	21.0	36.0	40.0	4.13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5.0	20.0	35.0	40.0	4.1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22.7	25.0	50.0	4.23
	읍/면 지역	(16)	-	0.0	18.8	68.8	12.5	3.9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8.3	33.3	58.3	4.50
	공무원	(36)	-	5.6	25.0	47.2	22.2	3.8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3.7	11.1	25.9	59.3	4.4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33.3	33.3	33.3	4.00
	연구자	(18)	-	0.0	33.3	27.8	38.9	4.06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3.8	26.9	34.6	34.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17.4	32.6	50.0	4.3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0.0	2.8	30.6	66.7	4.64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2.6	18.4	34.2	44.7	4.21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27.3	9.1	63.6	4.3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5.0	35.0	60.0	4.55
	문화지구	(8)	-	0.0	25.0	12.5	62.5	4.38
	해당없음	(7)	-	0.0	28.6	42.9	28.6	4.00

〈부록 표 2-2-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정책 효과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정책 인지도 3,4.5번 응답자 97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97)	-	6.2	32.0	47.4	14.4	3.7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38)	-	5.3	28.9	44.7	21.1	3.82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3)	-	9.3	34.9	46.5	9.3	3.56
	읍/면 지역	(16)	-	0.0	31.3	56.3	12.5	3.81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8.3	25.0	58.3	8.3	3.67
	공무원	(34)	-	5.9	23.5	55.9	14.7	3.79
	문화관련 기관 직원	(26)	-	7.7	34.6	46.2	11.5	3.62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50.0	0.0	50.0	4.00
	연구자	(18)	-	5.6	44.4	38.9	11.1	3.56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5)	-	0.0	40.0	44.0	16.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8.7	26.1	54.3	10.9	3.67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2.8	22.2	55.6	19.4	3.92	
법정 문화도시 사업	(74)	-	6.8	29.7	45.9	17.6	3.7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54.5	36.4	9.1	3.5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40.0	45.0	15.0	3.75	
문화지구	(8)	-	0.0	37.5	50.0	12.5	3.75	
해당없음	(7)	-	14.3	42.9	42.9	0.0	3.29	

〈부록 표 2-2-9〉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정책 인지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	4.0	18.0	77.0	4.71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2.5	2.5	20.0	75.0	4.6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0.0	6.8	15.9	77.3	4.70
	읍/면 지역	(16)	-	0.0	0.0	18.8	81.3	4.81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0.0	0.0	16.7	83.3	4.83
	공무원	(36)	-	0.0	2.8	22.2	75.0	4.72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0.0	0.0	11.1	88.9	4.8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16.7	83.3	4.83
	연구자	(18)	-	5.6	16.7	22.2	55.6	4.28
	기타	(1)	-	0.0	0.0	0.0	100.0	5.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0.0	7.7	19.2	73.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0.0	0.0	10.9	89.1	4.8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2.8	5.6	22.2	69.4	4.5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0.0	2.6	11.8	85.5	4.8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0.0	0.0	9.1	90.9	4.9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0.0	0.0	10.0	90.0	4.90	
문화지구	(8)	-	0.0	0.0	25.0	75.0	4.75	
해당없음	(7)	-	0.0	0.0	28.6	71.4	4.71	

〈부록 표 2-2-10〉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정책 효과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정책 인지도 3.4, 5번 응답자 97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99)	3.0	4.0	13.1	50.5	29.3	3.99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39)	2.6	5.1	10.3	59.0	23.1	3.9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0.0	2.3	13.6	43.2	40.9	4.23
	읍/면 지역	(16)	12.5	6.3	18.8	50.0	12.5	3.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8.3	8.3	58.3	25.0	4.00
	공무원	(36)	2.8	5.6	16.7	58.3	16.7	3.8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3.7	7.4	29.6	51.9	4.15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16.7	33.3	50.0	4.33
	연구자	(17)	0.0	0.0	17.6	64.7	17.6	4.00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8	7.7	15.4	46.2	26.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2	2.2	4.3	50.0	41.3	4.2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5)	0.0	0.0	8.6	51.4	40.0	4.31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9	2.6	11.8	47.4	34.2	4.05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0.0	9.1	45.5	36.4	4.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5.0	5.0	35.0	55.0	4.40	
문화지구	(8)	0.0	0.0	0.0	75.0	25.0	4.25	
해당없음	(7)	0.0	14.3	14.3	57.1	14.3	3.71	

〈부록 표 2-2-11〉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책 인지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5.0	18.0	30.0	26.0	21.0	3.4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20.0	25.0	20.0	27.5	3.4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4.5	15.9	31.8	31.8	15.9	3.39
	읍/면 지역	(16)	0.0	18.8	37.5	25.0	18.8	3.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8.3	25.0	16.7	41.7	8.3	3.17
	공무원	(36)	5.6	25.0	36.1	16.7	16.7	3.14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3.7	11.1	22.2	37.0	25.9	3.7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50.0	0.0	50.0	4.00
	연구자	(18)	5.6	16.7	33.3	22.2	22.2	3.39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8	23.1	19.2	19.2	34.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0.0	15.2	21.7	34.8	28.3	3.7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5.6	11.1	25.0	30.6	27.8	3.64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6	14.5	27.6	30.3	25.0	3.61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0.0	9.1	18.2	72.7	4.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10.0	25.0	20.0	45.0	4.00	
문화지구	(8)	0.0	12.5	12.5	25.0	50.0	4.13	
해당없음	(7)	14.3	28.6	14.3	42.9	0.0	2.86	

〈부록 표 2-2-12〉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책 효과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정책 인지도 3,4,5번 응답자 77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77)	5.2	19.5	40.3	28.6	6.5	3.12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29)	3.4	20.7	34.5	34.5	6.9	3.21
	일반 시·도의 동 지역	(35)	5.7	20.0	45.7	22.9	5.7	3.03
	읍/면 지역	(13)	7.7	15.4	38.5	30.8	7.7	3.15
직업	교수 및 강사	(8)	12.5	12.5	50.0	25.0	0.0	2.88
	공무원	(25)	4.0	12.0	44.0	32.0	8.0	3.28
	문화관련 기관 직원	(23)	8.7	21.7	30.4	30.4	8.7	3.0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16.7	66.7	16.7	0.0	3.00
	연구자	(14)	0.0	28.6	35.7	28.6	7.1	3.14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19)	5.3	15.8	42.1	31.6	5.3	3.16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9)	5.1	20.5	35.9	28.2	10.3	3.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0)	0.0	16.7	43.3	30.0	10.0	3.33
	법정 문화도시 사업	(63)	4.8	19.0	38.1	30.2	7.9	3.17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18.2	54.5	18.2	9.1	3.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8)	0.0	22.2	38.9	33.3	5.6	3.22
	문화지구	(7)	0.0	28.6	28.6	28.6	14.3	3.29
	해당없음	(4)	0.0	50.0	50.0	0.0	0.0	2.50

〈부록 표 2-2-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정책 인지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다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등 이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등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전체		(100)	4.0	15.0	30.0	25.0	26.0	3.5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2.5	17.5	32.5	22.5	25.0	3.5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4.5	13.6	25.0	22.7	34.1	3.68
	읍/면 지역	(16)	6.3	12.5	37.5	37.5	6.3	3.2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8.3	16.7	58.3	16.7	3.83
	공무원	(36)	8.3	25.0	27.8	19.4	19.4	3.1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3.7	11.1	29.6	22.2	33.3	3.7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33.3	33.3	33.3	4.00
	연구자	(18)	0.0	11.1	44.4	11.1	33.3	3.67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8	15.4	26.9	26.9	26.9	3.58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0.0	8.7	26.1	28.3	37.0	3.9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0.0	11.1	22.2	33.3	33.3	3.89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6	9.2	27.6	28.9	31.6	3.78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0.0	18.2	36.4	45.5	4.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0.0	0.0	15.0	85.0	4.85
	문화지구	(8)	0.0	12.5	12.5	25.0	50.0	4.13
	해당없음	(7)	14.3	14.3	42.9	14.3	14.3	3.00

〈부록 표 2-2-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책 효과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정책 인지도 3,4,5번 응답자 77명, 단위 : %, 점)

		사례수	도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도시 발전 기여도는 보통이다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도시 발전에 매우 기여했다	5점 평균
전체		(81)	2.5	18.5	45.7	25.9	7.4	3.17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32)	3.1	18.8	50.0	21.9	6.3	3.09
	일반 시·도의 동 지역	(36)	0.0	16.7	44.4	27.8	11.1	3.33
	읍/면 지역	(13)	7.7	23.1	38.5	30.8	0.0	2.92
직업	교수 및 강사	(11)	0.0	18.2	54.5	27.3	0.0	3.09
	공무원	(24)	4.2	20.8	41.7	25.0	8.3	3.13
	문화관련 기관 직원	(23)	4.3	17.4	39.1	26.1	13.0	3.26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16.7	66.7	16.7	0.0	3.00
	연구자	(16)	0.0	18.8	43.8	31.3	6.3	3.25
	기타	(1)	0.0	0.0	100.0	0.0	0.0	3.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1)	0.0	19.0	42.9	33.3	4.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2)	2.4	14.3	45.2	31.0	7.1	3.2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2)	0.0	12.5	40.6	37.5	9.4	3.44	
법정 문화도시 사업	(67)	3.0	13.4	47.8	26.9	9.0	3.25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0.0	45.5	45.5	0.0	3.2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15.0	35.0	40.0	10.0	3.45	
문화지구	(7)	0.0	14.3	28.6	57.1	0.0	3.43	
해당없음	(5)	0.0	60.0	40.0	0.0	0.0	2.40	

〈부록 표 3-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순위)(1)

(단위 : %)

		사례수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
전체		(100)	24.0	22.0	18.0	12.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40)	32.5	22.5	20.0	7.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0.5	20.5	13.6	15.9
	읍/면 지역	(16)	12.5	25.0	25.0	12.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8.3	33.3	16.7	16.7
	공무원	(36)	11.1	22.2	27.8	8.3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4.4	22.2	14.8	7.4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33.3	0.0	0.0	16.7
	연구자	(18)	22.2	22.2	11.1	22.2
	기타	(1)	100.0	0.0	0.0	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9.2	34.6	7.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32.6	23.9	19.6	4.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7.8	27.8	11.1	16.7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7.6	23.7	17.1	9.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27.3	36.4	0.0	18.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30.0	30.0	5.0	15.0	
문화지구	(8)	0.0	25.0	0.0	25.0	
해당없음	(7)	0.0	14.3	28.6	14.3	

〈부록 표 3-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순위)(2)

(단위 : %)

		사례수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창조 인력 발굴 및 지원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전체		(100)	11.0	7.0	5.0	1.0	0.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10.0	0.0	5.0	2.5	0.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11.4	13.6	4.5	0.0	0.0
	읍/면 지역	(16)	12.5	6.3	6.3	0.0	0.0
직업	교수 및 강사	(12)	25.0	0.0	0.0	0.0	0.0
	공무원	(36)	13.9	5.6	11.1	0.0	0.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0.0	7.4	3.7	0.0	0.0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50.0	0.0	0.0	0.0
	연구자	(18)	16.7	0.0	0.0	5.6	0.0
	기타	(1)	0.0	0.0	0.0	0.0	0.0
	해당없음	(7)	28.6	0.0	14.3	0.0	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1.5	7.7	0.0	0.0	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10.9	8.7	0.0	0.0	0.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8	11.1	0.0	2.8	0.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10.5	6.6	5.3	0.0	0.0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9.1	0.0	0.0	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15.0	5.0	0.0	0.0	0.0
	문화지구	(8)	37.5	12.5	0.0	0.0	0.0
해당없음	(7)	28.6	0.0	14.3	0.0	0.0	

〈부록 표 3-1-3〉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2+3순위)(1)

(단위 : %)

		사례수	지역 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확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 자원 발굴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전체		(100)	56.0	43.0	44.0	42.0	38.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55.0	45.0	50.0	40.0	37.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65.9	38.6	34.1	45.5	38.6
	읍/면 지역	(16)	31.3	50.0	56.3	37.5	37.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58.3	58.3	41.7	41.7	41.7
	공무원	(36)	41.7	41.7	52.8	38.9	36.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66.7	37.0	44.4	40.7	48.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66.7	16.7	50.0	33.3	33.3
	연구자	(18)	61.1	55.6	27.8	50.0	27.8
	기타	(1)	100.0	0.0	0.0	100.0	0.0
	해당없음	(7)	28.6	28.6	71.4	57.1	42.9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46.2	53.8	38.5	46.2	38.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67.4	43.5	43.5	34.8	43.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61.1	52.8	38.9	47.2	25.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61.8	42.1	43.4	39.5	38.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45.5	81.8	36.4	36.4	36.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5.0	50.0	45.0	40.0	45.0
	문화지구	(8)	50.0	62.5	50.0	37.5	37.5
해당없음	(7)	28.6	28.6	71.4	57.1	42.9	

〈부록 표 3-1-4〉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2+3순위)(2)

(단위 : %)

		사례수	창조인력 발굴 및 지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역 일자리창출
전체		(100)	35.0	21.0	15.0	6.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27.5	25.0	17.5	2.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40.9	20.5	9.1	6.8
	읍/면 지역	(16)	37.5	12.5	25.0	12.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16.7	8.3	33.3	0.0
	공무원	(36)	25.0	38.9	13.9	11.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44.4	7.4	7.4	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100.0	0.0	0.0	0.0
	연구자	(18)	27.8	22.2	22.2	5.6
	기타	(1)	100.0	0.0	0.0	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42.3	15.4	19.2	0.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43.5	15.2	4.3	4.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36.1	16.7	16.7	5.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8.2	19.7	11.8	5.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36.4	9.1	18.2	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45.0	10.0	5.0	5.0
	문화지구	(8)	37.5	12.5	0.0	12.5
	해당없음	(7)	0.0	28.6	28.6	14.3

〈부록 표 3-1-5〉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202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자치 기반 확보)

(단위 : %)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11.0	50.0	24.0	13.0	2.0	2.45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12.5	42.5	25.0	17.5	2.5	2.5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11.4	50.0	22.7	13.6	2.3	2.45
	읍/면 지역	(16)	6.3	68.8	25.0	0.0	0.0	2.1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41.7	33.3	16.7	8.3	2.92
	공무원	(36)	8.3	36.1	27.8	25.0	2.8	2.78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14.8	59.3	22.2	3.7	0.0	2.15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16.7	66.7	0.0	16.7	0.0	2.17
	연구자	(18)	16.7	61.1	22.2	0.0	0.0	2.06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0.0	61.5	23.1	11.5	3.8	2.5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8.7	52.2	23.9	13.0	2.2	2.4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13.9	38.9	30.6	13.9	2.8	2.5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11.8	43.4	27.6	14.5	2.6	2.5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63.6	27.3	0.0	9.1	2.5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0	45.0	30.0	15.0	5.0	2.70
	문화지구	(8)	0.0	62.5	12.5	12.5	12.5	2.75
	해당없음	(7)	28.6	71.4	0.0	0.0	0.0	1.71

〈부록 표 3-1-6〉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적정성)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13.0	44.0	35.0	8.0	-	2.38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12.5	37.5	40.0	10.0	-	2.4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9.1	50.0	31.8	9.1	-	2.41
	읍/면 지역	(16)	25.0	43.8	31.3	0.0	-	2.06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66.7	16.7	16.7	-	2.50
	공무원	(36)	11.1	36.1	44.4	8.3	-	2.5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18.5	33.3	40.7	7.4	-	2.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33.3	50.0	16.7	-	2.83
	연구자	(18)	22.2	61.1	16.7	0.0	-	1.94
	기타	(1)	0.0	100.0	0.0	0.0	-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9.2	34.6	42.3	3.8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10.9	56.5	28.3	4.3	-	2.26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13.9	38.9	33.3	13.9	-	2.47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10.5	46.1	32.9	10.5	-	2.43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27.3	36.4	27.3	9.1	-	2.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10.0	40.0	40.0	10.0	-	2.50	
문화지구	(8)	12.5	75.0	12.5	0.0	-	2.00	
해당없음	(7)	28.6	42.9	28.6	0.0	-	2.00	

〈부록 표 3-1-7〉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 필요)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	5.0	18.0	40.0	37.0	4.09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	10.0	22.5	37.5	30.0	3.8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2.3	15.9	38.6	43.2	4.23
	읍/면 지역	(16)	-	0.0	12.5	50.0	37.5	4.25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25.0	25.0	33.3	16.7	3.42
	공무원	(36)	-	0.0	8.3	47.2	44.4	4.36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7.4	11.1	33.3	48.1	4.22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33.3	50.0	16.7	3.83
	연구자	(18)	-	0.0	33.3	38.9	27.8	3.94
	기타	(1)	-	0.0	100.0	0.0	0.0	3.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0.0	26.9	42.3	30.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2.2	15.2	34.8	47.8	4.2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5.6	19.4	36.1	38.9	4.08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5.3	14.5	38.2	42.1	4.17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9.1	9.1	45.5	36.4	4.0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10.0	20.0	20.0	50.0	4.10	
문화지구	(8)	-	0.0	12.5	37.5	50.0	4.38	
해당없음	(7)	-	14.3	28.6	28.6	28.6	3.71	

〈부록 표 3-1-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음)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5.0	44.0	39.0	12.0	-	2.58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35.0	45.0	12.5	-	2.63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3	54.5	34.1	9.1	-	2.50
	읍/면 지역	(16)	6.3	37.5	37.5	18.8	-	2.6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58.3	33.3	8.3	-	2.50
	공무원	(36)	2.8	27.8	44.4	25.0	-	2.92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11.1	40.7	48.1	0.0	-	2.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66.7	0.0	33.3	-	2.67
	연구자	(18)	5.6	61.1	33.3	0.0	-	2.28
	기타	(1)	0.0	100.0	0.0	0.0	-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8	53.8	26.9	15.4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2	43.5	45.7	8.7	-	2.6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8	44.4	47.2	5.6	-	2.5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2.6	40.8	44.7	11.8	-	2.66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63.6	27.3	0.0	-	2.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45.0	45.0	10.0	-	2.65
	문화지구	(8)	0.0	50.0	50.0	0.0	-	2.50
	해당없음	(7)	28.6	57.1	0.0	14.3	-	2.00

〈부록 표 3-1-9〉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 공모사업으로 추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9.0	30.0	27.0	30.0	4.0	2.90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27.5	30.0	32.5	2.5	2.9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9.1	27.3	29.5	29.5	4.5	2.93
	읍/면 지역	(16)	12.5	43.8	12.5	25.0	6.3	2.6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25.0	33.3	41.7	0.0	3.17
	공무원	(36)	5.6	33.3	25.0	27.8	8.3	3.00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14.8	37.0	25.9	18.5	3.7	2.59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16.7	0.0	16.7	66.7	0.0	3.33
	연구자	(18)	11.1	27.8	27.8	33.3	0.0	2.83
	기타	(1)	0.0	0.0	100.0	0.0	0.0	3.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5.4	26.9	23.1	26.9	7.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10.9	21.7	34.8	28.3	4.3	2.93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5.6	25.0	36.1	30.6	2.8	3.00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9.2	26.3	31.6	28.9	3.9	2.92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18.2	36.4	36.4	0.0	3.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0	20.0	35.0	35.0	5.0	3.15
	문화지구	(8)	0.0	25.0	37.5	25.0	12.5	3.25
	해당없음	(7)	0.0	57.1	0.0	42.9	0.0	2.86

〈부록 표 3-1-1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할 때 기본 콘텐츠 분야 설정 필요)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8.0	25.0	11.0	42.0	14.0	3.29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20.0	12.5	47.5	12.5	3.3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9.1	34.1	11.4	36.4	9.1	3.02
	읍/면 지역	(16)	6.3	12.5	6.3	43.8	31.3	3.81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16.7	0.0	75.0	8.3	3.75
	공무원	(36)	2.8	16.7	13.9	44.4	22.2	3.67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18.5	29.6	14.8	29.6	7.4	2.78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33.3	50.0	0.0	0.0	16.7	2.17
	연구자	(18)	0.0	27.8	11.1	50.0	11.1	3.44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15.4	15.4	7.7	38.5	23.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13.0	32.6	10.9	30.4	13.0	2.9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8.3	30.6	11.1	38.9	11.1	3.14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9.2	25.0	13.2	38.2	14.5	3.2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18.2	27.3	0.0	45.5	9.1	3.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0	25.0	10.0	35.0	25.0	3.50	
문화지구	(8)	12.5	0.0	0.0	62.5	25.0	3.88	
해당없음	(7)	0.0	42.9	0.0	42.9	14.3	3.29	

〈부록 표 3-1-1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4.0	25.0	27.0	31.0	13.0	3.2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22.5	22.5	40.0	7.5	3.1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0.0	29.5	31.8	25.0	13.6	3.23
	읍/면 지역	(16)	6.3	18.8	25.0	25.0	25.0	3.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41.7	16.7	33.3	8.3	3.08
	공무원	(36)	2.8	11.1	44.4	27.8	13.9	3.39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33.3	14.8	29.6	14.8	3.1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50.0	16.7	16.7	16.7	3.00
	연구자	(18)	5.6	16.7	22.2	44.4	11.1	3.39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0.0	26.9	23.1	38.5	11.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0.0	30.4	26.1	32.6	10.9	3.24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2.8	36.1	22.2	30.6	8.3	3.0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5.3	23.7	26.3	34.2	10.5	3.21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45.5	9.1	27.3	18.2	3.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40.0	20.0	40.0	0.0	3.00	
문화지구	(8)	0.0	25.0	12.5	50.0	12.5	3.50	
해당없음	(7)	0.0	57.1	14.3	14.3	14.3	2.86	

〈부록 표 3-1-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을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10.0	25.0	30.0	27.0	8.0	2.98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20.0	22.5	22.5	27.5	7.5	2.80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4.5	29.5	38.6	18.2	9.1	2.98
	읍/면 지역	(16)	0.0	18.8	25.0	50.0	6.3	3.44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16.7	33.3	33.3	16.7	3.50
	공무원	(36)	0.0	22.2	33.3	36.1	8.3	3.31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25.9	29.6	29.6	11.1	3.7	2.3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66.7	16.7	16.7	0.0	2.50
	연구자	(18)	16.7	11.1	27.8	33.3	11.1	3.11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0.0	15.4	34.6	38.5	11.5	3.4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8.7	32.6	26.1	23.9	8.7	2.91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8.3	30.6	30.6	25.0	5.6	2.89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10.5	26.3	28.9	25.0	9.2	2.96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18.2	27.3	45.5	9.1	3.4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0	25.0	25.0	25.0	20.0	3.30
	문화지구	(8)	0.0	12.5	37.5	37.5	12.5	3.50
해당없음	(7)	14.3	57.1	0.0	14.3	14.3	2.57	

〈부록 표 3-1-13〉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행정조직이 아닌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에 일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4.0	7.0	20.0	39.0	30.0	3.8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10.0	20.0	37.5	25.0	3.63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2.3	4.5	22.7	40.9	29.5	3.91
	읍/면 지역	(16)	0.0	6.3	12.5	37.5	43.8	4.1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8.3	33.3	41.7	16.7	3.67
	공무원	(36)	2.8	5.6	22.2	38.9	30.6	3.89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3.7	7.4	7.4	40.7	40.7	4.07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16.7	16.7	16.7	50.0	4.00
	연구자	(18)	11.1	5.6	22.2	44.4	16.7	3.50
	기타	(1)	0.0	0.0	100.0	0.0	0.0	3.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7.7	3.8	26.9	30.8	30.8	3.7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6.5	6.5	21.7	39.1	26.1	3.7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5.6	11.1	13.9	41.7	27.8	3.75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9	3.9	23.7	35.5	32.9	3.89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9.1	0.0	36.4	36.4	18.2	3.5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10.0	10.0	25.0	30.0	25.0	3.50
	문화지구	(8)	12.5	0.0	50.0	25.0	12.5	3.25
해당없음	(7)	14.3	28.6	0.0	42.9	14.3	3.14	

〈부록 표 3-1-14〉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3.0	34.0	28.0	22.0	13.0	3.08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7.5	30.0	25.0	22.5	15.0	3.08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0.0	47.7	34.1	18.2	0.0	2.70
	읍/면 지역	(16)	0.0	6.3	18.8	31.3	43.8	4.13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33.3	33.3	33.3	0.0	3.00
	공무원	(36)	2.8	27.8	27.8	16.7	25.0	3.33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7.4	25.9	29.6	22.2	14.8	3.1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50.0	16.7	33.3	0.0	2.83
	연구자	(18)	0.0	50.0	27.8	22.2	0.0	2.72
	기타	(1)	0.0	100.0	0.0	0.0	0.0	2.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8	34.6	23.1	30.8	7.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2	41.3	28.3	21.7	6.5	2.8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5.6	44.4	30.6	19.4	0.0	2.64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3.9	32.9	26.3	23.7	13.2	3.09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27.3	36.4	27.3	9.1	3.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0.0	50.0	20.0	30.0	0.0	2.80
	문화지구	(8)	0.0	12.5	25.0	62.5	0.0	3.50
	해당없음	(7)	0.0	28.6	42.9	14.3	14.3	3.14

〈부록 표 3-1-15〉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민간 지원 방향으로 추진)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1.0	13.0	22.0	49.0	15.0	3.64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	(40)	2.5	12.5	25.0	47.5	12.5	3.5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0.0	15.9	27.3	40.9	15.9	3.57
	읍/면 지역	(16)	0.0	6.3	0.0	75.0	18.8	4.06
직업	교수 및 강사	(12)	0.0	16.7	25.0	33.3	25.0	3.67
	공무원	(36)	2.8	19.4	13.9	50.0	13.9	3.53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0.0	3.7	29.6	44.4	22.2	3.85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0.0	0.0	0.0	83.3	16.7	4.17
	연구자	(18)	0.0	16.7	33.3	50.0	0.0	3.33
	기타	(1)	0.0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3.8	11.5	26.9	46.2	11.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2.2	13.0	19.6	47.8	17.4	3.65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0.0	13.9	33.3	38.9	13.9	3.53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1.3	13.2	21.1	48.7	15.8	3.64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0.0	9.1	27.3	45.5	18.2	3.7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5.0	15.0	25.0	40.0	15.0	3.45
	문화지구	(8)	0.0	0.0	37.5	50.0	12.5	3.75
	해당없음	(7)	0.0	28.6	14.3	42.9	14.3	3.43

〈부록 표 3-1-16〉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단위 : %, 점)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	-	10.0	16.0	47.0	27.0	3.91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외 동지역	(40)	-	7.5	12.5	47.5	32.5	4.05
	일반 시·도의 동 지역	(44)	-	15.9	18.2	47.7	18.2	3.68
	읍/면 지역	(16)	-	0.0	18.8	43.8	37.5	4.19
직업	교수 및 강사	(12)	-	8.3	8.3	66.7	16.7	3.92
	공무원	(36)	-	13.9	19.4	44.4	22.2	3.75
	문화관련 기관 직원	(27)	-	7.4	18.5	29.6	44.4	4.11
	문화 기획 관련 전문가	(6)	-	0.0	0.0	50.0	50.0	4.50
	연구자	(18)	-	11.1	16.7	61.1	11.1	3.72
	기타	(1)	-	0.0	0.0	100.0	0.0	4.00
참여 정책 사업 (복수 응답)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26)	-	7.7	23.1	38.5	30.8	3.9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6)	-	10.9	8.7	50.0	30.4	4.0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36)	-	11.1	8.3	44.4	36.1	4.06
	법정 문화도시 사업	(76)	-	7.9	17.1	43.4	31.6	3.99
	동아시아 문화도시	(11)	-	9.1	9.1	45.5	36.4	4.0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	-	10.0	20.0	35.0	35.0	3.95
	문화지구	(8)	-	0.0	12.5	62.5	25.0	4.13
해당없음	(7)	-	42.9	14.3	42.9	0.0	3.00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 제3절, 제4장, 제5장

### 공동연구

김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제2장 제3절, 제3장 제1절, 제2절

### 연구 자문

안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제2장 제3절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제4장 제3절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제4장 제3절

### 연구 참여

손유진 한국외국어대학 박사과정: 제2장 제1절, 제2절

## 문화 도시 정책사업 비교 분석

---

발행인 류광훈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0월 21일

발행일 2022년 10월 2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33-8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5>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노수경·김수경(2022), 문화 도시 정책사업 비교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15>

